

# 2022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 발간사



지난 2021년,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변곡점에 들어섰습니다.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와 협상의 긴 교착을 이어 가던 남·북·미는 지난해 1월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등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유동적인 정세의 전환기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낱같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기 위한 집중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한미는 긴밀한 조율과 협의를 통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화와 외교의 해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만나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제재 유연화와 평화협력의 가능성을 동시에 찾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추동하는 능동적인 노력도 이어나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교착된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관련국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 추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한미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서, 북한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년 이상 단절되어 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2021년 7월 27일에 이어 10월 4일,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남북 간 영상회담 시스템을 갖출 것을 북측에 제의하는 한편, 여러 계기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의제로든” 북측과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발신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비정치, 비군사적 상생의 의제들에 있어 남북 협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현을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출범시키고, 「남북교류협력법」에 지자체의 교류협력 주체성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유엔총회를 통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남, 북, 미, 중 등 당사국 뿐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의회 등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지지와 북한 방문에 대한 뜻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같은 시기, DMZ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가 로마에서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깊은 울림을 전 세계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나가는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지난 4년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 비전을 합의문으로 담아낸 「통일국민협약(안)」을 지난해 6월 최종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미래 한반도의 주인인 청년층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30의 눈높이에 맞춘 평화·통일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SNS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도 전개했습니다. 「DMZ 평화의 길」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경험하는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프로그램도 본격화했습니다. 남북출입사무소에는 DMZ내 최초의 평화통일문화공간을 개관하였고, 한강하구에서는 민간선박의 시범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는 DMZ와 접경 지역의 평화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021년, 비록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은 멈춰있었지만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관여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우리 주도적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걸음이 대화와 협력 재개로 이어지지 않은 채 2022년을 맞이하게 된 한반도 정세는 지금 다시 중요한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2017년 이후로 중단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모라토리엄 폐기 검토까지도 언급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남·북·미가 서로의 노력을 통해 마련했던 대화와 협상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대결과 갈등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남북 모두에게 생존과 번영의 중차대한 역사적 기로임을 자각하고, 조속히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평화가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떠올립니다. 당면한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는 일관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평화에 대한 인내와 의지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차분하고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통일부장관 **이 인 영**

## 발간사

### 제1장

### 한반도 정책

<b>제1절 한반도 정책 추진</b>	<b>17</b>
① 추진방향	17
② 주요 성과	19
<b>제2절 비핵화와 평화 구축</b>	<b>22</b>
①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노력	22
②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24
<b>제3절 통일공감대 확산</b>	<b>26</b>
① 「통일국민협약」 추진	26
② 통일+센터 운영 및 확대 추진	35
③ 민간 협력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	37
<b>제4절 국제사회와의 협력</b>	<b>46</b>
①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	46
②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50

### 제2장

### 남북교류협력

<b>제1절 남북 경제교류</b>	<b>64</b>
① 당국 간 합의사항 이행	64
②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	70
<b>제2절 남북 사회문화교류</b>	<b>75</b>
① 문화유산 교류	75
② 종교 및 사회단체·학술·문화예술 교류	77
③ 남북 체육교류	79
<b>제3절 남북 개발지원협력</b>	<b>81</b>
① 당국 간 개발협력	81
② 민간단체·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노력	82
③ 민간 협력체계 구축	82
<b>제4절 DMZ 평화적 이용</b>	<b>85</b>
①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85
② DMZ 평화적 이용 여건 조성	86
③ 평화통일문화공간(DMZ Platform) 조성 및 운영	91

<b>제5절 개성공단 기업 지원</b>	<b>95</b>
①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노력	95
② 개성공단 기업 소통 강화	99
③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강화	100
<b>제6절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b>	<b>103</b>
① 법·제도 개선	103
② 민간·지자체 교류협력 사업 지원	104
③ 분권·협치 교류협력 기반 조성	105
④ 남북출입경 관리	107

### 제3장 인도적 협력

<b>제1절 인도협력</b>	<b>115</b>
① 인도협력 추진 노력	115
② 인도협력 추진 역량 강화	120
<b>제2절 이산가족</b>	<b>125</b>
① 이산가족 현황	125
②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126
③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131
<b>제3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b>	<b>132</b>
① 현황	132
②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133
<b>제4절 북한인권</b>	<b>136</b>
①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추진	136
②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	138
③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39

### 제4장 남북대화

<b>제1절 남북대화 추진</b>	<b>147</b>
<b>제2절 남북회담 역량 강화</b>	<b>149</b>
① 남북대화 체계 구축	149
② 남북회담 상시 대비 및 전문성 강화	150
③ 남북대화 50년 기념 및 대국민 소통 강화	150

## 제5장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158
제2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159
①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159
② 우리 사회 이해 교육	160
③ 직업교육관 운영 및 진로지도	161
④ 하나둘 학교 운영	163
⑤ 하나의원 운영	164
⑥ 마음건강센터 운영	166
⑦ 화천 분소 운영	168
⑧ 참·마·실 교육과 '애프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171
제3절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174
① 가족관계등록 및 주거 지원	174
② 정착금 지원	174
제4절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176
① 자립지원	176
②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180
③ 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183
④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소통 강화	186
제5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협력체계 구축	191
① 지자체와 민간 역할 제고	191
② 하나센터 기반 강화	194

## 제6장

### 통일교육

제1절 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운영	203
① 통일교육과정 운영	203
②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208
③ 통일교육주간 운영	215
④ 통일교육 방향 정립 및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218
⑤ 평화·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219
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222
①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222
②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223
③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224

<b>제3절 사회통일교육 지원</b>	<b>227</b>
①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회통일교육 실시	227
② 통일교육위원 교육 활동 및 통일교육 민간단체 거버넌스 구축	229
③ 통일관 운영	231
④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232
⑤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233
<b>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b>	<b>236</b>
① 개황	236
②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개선	236

## 제7장 정책 추진 기반 강화

<b>제1절 북한 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b>	<b>246</b>
① 북한정보포털 운영	246
② 북한자료센터 운영	247
<b>제2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b>	<b>250</b>
①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50
② 통일법제 구축	252
<b>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b>	<b>255</b>
① 남북협력기금 수입	255
② 남북협력기금 지출	256
③ 2021년 사업비 집행 실적	258

## 부 록 APPENDIX

<b>I. 남북관계 주요 일지</b>	<b>262</b>
<b>II. 남북관계 주요 통계</b>	<b>274</b>
①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274
① 남북 왕래 인원 현황	274
②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275
③ 남북 차량 왕래 현황	275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276
⑤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 출경 인원·차량 현황	277
② 남북교류협력 현황	278
① 남북교역액 현황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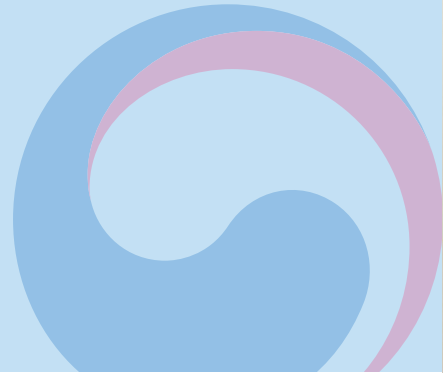
② 남북교역 건수 현황	279
③ 남북교역 품목수 현황	279
④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280
<b>3</b> 개성공단사업 현황	281
① 개성공단 입주 기업수 현황	281
②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281
③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282
<b>4</b>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283
①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283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284
<b>5</b> 남북회담 추진 현황	286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286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현황	286
<b>6</b>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287
① 북한이탈주민 입국 세부 현황	287
②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현황	290
③ 주택 알선 현황	290
④ 정착금 지급 현황	291
<b>7</b> 국립통일교육원 교육 실시 현황	294
<b>8</b>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수 현황	294
<b>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b>	296
① 기금 조성 실적	296
② 기금 사용 실적	298
<b>I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b>	300
<b>찾아보기(INDEX)</b>	303





# 01

## 한반도 정책



제1절 - 한반도 정책 추진

제2절 - 비핵화와 평화 구축

제3절 - 통일공감대 확산

제4절 - 국제사회와의 협력



## 제1장

## 한반도 정책

2021년 정부는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21년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교착국면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더하여 1월의 북한 제8차 당대회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과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과 전염병 등 초국경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함께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고,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의 비전도 제시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한반도 평화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5월 21일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 존중 및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과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후에도 한미는 공동의 인도주의 협력 구상과 종전선언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는 등 대화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였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근본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3년 전 봄날’을 언급 하였다. 9월 29일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일관된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졌다. 남북 양 정상은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관계 회복을 논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20년 6월 북한에 의해 단절되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1년 1개월만인 7월 27일 복원되었다. 이에 정부는 7월 29일 북한에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영상회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이유로 8월 10일부터 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남북통신연락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0월 4일 재가동되어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 남북대화도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편, 정부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도 지속 하였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0여 회의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실시 하였고 2021년 6월 26일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인천에 설치된

통일+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평화와 통일 관련 지역 내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소통 노력을 지속하였다.

## 제1절

## 한반도 정책 추진

## 1 추진방향

정부는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화와 상생,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1년 업무추진 기본 방향을 정립하였다.



## 2021년 업무추진 방향

## 대화와 상생,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에 입각하여 정세 변화 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 남북관계 국면 전환
- 남북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여건 조성
- 통일·대북정책 기반 강화 노력

- 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 ②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 ③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④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 지역 평화 증진
- ⑤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세부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진전시키고,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추진하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비무장지대(이하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과 더불어 접경 지역의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등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과제도 포함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관계 추진 구상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제시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평화’가 곧 ‘상생’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협력,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에서의 남북협력을 제안하였다. 또한, 남북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의 전체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과 2020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2021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진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 2021년 신년사(1.11.)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 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8.15.)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 …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변영에 기여 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2 주요 성과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반도 정세는 추가적으로 악화 되지 않고 정세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줄어들면서 남북·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우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지 않았다. 북한이 2018년 4월에 공표한 대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는 가운데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전반적으로 잘 이행함으로써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다. 북한이 세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한 차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고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높은 수준의 긴장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7월 27일 남북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 2020년 6월 남북통신연락선이 단절된 이후 1년 1개월여 만이었다.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코로나19 등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할 수 있도록 영상회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북한 측에 제안하였다.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초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증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 간 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에 의해 잠시 단절되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10월 4일 복원됨으로써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정부는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대북정책을 조율함으로써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외교에 기반한 대북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발표하였다. 한미의 대화와 외교를 우선시하는 대북 기조는 5월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한미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였고, 이후에도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고,

대화가 시작되면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의사가 없음을 계기마다 밝혀왔다.

또한, 한미는 정치·군사·안보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된 인도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북 인도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한미 정상 공동성명(5.21.)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대화과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 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 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 제2절

## 비핵화와 평화 구축

## 1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노력

2021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향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답보 상태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11일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임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전한 코로나19 대유행과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해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전쟁 불용'·'상호 간 안전보장'·'공동번영'의 원칙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며 대화와 협력 복원을 추진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으나, 북미관계의 교착국면은 지속되었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 등을 통해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들의 적대시 정책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적대시 정책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였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한미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남북대화과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을 위해 방북을 요청했고 교황은 북한이 초청한다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어 10월 30일에는 G20 정상회의 계기로 성사된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8월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영변에서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하고, 5MWe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핵무기 관련 활동을 자제할 것과 대화와 외교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6월 13일 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함께 북한에 대한 관여와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11월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외교 공간에서도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외교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 2]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였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재확인했다.

###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1.)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10.1.)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추구 원칙을 강조하는 등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었고,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과 함께 한미 간 긴밀한 소통 의지를 강조하였다. 5월 20일 미국 하원에서는 브래드 셔먼 의원 등이 한국전쟁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하였고, 11월 5일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3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반면에 12월 7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서한을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11월 29일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장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노력을 프랑스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북한은 9월 2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 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9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중국은 9월 22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계속해서 마땅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제3절

## 통일공감대 확산

## 1 「통일국민협약」 추진

정부는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추진했다. 「통일국민협약」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총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지역별·권역별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통일국민협약」의 목표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남남갈등을 완화하고 통일정책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주도·정부지원' 원칙하에 「통일국민협약」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2021년에는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2020년에 마련한 「통일국민협약안 (기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였다.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6월에 총 네 차례에 걸쳐 비대면 화상회의로 사회적 대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 지역, 이념 성향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된 102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시민참여단은 2021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할당하고, 이념 성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최근 3개월간 정치 성향 평균에 맞게 선정하였다.



2021년 사회적 대화에서는 「통일국민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2020년에 제시된 ‘한반도 미래상과 그 실현 방안’을 의제로 삼아 숙의 토론을 실시하였다. 1일차에는 2020년 마련된 기초안에 대해 수정·보완 논의를 하고, 향후 작성될 「통일국민협약안」의 문단 구성 요소를 채택하였으며, 2~3일차에는 1일차에 마련된 문장안의 순서를 정하고 협약안에 들어갈 문장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문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제위원회 6명(진보3·보수3)과 시민참여단 분임대표 10명으로 이루어진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협약문(안)으로 작성되었다. 마지막 4일차에는 협약안을 정리하고, 통일비전시민회의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안(최종안)」을 승인하였다.



#### 2021년 사회적 대화 개최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역	개최일	참여자	토론 방식	의제
종합 사회적 대화 (4회)	서울 (중계: 남북통합 문화센터)	6. 5.	103	온·오프라인 연계	1. 한반도 미래상 2.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6.12.	102		
		6.13.	102		
		6.26.	102		
총 4회			409		

「통일국민협약안」은 <전문>,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그리고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까지 총 16개의 시민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제시되었고, 제2장은 이를 이루기 위한 실현 과정과 방법으로 국민 참여와 합의 형성,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등 총 8개로 구분된 세부 분야별 과제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참여단은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정부·지자체·국회에 대한 권고 사항을 총 22개항으로 정리하고 사회적 대화가 남북 간 대화로 발전되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채택된 「통일국민협약안」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권고」를 통일부장관에게 전달(7.5.) 하였으며, 통일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7.8.)과 국회의장(9.23.)에게 보고하였다.



종합 사회적 대화(6.5.~26.)



「통일국민협약안」 전달식(7.5.)

정부는 통일·대북정책 분야 최초의 사회협약안인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TV 다큐멘터리 「우리 대화 할까요?」(KBS, 9.12.방영)를 제작하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속의 토론을 통해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등을 상세히 알렸다.

또한 청년세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나아가 2030세대의 관심사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진영의 의견을 듣고 상호 토론하는 「2030세대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시민합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한국적 사회적 대화 모델로 소개하기 위해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11.24.) 하여 국제 학계의 관심과 지지를 견인 하였다.



「우리 대화 할까요?」(9.12.)



「통일부장관과의 대화」(10.22.)



「2030세대 토크 콘서트」(11.18.)



## 통일국민협약안

통일국민협약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2018년 이래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수천명의 시민과 활동가, 교사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의제개발, 발제, 질의응답과 자문에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이 오랜 시간의 숙의를 통하여 스스로 마련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 통일국민협약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 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전국의 시민참여단은 2020년 7월 6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4개 권역별 예비 대화와 총 8일간의 전국 종합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과정과 방법에 관해 숙의하여 다음의 협약안을 채택한다.

###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험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

###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동교육을 실시한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김인성  
김경민  
정강진  
이강산

##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권고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여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한 시민참여단은 이후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숙의하여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와 계층을 다양화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확대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한다.

통일부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플랫폼을 만든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정부는 통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국회에 대한 권고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만든다.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국회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 비정부기구에 대한 권고

비정부기구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시민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서 다양한 입장과 주제를 다룬다.  
비정부기구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 국민에게 드리는 권고

국민은 통일 교육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국민은 통일국민협약안이 잘 반영되는지 감시한다.  
국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 남북간 대화로의 발전에 관한 권고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남북간의 대화로 발전시킨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정인성  
김경민  
정강진  
이강산



## ② 통일+센터 운영 및 확대 추진

정부는 통일교육, 정착지원 외에 남북교류협력, 북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역 내 평화·통일 관련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9월 시범적으로 인천통일+센터를 개소하였다.

2021년 인천통일+센터는 지역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지역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인천지역 내 소통·협업 네트워크 운영을 확대하였다. 매주 인천하나센터, 경인통일교육센터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호 업무 공유 및 협업을 추진하였다.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인천시교육청 인천남정평화교육원 설립기획단 및 추진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다.

인천통일+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참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인천시·옹진군과 협업하여 도서지역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를 개최하였고 백령도·대청도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천시교육청과는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교육, 청소년 통일미래 체험교육을 함께 진행하였다.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과의 협업을 통해 총 10회에 걸쳐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 1,477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천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이음 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게 하였다.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교육  
(인천시교육청 협업, 6.9.)



도시지역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  
(인천시·웅진군 협업, 6.18.)

인천통일+센터는 지역 내 통일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행사 및 공모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인천지역 문화행사 「2021 평화로 인천」(5.24.~6.11.)을 개최하여 명사초청 특강, 마음열기 공연, 인천지하철 1호선 사진전 「한강하구 평화와 생명의 날갯짓」 등을 진행하였다. 이외에 부평미군기지 반환구역 '캠프마켓'에서 「한반도의 야생화」 사진전, 인천공항철도에서 「한라에서 백두-움직이는 갤러리」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인천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광고 홍보 공모전도 진행하였다.



마음열기 공연  
(유튜브 생중계, 6.2.)



「한반도의 야생화」 사진전  
(부평 캠프마켓, 10.1.~17.)

인천통일+센터는 경인통일교육센터·인천하나센터와 협업하여 기존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경인통일교육센터와 협업

하여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손편지를 전달하는 「마음잇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평화·통일 관련 영상 상영 및 경인평화투어 지도 작성·배포 등을 진행하였다. 인천하나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모의면접 교육, 선배의 취업 성공 사례 특강 등 취업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비대면 체험활동 프로그램 「레-츠 평화로」 및 김장 행사 등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였다.

인천통일+센터가 시범센터로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의 거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2020년에 권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설치·확대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서 2021년에 호남권·강원권 통일+센터 설치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에는 충청권·경기권 통일+센터 설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 3] 민관 협력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

#### (1) 통일문화행사

정부는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비대면·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2021년 「통일문화행사」는 통일미래 세대인 2030세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이를 통해 평화와 통일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2030세대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음악·춤·미술 등을 「통일문화행사」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였으며,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환경에서도 쉽게 참여 가능한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2021년 3월에는 전문 래퍼 3인과 대국민 공모 방식을 통해 선발 된 2030

세대 참가자 6명이 참여한 「피-쓰, 내 소원은 평화」 프로젝트가 참가자들이 직접 작사한 ‘평화·통일’ 관련 노래를 부르며,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힙합 싸이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KBS, MBC 공영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등 제작 단계에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참가자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긴 완성된 뮤직비디오와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필름 등 총 12편의 영상을 통일부 SNS에 게시하였으며, 12월 말 기준 조회 수는 7만 8천여 회이다.

2021년 5월에는 제주지역 2030세대와 통일부장관이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소통하는 「청춘이 묻고 그리다, 대한민국 통일과 미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토크 콘서트는 통일부장관과 제주도에 거주 중인 2030세대 5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통해 제주지역 2030세대의 평화와 통일, 남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크 콘서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였고, 사전 홍보와 질문 모음, 영상 시청 이벤트 등을 통해 제주지역 2030세대 다수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통일부 SNS에 게시된 영상은 12월 말 기준 조회 수는 2만여 회이다.



「피-쓰, 내소원은 평화」 뮤직비디오



「청춘이 묻고 그리다, 대한민국 통일과 미래」  
토크 콘서트(5.31.)

2021년 6월에는 2030 예술가들과 함께 「평화를 속닥속닥」 라이브 토크쇼를 개최하였다. 2030세대 예술가들과 통일부장관이 평화에 대해 소통하고,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과 공연이 함께 어우러졌다. 라이브 토크쇼에서는 참가자들의 ‘평화의 바람’을 담은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과 라이브 토크쇼 영상 등 총 6편의 영상을 통일부 SNS에 게시하였으며, 12월 말 기준 조회 수는 10만 4천여 회이다.

2021년 10월에는 2030세대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댄스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평화로 피우다」 영상을 제작했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DMZ박물관, 제진역 등 접경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하여 분단과 통일, 평화를 영상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완성된 「평화로 피우다」 영상과 클립 등 총 4편의 영상을 통일부 SNS에 게시하였으며, 12월 말 기준 조회 수는 34만 6천여 회에 이른다.



「평화를 속닥속닥」 라이브 토크쇼(6.8.)



「평화로 피우다」 평화 댄스 영상

또한 영상을 시청한 2030세대가 영상 속 평화를 상징하는 주요 안무를 따라 하며, 개인의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댄스 챌린지 '#PeaceMile 챌린지'를 진행하였다. '#PeaceMile'은 Peace+Smile(피스+스마일)의 합성어로 '평화의 미소'를 뜻한다. 「평화로 피우다」영상과 「#PeaceMile 챌린지」를 통해 2030세대 누구나 SNS를 활용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갈등과 대립의 상징 'DMZ 철조망'을 평화의 상징인 '십자가'로 만드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DMZ 철조망, 평화가 되다」로 제작·방영하였다.



## (2) 국민과의 소통

통일부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www.unikorea.go.kr)와 SNS를 활용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통일부 주요 정책 및 보도자료를 이미지 형태로 109편을 제작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평화교실」, 「컬쳐 속 남북」, 「소원이야가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등의 카드 뉴스 시리즈 120편, 「우리가 대한민국 내일의 개척자」, 「오늘은 첫 출근」, 「이산가족 영상편지」 등의 정책홍보 영상 콘텐츠 28편 등 총 257편을 제작하여 한반도 평화 및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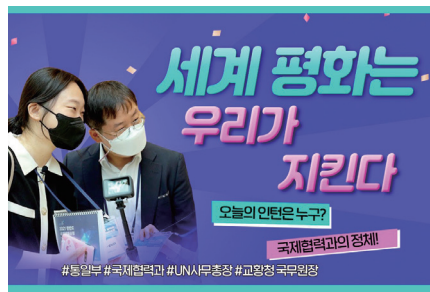
「우리가 대한민국 내일의 개척자」 정책홍보 영상



「평화교실」 카드 뉴스 시리즈



「컬쳐 속 남북」 카드 뉴스 시리즈



「오늘은 첫 출근」 영상 시리즈

또한 「탈북민 리얼 취업 성공기」, 웹 예능 영상 「통일 와이파이(시즌 2)」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사례를 담아내는 카드 뉴스 총 12편을 제작하여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웹툰 시리즈 「탈북민과 맞팔하기」를 통해 남북 언어 차이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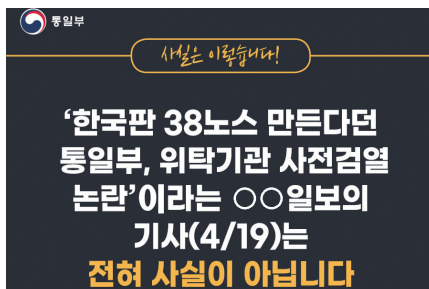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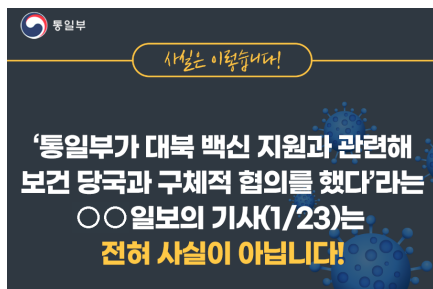


「탈북민 리얼 취업 성공기」 카드 뉴스 시리즈



「통일 와이파이(시즌 2)」 영상 시리즈

한편 통일정책에 대한 잘못된 기사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카드 뉴스 8편을 제작하여 통일부 홈페이지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안내하였다.



카드 뉴스

### (3)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

통일부는 2015년부터 음악과 영화 등을 포괄한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에는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 대회인 「통일로 가요」를 강원도 및 철원군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021 통일로 가요」에는 발라드, 힙합, 락, 퓨전국악 및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115개 음악팀이 응모하였다. 이 가운데 20개 팀을 1차 동영상 예심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이 20개 팀에 대해 강원도 양구 한반도섬에서 2차 실연 평가(9.16.)를 진행하여 최종 결선에 진출할 12개 팀을 선정하였다. 최종 결선에 진출한 12개 팀은 강원도 철원군 (구)노동당사 특설무대에서 결선 공연(9.28.)을 가졌다. 비대면과 대면(소규모 현장 참여)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된 결선 공연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현장에 참여하였다. 또한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500여 명이 시청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음악을 즐기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경연 대회가 되었다. 대상(통일부장관상)은 '레이지본'의 「옥류관」이, 최우수상(강원도지사상)은 '이훈주'의 「안주가는 꿈」 등 총 7곡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2021 통일로 가요」는 SBS음악채널 및 G1(강원방송)을 통해 결선 경연이 녹화·중계되었으며, 대상 수상팀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한반도 통일 염원 음악회」에 초대되어 공연하였다.





결선 공연(9.28.)



대상 수상팀 독일 공연(11.20.)

#### (4) 인터넷 통일방송(UniTV) 운영

통일부는 2011년부터 인터넷 통일방송(UniTV)을 운영하여 2030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하고자 노력했다. UniTV는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통일부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하고, 네이버TV캐스트, 카카오TV 등에 송출하고 있다.

UniTV는 정규 프로그램 「통일NOW」를 「통일 브리핑」, 「통일 현장」, 「통일 왓수다(시즌2)」로 구성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총 50편(세부 콘텐츠 총 150편)을 제작하였다.

「통일 브리핑」은 남북관계 및 통일 소식을 주로 전달하였고, 「통일 현장」은 정부와 민간의 통일 관련 행사와 활동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통일 왓수다(시즌2)」는 기존의 「광화문 필통」을 폐지·통합한 것으로, 전문 방송인이 통일·북한 관련 전문가 및 주요 인사와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로서의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하여 제작하였다.



「통일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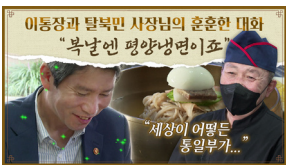
「통일 현장」



「통일 왓수다(시즌2)」

또한, 통일부장관을 친근감 있는 ‘통장’으로 설정하여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정부의 노력을 알리는 「안녕하세요! 통장입니다」를 계기마다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정규 브리핑과 달리 유튜브에 보다 적합한 톡톡 튀는 형식(그래픽 효과·ميم 삽입 등)의 정보 전달 프로그램인 「이주의 통통피셜」을 격주로, 남북의 연애 사고방식의 차이점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구성한 예능 프로그램 「런애연애(2020년 제작)」 6회분 등도 송출하였다.



「안녕하세요! 통장입니다」



「이주의 통통피셜」



「런애연애」

2021년 기획프로그램은 전년도의 우수한 콘텐츠는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정책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통일부 직원들과 그 자녀들, 연예인과 북한이탈주민, 전문 진행자와 청소년·청년세대 등이 참여하여 총 44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주요 콘텐츠

로는 「통일로 드루와(시즌2)」, 「7세대 쉬운 통일(시즌2)」, 「구해줘 잡스」 시리즈 등이 있다.

「통일로 드루와(시즌2)」는 1020세대가 차량에 탑승해 통일 관련 문제를 풀어가는 리얼 예능 퀴즈쇼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듣고 소통하는 콘텐츠이며, 「7세대 쉬운 통일(시즌2)」은 통일부 직원이 자녀에게 통일 및 북한 관련 단어를 쉽게 설명하여 미래세대의 이해를 높이는 콘텐츠로 제작·송출하였다. 이 밖에 「구해줘 잡스」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고민을 조명하고 통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단기연수 등을 통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였으며, 2022년 송출 예정이다.



「통일로 드루와(시즌2)」

「7세대 쉬운 통일(시즌2)」

「구해줘 잡스」

UniTV는 인터넷방송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공공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통일NOW」는 KTV국민방송(주 1회), 아리랑국제방송 TV(주 4회), 복지TV(주 3회)를 통해 매주 방송되며, 소비자TV, EyTV(실향민 전문 채널) 등을 통해서도 일부 콘텐츠가 송출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교육현장의 교사와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통일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UniTV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제4절

## 국제사회와의 협력

## 1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정부는 미·중·일·러, 유럽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국가를 방문하여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주요국 대화를 매년 추진해 왔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제한적 이나마 방한 인사와 주한 대사관 등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통일부는 미국 국무부와 대북정책에 관한 양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통일부차관과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실무급에서는 한미 국장급 협의를 수시 개최하면서, 한미 공동의 대북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연초부터 미국 아미 베라 하원 아태 소위원장(1.13.),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4.6.), 에드워드 마키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5.25.)과 연이어 화상회의를 갖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6월 22일과 8월 24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관련국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담대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당부하였다. 7월 22일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공동협력을 통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영준 통일부차관도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웬디 셔먼 부장관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고, 나아가 남·북·미 3자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한미 공동의 대북 협력 의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실무급에서는 미국 국무부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대북특별부대표)와 총 5차례(4.16. 화상, 6.23. 서울, 8.4. 워싱턴 D.C., 9.16. 서울, 11.1. 워싱턴 D.C.) 국장급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협의에서 보건의료와 식수위생에 관한 한미 공동의 대북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조율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한미 공동의 대북전략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유럽국가 등과도 고위급 대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통일부 장관은 8월 25일 한국을 방문한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벨기에, 스웨덴, 독일 등 유럽지역을 방문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외교적 관여를 촉구하였다. 9월 30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들과 양자회의를 진행했으며, 10월 1일에는 스웨덴의 안 린데 외교장관, 칼린 발렌스틴 총리실 외교보좌관 등과 고위급 대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 대북 인도협력과 대화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10월 3일,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10월 4일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예방하고 독일 통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7.22.)



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 면담(10.1.)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식 중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자 회동(10.3.)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예방(10.4.)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였다.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였으며,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일정을 공식 수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황청 인간발전부의 피터 턱슨 추기경, 유흥식 성직자성 장관(대주교)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청의 역할과 양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동 유럽 순방을 계기로, 10월 29일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11월 1일 질스 까르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부총재, 자강 샤파강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보건의료 협력과 이산가족, 기후변화와 재난관리, 개발협력 등 대북 인도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10.29.)



피터 텍스 추기경 면담(10.29.)



WFP 사무총장 면담(10.29.)



WHO 사무총장 면담(11.1.)

한편, 정부는 독일 통일 사례에서 한반도 통일·통합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지난 2010년 독일 내무부와 양해각서(MOU)에 기초하여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개최해왔다. 2021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참여와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8.4.~5.) 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최영준 통일부차관(한국 측 위원장), 반더빌츠 독일 신연방주 특임관(독일 측 위원장) 등 한독 양측 자문위원과 주한 독일대사관 및 주독 한국대사관 관계자, 독일 정치재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독일 통일 30주년에 대한 평가와 동서독 주민의 의식 변화 및 한반도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독통일자문회의(8.4.~5.)

## 2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2010년 창설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KGFP)을 통해, 정부는 매년 전 세계 20여 개국의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공동번영에 관한 주제로 국제사회 평화 담론을 주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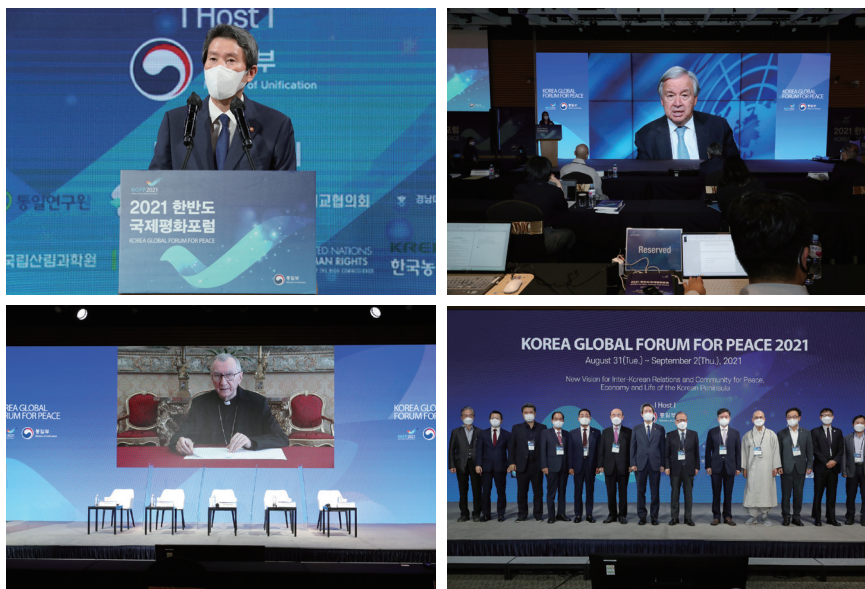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및 남북한 UN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국내외 31개 협력기관 및 약 300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한 가운데,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및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째 날(8.31.)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남북관계 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있었다. 또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년 연속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특별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후에는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초연설을 하였다.

둘째 날(9.1.)에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코로나 이후 글로벌 방역협력과 동북아 방역공동체'에 대한 특별 영상 메시지가 있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간 북한의 변화 과정을 평가해보고, 보건의료·농업·관광 및 인프라, DMZ 협력 등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 간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8.31.~9.2, 서울)

정부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이외에도 주요국의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월 12일에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 등 한국과 미국의 북한전문가를 초청하여, 과거 북미 간 북핵협상의 교훈과 시사점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9월에는 과거 구소련 국가들의 비핵화를 미국이 지원했던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북한 비핵화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이 법을 직접 입법하였던 샘 닐 전 상원의원, 북한의 핵시설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비롯한 국내외의 전문가들을 화상 세미나에 초청하여 CTR 프로그램 ‘한반도 적용 가능성’, ‘북한의 에너지 안보’, ‘북한의 공중보건’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9.15, 9.24, 9.28.) 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가능한 영역에서 대면 국제회의도 개최하였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해외 소장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미국 하와이대, 조지워싱턴대, 베를린 자유대 등 해외 주요 대학 한국학 센터장과 소장학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7.13.~15, 강원도 고성) 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남·북·미 상호 간 이해와 신뢰 구축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학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0월 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와 공동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발전 전망’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현 북미관계 교착국면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고, 코로나19 국면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와 협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미 북한전문가 대북정책 토론회(3.12.)



한국계 소장학자 워크숍(7.13.~15, 고성)



북핵 CTR+ 국제회의(9.15, 온라인)



한반도 관련 1.5트랙 다자회의(10.1, 스웨덴 ISDP)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여행과 대면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전문가들과 줌(Zoom) 회의 등 총 70여 회의 온라인 소통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지속하였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차석대표, 조엘 위트 「38 North」 대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등과 소통하면서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청취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꾸준히 모색하였다.

한편,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러시아 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회의에 참석(9.2.) 하여, '관광, 새로운

환대의 시대' 세션에서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러 협력 방안과 이를 통해 공존과 상생의 질서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다.



통일부장관-갈루치 대사 화상회의(2.5.)



통일부장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특별 발제(9.2.)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에 관한 해외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해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반도 통일과 북한에 관한 석·박사 학위과정 또는 장기 펠로우십 과정에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학위과정 2명, 펠로우십 과정 12명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를 한반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연구자 저변을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참가자 간담회(10.14.)



정부는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 통일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DMZ 철조망을 소재로 한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를 이탈리아 로마의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개최(10.29.~11.7.) 하였다. 개막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교황청 추기경, 그 외 국제기구, 종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로마를 방문한 전 세계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과 DMZ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 (10.29.~11.7,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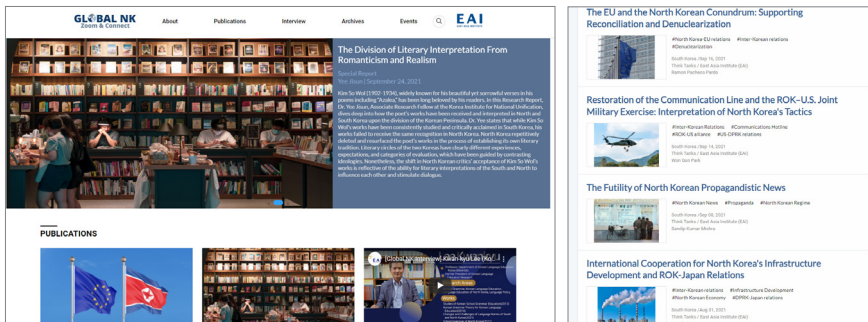
정부는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협력을 이어갔다. 특히 국내외 22개 단체가 참여한 「평화공공외교협의회」와 협력하여, 2030세대 중심의 민간 평화외교 사절인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였다. 협의회는 2021년 협력단원 제2기 80여 명(국내 42명, 해외 40여 명)을 선발하였으며, 정부는 이들이 국제회의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전도사로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2021년 9월 24일에는 통일과 남북관계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시민사회 진영에서의 통일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한국 통일외교협회를 출범시켰다. 동 협회에는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해 연구해 온 국내외 전문 연구자들과 과거 남북관계 현장에서 직접 활동해 온 전직 관료

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앞으로 통일부는 동 협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사회 통일외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코로나19 국면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온라인 디지털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웹저널(www.globalnk.org)을 새롭게 개설(8.17.) 하였다. 이는 종래 북한 관련 영문 웹 콘텐츠들이 「38 North」 등 외국의 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북한과 한반도 연구에 있어 국내외 간에 연구의 양적 질적 편차가 매우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동 사업은 국내 연구자들의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이해와, 균형 있고 객관적인 대북정책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민간 연구소 중 하나인 동아시아연구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웹저널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글로벌 엔케이 줌언 커넥트’(Global NK Zoom & Connect) 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2021년 8월 17일에 공식 출범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총 60여 건의 코멘터리와 연구 분석 보고서, 전문가 인터뷰 등을 게재하였다.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웹저널(www.globalnk.org)

그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등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해 왔다. 통일부장관은 3월과 5월, 10월에 EU회원국, 영연방국가 등 주한 주요국 대사를 초청하여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국내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월간 남북관계 공부모임」을 2021년에도 지속 개최하였다. 12월 16일에는 (사)한국통일외교협회와 공동으로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 체류 외국인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정세평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 북한 및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22년 전망에 대해 토론하였다.

# 02

## 남북교류협력



- 제1절 - 남북 경제교류
- 제2절 - 남북 사회문화교류
- 제3절 - 남북 개발지원협력
- 제4절 - DMZ 평화적 이용
- 제5절 - 개성공단 기업 지원
- 제6절 -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





## 제2장

## 남북교류협력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상황과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을 비롯한 남북 당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자체 방역 강화를 위해 강력한 국경 봉쇄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민간 접촉을 포함한 대외 교류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하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확보 노력 등 남북교류협력 재개 여건 조성 및 재개를 대비한 국내외 역량 강화,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교류 분야에서는 남북철도 및 도로 협력,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당국 간 합의를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남북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한 내부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 복원 사업과 한강하구 우리 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여·야 의원 대상으로 법안 설명을 진행하고 유관부처·기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였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도 남북 간 협력사업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그동안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기록관을 개관·운영하였으며,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북 공동편찬사업인 『겨레말큰사전』도 가제본을 제작하고 유네스코와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을 6년 연장하여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진 종교·사회 분야 교류는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제체육대회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가운데 남북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회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으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총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을 개최지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었다.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재해재난, 산림·농업, 기후환경 등 분야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공유하천 수해방지 등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산림 분야에서는 동·서·중부 등 지역별 산림협력 거점 센터를 구축하였고, 농업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 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성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남북협력 재개 시에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또한, 한반도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유엔 국제기구·국제구호기구(INGO) 대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림·농축산·기후환경·에너지·물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 적실성 제고를 위하여 정례적인 「개발협력정책포럼」 개최와 정책 현장 방문 등 민관 협력을 추진하였다.

DMZ의 평화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DMZ 평화의 길' 운영을 재개하는 한편, 비무장화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광을 재개하여 국민들이

평화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DMZ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국내외에 설명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또한 2018년 남북정상 합의인 「DMZ 평화지대화」 실천사업으로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남북출입 사무소가 남북통행의 관문 역할뿐 아니라 예술을 통한 평화·문화·생태 중심지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였다. 범부처적인 협조하에 2021년에도 분야별 경영정상화 지원 대책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이자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하였다. 특별판매전 참가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실시하였다.

변화된 남북교류협력 환경에 대응하여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을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협회 내 「남북교류협력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민간단체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주요 사안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결정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등을 확대하고 민간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함으로써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남북교류협력법」 개정, 2021.3.9. 시행) 하였다.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주체성을 명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가 도입되었고 남북협력기금 내 지자체 재정지원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교류협력 주요 사안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결정하는 등 분권·협치의 교류협력 체계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남북출입사무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2019.10.1.)과 코로나19 등으로 남북통행 중단(2020.1.30.) 상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출입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관리구역을 정비하고 점검하였다.



## 제1절

## 남북 경제교류

## 1 당국 간 합의사항 이행

## (1) 남북철도·도로 협력 지속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한 내부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연결 사업과 경원선 우리 측 구간 철도복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지속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하였다. 먼저 정부는 우리 측 동해선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 구간, 총 111.7Km) 연결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20년 4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021년 11월 말에 착공하였다. 정부는 동해 북부선 복원 사업 추진을 통해 1967년 폐선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1년 9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경원선 우리 측 구간 토지 등 보상은 2016년 11월

사업 실시 계획이 변경된 이후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토지 등 사용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정하게 보호되도록 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남북철도 협력도 모색하였다. 2020년 12월에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전권대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49차 OSJD 장관회의(2021.6.15.~18, 서울) 개최국으로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OSJD가 주최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6.15.~18.) 되었다.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 시 신속하게 철도도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남북철도도로 현대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우리 측 철도도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기술과제서 등도 준비하였다.

## (2)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공동 수로 조사’(11.5.~12.9.)를 실시하였다. 남북 공동으로 한강하구 일대를 조사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간 군사적 긴장 상태로 인해 남북 양측의 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강하구 수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평화적 공간으로 복원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2019년 1월 30일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남북 공동 수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북한에 전달하고,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3월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접어들면서 후속

실무 접촉이 없어 자유항행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우리 측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함께 남북 공동 심층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한강하구 우리 측 지역 습지 생태 조사’를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간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 측 하천구역인 김포 보구곶~한강 상류부(만우리) 일대 약 80km<sup>2</sup> 구역의 습지에서 야생 동식물의 서식 현황,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멸종 위기 동식물의 서식 등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 한강하구 우리 측 지역 습지 생태조사

- ▶ 사업 기간 : 2020.9월 ~ 2021.8월
- ▶ 조사 범위 : 우리 측 하천구역[김포 보구곶 ~ 한강 상류부(만우리)] 일대 약 80km<sup>2</sup>
- ▶ 조사 분야 : 8개 분류군(식생, 식물상, 어류, 조류, 저서성대형무척추, 곤충, 양서파충류, 포유류)으로 나뉘 우리 측 배후 지역의 생태계 현황 파악
- ▶ 수행기관 : 국립생태원
- ▶ 조사 내용 : 4계절별(가을, 겨울, 봄, 여름철 공동조사) 및 겨울철 집중조사(철새 등 조류 및 포유류 대상 집중 조사)
- ▶ 조사 결과 : △확인된 생물종 총 1,829종(식생 제외) △한반도 고유종 총 22종 △조류 중 ‘개리’(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934 개체가 확인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음.



한강하구 우리 측 지역 습지 생태조사 현장(2020.9월~2021.8월)



또한, 2021년 10월 한강하구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강하구 배 띄우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는 2019년 이후 민간 차원에서 개최해오던 행사를 정부 차원의 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국방부의 지원과 함께 인천시, 김포시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석모수로(강화군)와 염하수로(김포시-강화군 사이 수로)에서 진행하였다.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한강하구 중립수역 이남지역에서 실시하였으나,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강화대교를 넘어 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민간선박의 시범 항행에는 실항민과 이산가족 등이 참가하여 한강하구 지역이 남북 간 화합과 공동번영의 공간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평화의 물길을 개척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시범 항행 현장(10.13.)

한편, 통일부는 한강하구의 다양한 모습을 국민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오두산에서 바라본 한강하구’를 주제로 한 전시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는 조강(祖江)으로 불리던 한강하구가 남북이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수역이며, 화해와 협력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한강하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DMZ 전시 콘텐츠(영상)



DMZ 전시 콘텐츠(미디어 월)

### (3) 금강산 관광

정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시설물 철거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남북 간 협의를 준비해왔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하며, “(관광지구를)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연차별로,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최고인민회의(1.17.)에서도 연차별 계획에 따른 집행을 강조하면서 독자적 개발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남북이 함께 금강산 관광지구를 발전적으로 재개발하고, 이산가족부터 금강산 개별방문을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개별방문 추진방안 및 준비과제 세미나(2.25.)에서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 개별방문부터 재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이 서로 만나 대화하면서 금강산의 발전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강산과 더불어 원산-갈마와 설악을 잇는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한다면 국제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금강산 개별방문을 비롯한 남북 간 관광협력 구상을 제시하였다. 남북 평화관광 정책 토론회(6.15.)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 위해 남북 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개별방문, 이산가족면회소 등

관련 시설의 개보수 등을 추진하면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관광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구상에 대한 국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6월 통일부장관과 금강산 기업인 간의 면담을 통해 정부-기업 간 금강산 관광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촉진하고자 하였다. 6월 1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6월 4일 대한골프협회 이증명 회장, 6월 9일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등을 연이어 만나면서 금강산 관광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관련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금강산의 남북 공동개발, 세계골프선수권대회 금강산 개최 등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실향민의 개별방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여건이 마련되면 원산·마식령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대그룹 회장 면담(6.1.)



대한골프협회 회장 면담(6.4.)

## 2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

### (1)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지원

정부는 코로나19와 경협 중단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오랜 검토를 거쳐 6월 10일 기준에 남북협력기금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개성공단 기업을 포함하여 총 246개 기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이자 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약 12억 2,700만 원이다.

### (2) 북한 개별방문 추진

정부는 북한 개별방문의 추진을 위한 내부 준비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바로 협의·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1년 2월 25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관으로 북한 개별방문 추진방안 및 준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미나에는 학계,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별방문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남북교류 재개를 희망하는 마음을 모아 구체적 실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6월 15일에는 남북 교류협력지원협회가 국회 이용선 의원실과 함께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광의 문을 열고, 민간 참여로 확대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남북 관광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 (3)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추진

남북 간 교역은 그동안 「5·24 조치」와 대북제재로 인해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5월 「5·24 조치」의 실질적 해제를 발표하고, 2020년 7월부터 남북 간 호혜적인 협력공간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 접근 방법으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다.

'작은 교역'은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남북이 상호 주고받는 방식이다. 예컨대 민간 교역업체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북한의 주류·생수 등 물품을 반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생필품 등을 지급하는 교역방식이다.

정부는 '작은 교역' 성사에 대비하여 교역 프로세스 점검 및 협조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교역업체 면담 및 컨설팅, 정책설명회, 유관기관 현장 방문 및 반출입 절차 협의 등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에도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국경 봉쇄로 '작은 교역' 진전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나, 여러 교역업체에서 북한과 교역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4)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통일경제특구')은 남북 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설치할 예정인 경제특별구역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을 언급하였다.

‘평화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하여 20대(2016.5.30.~2020.5.29.) 국회에는 총 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제정을 위하여 국회의 입법 심사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는 총 3건의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2021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하여 세 차례(2.19, 6.28, 11.16.)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하여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설명을 진행하였고, 유관부처·기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였다. 또한 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토론회」(4.29.) 등을 실시하는 한편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 구체화」의 연구용역(4.19.~11.30.)도 추진하여 법 제정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에도 대비하였다.

### (5) 남북 경제협력 공감대 형성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재개 추진 필요성 및 평화경제 실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2021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2021년 6월 26일 개최하였다. 동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상파 채널인 SBS 방송사와 협업을 통해 ‘협상과 평화경제’라는 주제로 특집 다큐로 제작·방영되었다. 짐 로저스 회장(로저스홀딩스) 등 전문가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여행 유튜버, 평화 마라토너, DMZ 통일걷기 대회 참가자, 북한우표 수집가, DMZ 해설사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 및 평화경제의 미래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6.26, SBS 다큐 방영)

아울러 정부는 2021년 10월 7일 ‘평화 뉴딜’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비전 제시를 위해 평화경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평화 뉴딜’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자 평화경제 실행전략이다. 동시에 남과 북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격상시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접근이다.

평화경제 토크 콘서트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평화 뉴딜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협력이 ‘평화 뉴딜’로 발전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짐 로저스 회장은 정부의 ‘평화 뉴딜’에 대한 구상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짐 로저스 회장은 “통일이 된다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할 것이며, 한반도에 투자하려는 회사들이 많다”면서 “향후 한반도는 교통·물류의 허브가 되고, 관광 붐이 일어날 것이며,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IT 등 기술력과 결합되면 북한 농업 분야도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평화경제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화경제 토크 콘서트(10.7)



### 1 문화유산 교류

#### (1)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고려 궁성 유적의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통해 민족공동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남북 주민 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해 왔다. 2018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발굴조사 사업이 재개(10.22~12.10.) 되었으나 2019년에 다시 중단되었다.

발굴 조사는 중단되었으나 그동안 남과 북이 공동 발굴하여 축적된 성과를 공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 순회 전시를 덕수궁 선원전 터에서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경기 용인(4.28.~6.27.), 강원 철원(5.1.~8.30.), 경기 연천(11.1.~30.), 인천(11.23.~22.2.6.)에서 진행하여 많은 국민들이 남과 북이 공동 발굴한 고려 궁성 만월대를 가까이 느껴볼 수 있었다.

또한 만월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유물·유구 등의 자료를 국민들에게 개방·공유하는 디지털기록관(아카이브)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그동안 발굴한 60여만 점의 유물자료 중 12만 건을 디지털자료로 구축하였다. 국민이 알기 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웹툰, 홀로그램, 3D 등으로 자료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거친 후 2020년 12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디지털 기록관」

(www.manwoldae.org)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1년은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사업」 추진의 첫해로 국민들에게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로 복원된 만월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북 문화재 발굴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 순회 전시('21.4.28.~'22.2.6.)

## (2)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과 북,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이를 사전으로 편찬하기 위해 2005년 결성되었다. 그간 총 25회의 남북 공동 편찬회의를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30만 7천 개의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남북 간 표기법에 합의하여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 공동 편찬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남북 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표제어를 대상으로 교정·교열 작업과 말뭉치 정리, 삽화 그리기 등을 추진해왔고, 2021년 3월 남북 공동 편찬회의 개최에 대비한 대북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제작하였다.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 사업도 추진하였다. 겨레말큰사전 온라인(3D) 홍보관 운영과 「수어와 손말」,

「남북의 민속놀이」, 「리듬제조와 예술제조」 등 다양한 주제의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남북의 기초 생활용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남녘말 북녘말」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겨레말큰사전 편찬과정을 교과서에 수록(총 24종, 4과목) 하고, 겨레말 지도 2종(별자리 지도·세계지도)을 제작하여 어린이도서관 등에 무상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위해 유네스코와 국제학술포럼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두 차례(2.22.~23, 11.25.~26.) 실시하였다.



『겨레말큰사전』가제본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2.22.~23.)

한편 2022년 4월 26일 자로 종료 예정이었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회법」이 개정(2021.12.2.) 되어 6년 연장됨에 따라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남북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

## 2 종교 및 사회단체·학술·문화예술 교류

종교 분야에서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우리 종교 단체들이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북한의 종교단체들과 서신 교환 등의 대화

노력을 이어갔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북한 측의 무반응 등으로 의미 있는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각계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교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구체적인 종교협력 사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사회 분야에서도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계속되어 남북 간 인적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등 시민사회단체는 계기마다 대북 서한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사회문화교류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6월 15일 종교단체, 6.15남측위, 민화협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측 단독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하였다. 하반기에도 「광복 76주년 8·15대회」,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및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 기념대회」 등을 북한과 함께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어 우리 측 단독행사로 진행했다.

한편, 6.15남측위에서는 북한에 6.15남·북·해외측위가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정책협의회(3월)를 제안하였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6.15남·해외측위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여성 분야에서는 3·1운동 102주년 계기 남북여성 공동성명 제안,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사업안 타진 등 남북 교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 측으로부터 회신이 없어 구체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학술분야의 남북교류는 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과 북한의 북중 접경 지역 봉쇄 등으로 인해 이러한 학술교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6.15.)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남북 전통문화 교류, 남북 합작 영상물 제작, 남북음악 교류 등 다양한 내용으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 등으로 실질적인 문화예술 교류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 3 남북 체육교류

2021년 남북 체육교류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재개되지 못하였다. 국제체육 대회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가운데, 남북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회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아 남북한의 교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이 지속 연기되면서 아시아축구연맹(AFC)은 각 조별로 한 장소에 모여 치르기로 결정(3.12.)하였고, 남북이 함께 속해있는 H조(남·북·투르크메니스탄·스리랑카·레바논) 예선전 장소는 한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2차 예선전 잔여 경기를 진행(6.5.~13.)하였으나, 북한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코로나19 사유'로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당 경기 일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개최가 1년 연기된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 일정(7.23.~8.8.)이 확정되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길 기대했으나, 코로나19 사유로 북한은 불참하였다. 앞서 북한은 4월 6일, 체육성 홈페이지인 '조선체육'에 북한 국가

올림픽위원회(NOC) 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게재하였다.

정부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와 관련하여 남북 간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과 남북관계 경색국면 등으로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서울특별시·대한체육회 등 실무협의체를 통한 정보 공유 및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에 2032 하계올림픽 유치 제안서를 작성·제출(4.1.) 하였다. 또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서울시-IOC 간 화상회의」(6.1.)를 통해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비전과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IOC가 총회(7.21.)에서 2032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조기에 결정함에 따라 남북 공동 유치 추진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한편 유소년국제축구대회 등 민간에서 추진해오던 여러 체육교류들도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 1) 당국 간 개발협력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주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협력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교착국면에서도 남북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내부적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산림 분야에서는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착공하여 기존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고성 평화양묘장과 함께 동부, 중부, 서부 주요 지역별 산림협력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남북산림협력 재개 시 즉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 지역에 적합한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비축하는 한편, 산불·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지침서를 개발하였다.

방역 분야에서는 접경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방역당국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유관기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우리 측 DMZ·민통선 지역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차단 울타리 설치, 소독 등을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접경 지역 내 홍수와 댐 방류계획을 공유하는 등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탄소중립 협력 방안을 연구하여 기후환경분야 협력 재개에 대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북방지역 적응형 품종의 특성 평가 등 농업생산성 개선 연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종자, 비료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2] 민간단체·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노력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협력 노력과 더불어 국내외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북협업의 경험과 사업 수요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미 국장급 협의를 통해 식수·위생 분야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 협업하여 북한 측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와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11월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0.31.~11.13, 영국)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북한 측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단체, 전문가 접촉을 통해 남북 기후협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한반도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엔 국제기구·INGO 대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림·농축산·기후환경·에너지·물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하였다.

## 3] 민간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2021년에도 개발협력 관련 포럼 개최,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대면·비대면 형식의 민간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개발협력 정책포럼」을 정례화하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활용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공유 하천 공동관리, 비료, 산림 등 개발 유형별 협력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개발협력 정책포럼」 3차 회의(7.2.)



「개발협력 정책포럼」 4차 회의(9.8.)

아울러,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적인 남북협력 방안 마련 및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현장 방문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한데 이어 DMZ 모내기 행사에 참석하여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림 분야에서는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착공식 참가 및 용문양묘사업소 방문 등을 통해 산림협력 준비 실태를 점검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충남농업기술원, 남해화학을 방문하고, 농업기술과 품종 개발 공동연구 등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심기' 행사(4.26.)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착공식(6.15.)

### 1)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남북 각 11개 GP에서 화기와 장비, 근무 인원 철수 및 시설물 철거 등 시범철수를 완료하였다. 판문점 JSA에서는 합의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고 화기·탄약과 경비초소를 철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고,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 지구 지정, DMZ 지뢰 제거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다.

2019년 초부터 북한이 공동 유해 발굴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는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단독으로 유해 발굴 사업에 착수 하였다. 그 결과 2021년 6월까지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유해 총 3,092점, 유품 총 10만 1,816점을 발굴하였다.

정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사회 및 전문가 그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고 있다.

## 2 DMZ 평화적 이용 여건 조성

### (1) 'DMZ 평화의 길' 재개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19년 이래 DMZ 내 일부 구간을 'DMZ 평화의 길'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하였다. 강원도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철원 구간, 파주 구간의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였다. 특히 파주 구간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가 있던 자리가 공개되기도 했다.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DMZ 평화의 길'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래,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DMZ 평화의 길'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지자체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 방역울타리 설치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관계 부처 회의체를 통해 노선 조성 등 사업 추진현황, 운영체계 등 부처별 협력 사안을 점검하였다. 또한 'DMZ 평화의 길'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철원 구간의 비마교 교량을 복구하고 고성 구간의 도로를 정비하였다.

정부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 시행에 맞춰 11월 20일부터 'DMZ 평화의 길'을 다시 개방하였다. 다시 개방하는 구간에는 기존 개방구간인 파주, 고성 '평화의 길'과 함께 DMZ 외곽지역에 조성한 강화, 김포, 고양, 화천, 양구 '평화의 길' 구간이 포함되었다. 2021년 말 기준 누적인원 총 1만 6,758명이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였다.



## 'DMZ 평화의 길' DMZ 내 노선 구간

▶ **고성 지역** : (A코스) 도보 2.7km + 차량 5.2km / (B코스) 차량 7.2km

☞ (A코스) 통일전망대 → 금강통문(도보 2.7km) → 금강산전망대 → 통일전망대(차량 5.2km)

☞ (B코스) 통일전망대 → 금강산전망대 → DMZ 박물관 → 통일전망대(차량 왕복 7.2km)

▶ **철원 지역** : 도보 3.5km + 차량 11.5km

☞ 백마고지 전적비 → A통문(차량 1.5km) → B통문(도보 3.5km) → C통문(차량 1.5km) →

비상주 GP(차량 1.5km) → C통문(차량 1.5km) → 백마고지 전적지(차량 5.5km)

▶ **파주 지역** : 도보 1.4km + 차량 19.6km

☞ 임진각 →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도보 1.4km) → 도라전망대(차량 6.5km) →

통문(차량 2.5km) → 철거 GP(차량 왕복 3.6km) → 통문 → 임진각(차량 7km)

## (2) DMZ 실태조사, 평화지도, 평화협력 국제포럼

정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산림생태계 현황 파악, 문화유적 조사 등을 목적으로 DMZ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통일부를 비롯한 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코로나19, 조류독감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DMZ 일대 우리 측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0년도에는 16회, 2021년에는 총 29회 실시하였다.

통일부는 DMZ 출입을 비롯하여 정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엔사와 수시로 협의하며 사업을 지원하였다. 현재까지 조사된 DMZ의 문화재, 산림 및 생태계 등 주요 조사 결과는 2022년 초, DMZ 통합시스템(유니버스)에 담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분단과 평화의 현장인 DMZ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위탁하여 'DMZ 평화지도'를 제작하였다. 동 지도는 DMZ가 한국인의 오랜 역사 속, 삶의 터전 이었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남북한과 세계가 함께 고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웹상에서 만든 ‘DMZ 평화지도’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DMZ의 역사, 문화, 생태, 지리 등을 망라한 자료를 분석, 가공하여 1만 2천여 건의 정보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DMZ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자료, 관광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2018년 이래 DMZ 평화적 이용 및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DMZ 및 접경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을 꾸준히 개최해왔다. 2021년 10월 28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에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런던대학교 버크벡 칼리지, 콜로라도대학교 관계자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국내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기후변화 시대의 DMZ 평화 구축 방안’을 주제로 ‘DMZ 법과 제도’, ‘지속 가능한 DMZ 생태·환경·문화 협력’,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21 DMZ 양구 평화 선언문」을 채택하여 DMZ 평화 정착과 협력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포럼 참가자들은 사전 행사로 진행된 두타연 일원 ‘DMZ 통일걷기’ 행사에 참여하고 국립DMZ자생식물원 등을 탐방하며 DMZ 내의 우수한 자연 생태 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향후에도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10.27.~28.)



### (3) 화살머리고지 현장 기념관 건립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는 1953년 6·25전쟁 당시 국군과 중공군의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철의 삼각지’ 전투 현장으로, 분단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아울러,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DMZ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남북 공동 유해발굴에 합의함에 따라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의 장소로 전환이 기대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남북 공동 유해발굴은 2019년부터 우리 측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는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의 평화적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노후화된 화살머리고지 GP에 현장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다.



화살머리고지 현장 기념관 외관 및 내부

### (4) 판문점 견학

정부는 2018년 판문점 비무장화 실현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개선하고 홈페이지 개설 등 인프라를 마련하여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판문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2020년 11월 4일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재개된 판문점 견학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15일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은 2021년 2월 15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4월 20일 재개되었으나, 7월 9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재강화됨에 따라 다시 중단되었다. 이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11월 30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다시 재개하였다.

4월 20일 재개된 판문점 견학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1회당 20명으로 진행되었다. 견학은 매주(화, 수, 금, 토) 4일씩 진행되었으며, 견학일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견학(2회)과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견학(2회)으로 총 4회 운영되었다.

11월 30일 재개된 판문점 견학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것이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7월 9일 견학 중단 전 견학일당 4회였던 견학 횟수를 견학일당 2회(일반 견학 1회, 특별 견학 1회)로 축소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 증명·음성 확인제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 판문점견학지원센터를 통해 총 116회 1,985명이 판문점을 견학하였다. 판문점 견학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비율이 95.6%, ‘판문점 견학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96.9%로 판문점 견학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문점 견학 설문조사 결과

항목	매우 그렇다 (매우 만족)	그렇다 (만족)	보통	그렇지 않다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불만족)
견학 만족도	74.5%	22.4%	2.6%	0.1%	0.4%
통일 이해 도움	66.1%	29.5%	4.0%	0.3%	0.1%
추천 재방문 의사	68.7%	27.7%	3.2%	0.3%	0.1%
견학 절차 개선 편리	62.9%	32.2%	4.5%	0.2%	0.2%

\* 조사기간 : '21.11.1. ~ '21.12.31.(중단기간 제외)



건강안내소 방역 절차

편문점 견학

### 3 평화통일문화공간(DMZ Platform) 조성 및 운영

#### (1) 조성 및 작품 설치

남북출입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 실천을 위해 남북 간 대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장소를 선정하고, 2021년 1월부터 동서 남북출입사무소, 파주 철거 GP, 도라산역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접경지 남북협력시설을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민이 만드는' DMZ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실천적 조치의 사업이다.

정부는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예술협력 거점 조성을 위해 출입의 총괄기관으로서 남북출입사무소가 가지는 독특한 의미를 활용하여 공간을 만들고 작품들을 전시하는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2003년 남북 간 왕래 시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역사적인 남북출입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던 (구) 출경동을 2021년에 'Uni마루'로 리모델링(9.4.) 하였다. 문화예술공간의 핵심 시설이자 개관 전시의 주 전시장으로 활용된 Uni마루는 DMZ 내에 있는 최초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통일을 뜻하는 영문 'Uni'와 플랫폼의 순수 한글인 '마루'가 합쳐진 것으로 '통일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Uni마루'는 남북 연결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도 DMZ에 위치한 '공간적 의미'와 '중심적 문화예술공간'이라는 특성을 살려 단순한 건축물 개선이 아닌 작품으로서의 '공간'을 재구성하였고, 이곳에 총 19점의 작품을 전시(9.9.) 하였다.

또한,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철거된 GP를 평화와 화해의 실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파주 철거 GP 주변에 조경공사와 함께 작품 1점을 설치·전시(9.30.) 하였다.

이와 함께 민통선 내에 위치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라산역 대합실에 기존 고정관념을 파괴한 곡선 형태의 '미디어 월(media wall)'을 설치(9.9.) 하고, 3개의 콘텐츠를 탑재하여 가장 대중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 내 제진역 공간을 활용하여 작품 10점을 전시(8.27.) 하였고, 국립통일교육원에도 평화의 메시지를 확장하고 연결하는 의미의 작품 2점을 설치(9.10.) 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총 5곳에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3주년 기념 개관 전시를 기획·진행하였다.

정부는 DMZ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전환함으로써 항구적 평화프로세스 기반 마련과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관리에 기여하도록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가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Uni마루'



도라산역 '미디어 월'



제진역



파주 철거 GP



국립통일교육원

## (2) 개관 전시

남북출입사무소는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과 동시에 남북 간 합의사항의 지속적 이행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과 동시에 DMZ를 예술로 승화된 평화공간으로 국민에게 환원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개관 전시를 기획, 추진하였다.



2021년 남북출입사무소가 주최·주관한 개관 전시 행사는 「2021 DMZ Art & Peace Platform」이라는 명칭으로 진행(9.15.~11.15.) 되었다. 전시에는 총 30팀 33명의 국내외 미술가들이 참여하였고, 37점의 전시 작품 중 34점이 신작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전시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다만, 11월 초에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대면 관람(11.3.~15.)도 실시되었다.

개관 전시는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위치한 ‘Uni마루’를 비롯해 도라산역, 파주 철거 GP,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등 총 5개의 공간을 활용하였다. 각 전시물들은 ‘통일과 평화’, ‘생태와 보존’, ‘연결과 연대’, ‘교류와 확장’을 주제로 한 상징성이 담겨 있으며, 파주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DMZ 플랫폼을 통해 경계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속으로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람하지 못하는 국민들과 외국인들을 위해 전시 홈페이지(www.dmzplatform.com)와 온라인 뷰잉룸(Viewing Room)을 구축·운영하여 현장감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각종 SNS, 방송, 언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지상파 방송 KBS·SBS 뉴스와 MBC ‘통일전망대’, 아리랑 TV 등에서 개관 전시를 소개하였고, 주요 일간지에서도 관심 있게 보도하였다. 특히, 해외 미술전문지인 『아트넷(Artnet)』과 미국 CNN방송에서는 개관 전시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다루었다.

이번 전시 기간 중 총 3,940명이 현장 관람을 하였고, 온라인 뷰잉룸 조회 수는 34만여 회를 기록하였다.

**1]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노력**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였다.

**(1) 범부처 개성공단 기업 지원 대책 현황**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세제·고용 안정 등 분야별 경영정상화 지원 대책을 2021년에도 지속 추진 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및 징수유예 조치, 근로사실 입증 시 보험혜택 부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공단 기업들에게 시행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이자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하였다. 각 부처의 주요 지원 대책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개성공단 기업 대상 주요 경영정상화 지원 대책 현황

소관 부처	주요 내용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대출 이자율 인하(1.5% → 1.0%)</li> </ul>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금융기관-민간은행 대출 상환 유예</li> <li>•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액 만기연장, 보증료 우대(0.5%)</li> <li>• 금리 인하(신용도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금리 인상 자제)</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대체 공장 신설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시설 내 위탁 작업장 계약 등 지원</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등 납부 유예(최대 1년)</li> <li>• 기존 고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li> <li>•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li> </ul>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2016년 1월분)</li> <li>• 가스 요금 등 납부기한 연장</li> <li>• 대체 공장(임대 공장) 지원(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li> <li>• 참고 이용 지원(한국산업단지공단 물류센터 참고 우선 배정)</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근로사실 입증 시 보험 혜택 부여)</li> <li>•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 특례(통상 기준보다 40%까지 추가)</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대상 업체에 포함 (입점 업체 모집공고 시 개성공단 입점 업체 지원 가능 명시)</li> </ul>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상환 유예</li> </ul>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부가세 납부기한 연장(9개월)</li> <li>• 법인·부가세 체납처분 유예(1년)</li> <li>• 세무조사 연기(조사 착수 원칙적 중단)</li> </ul>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공서 단체복 납품 등 판로 개척 지원</li> </ul>

(2) 개성공단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학, 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술·제품 연구개발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형 지원 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하였다. 4개사를 최종 선정하여 6개월간 사업비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면담 및 실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 2020~2021년 성과형 지원 사업 실적

(단위 : 개사)

구분	기업수	유형	비고
2020년	5	기술개발(1), 제품개발(2), 임상실험(1), 제품 인증(1)	특허출원(2)
2021년	4	설비개발(1), 제품개발(3)	특허출원(1)
계	9		

더불어, 홍보·컨설팅 등 기업의 수요가 있는 분야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도 병행해 나갔다. 45개사를 대상으로 총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 2020~2021년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 실적

(단위 : 개사)

구분	연구개발(R&D)	마케팅	인증지원	기타	계
2020년	7	28	5	11	51
2021년	19	23	-	3	45
계	26	51	5	14	96

정부는 개성공단이 중단된 상황에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의 대형 특별판매전 참가와 매장 입점 등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은 자사의 우수 제품들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2021년 개성공단 기업 상품 국내 특별판매전 현황

구분	메가쇼	행복한 백화점 입점	메가쇼	교보 핫트랙스 입점	국회 판매전
기간	6.17.~20.	연중	11.18.~21.	'21.2분기	12.16.~17.
장소	KINTEX	행복한백화점	KINTEX	교보문고 각 지점	국회 의원회관
협업 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교보문고	국회
참가 기업	8개	5개	8개	1개	10개

개성공단 기업 특별판매전



2021 소비자 박람회 메가쇼(6.17.~20, 11.18.~21.)

기업들의 상시적 소통 창구로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기업 종합지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기업별로 겪고 있는 각기 다른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2021년에는 정책 자금, 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총 355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2020~2021년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유형별 상담 실적

(단위: 건)

구분	기업 지원	판로 지원	정책 자금	법률 세무	입주 투자	고용 지원	피해 지원	기타	계
2020년	181	35	73	27	20	22	-	-	358
2021년	220	7	53	17	5	9	23	21	355
합계	401	42	126	44	25	31	23	21	713

## ② 개성공단 기업 소통 강화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갔다.

2021년 3월 개성공단기업협회 신임 회장단이 출범한 이후, 5월 2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기업협회와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기업협회 측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 복원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1월 23일에는 최영준 통일부 차관이 기업협회 회장단을 면담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성공단 재개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간의 정례 간담회 및 실무협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과의 소통을 긴밀히 지속해 나갔다.



통일부장관, 개성공단기업협회 면담(5.25.)



통일부차관, 개성공단기업협회 면담(11.23.)

한편,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경영상 이유 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서면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갔다.



서울지역 기업 현장 방문(6.21.)



경기지역 기업 현장 방문(10.26.)

### ③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강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5년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했던 개성공단의 긍정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갔다.

#### (1) 개성공단 교육과 홍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함께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토크 콘서트(2.9, 11.17.), 온라인 국제대화(2.18.), 토론회(4.26.) 등을 개최하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함께 공유하였다.



온라인 국제대화(2.18.)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토론회(4.26.)

한편, 학생·공무원·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국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학생(초·중고·대학)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경험 공유 사업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 수요를 감안, 영상자료 등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이를 널리 배포하였다. 2021년에는 총 111회에 걸쳐 1만 6,013명이 참여하여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와 통합의 경험을 나누었다.



#### 2021년 개성공단 남북 통합 경험 공유 사업 실적

(단위: 회, 명)

구분	교직원	공공기관 및 공무원	초·중고 학생	대학생	총계
실적	9	13	9	80	111
교육인원	1,678	434	377	13,524	16,013

아울러, 남북경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경제인과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과정」을 추진하였다. 총 4개 지역(경남·광주·경기·대전)에서 268명이 참여하여 향후 예비 남북경협인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 및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주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경제 개성공단 청년 아카데미」 사업과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회」도 지속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1020세대들의 남북 경험과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성공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	시기	주요 내용
개성공단 평화통일 경험 교육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 남북통합 경험 등을 비롯한 평화경제 관련 공무원, 교직원, 대학 및 초·중·고교생 등 대상 실시</li> <li>* 총 111회 진행, 1만 6천여 명 교육</li> <li>** '21.11월 교육 후기 공모전 실시</li> </ul>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과정	4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경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주 1회, 8주)</li> <li>- 경남·광주·경기·대전 4개 지역, 총 268명 참여</li> </ul>
평화경제 개성공단 청년아카데미	4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대상(주 1회, 8주)</li> <li>* 동국대·부산외대와 협업, 총 87명 참여</li> </ul>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회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중·고교생, 일반인 대상 비대면 온라인 대회로 진행</li> <li>- 각 부문별 8강·4강·결승전 진행</li> <li>* 결승전 및 시상식 라이브 총 7,928명 참여</li> </ul>
개성공단 토크 콘서트	2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경기도·파주시)·유관기관(민주평통)과 협력 하, 개성공단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 마련</li> <li>* 총 193명 참여(2.9. 71명, 11.17. 122명)</li> </ul>

**(2) 민관 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개성공단 재개 및 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이어온 ‘개성공단 법률자문단’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연구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2021년에도 4회에 걸쳐 서면 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협력지구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재개 여건 조성과 동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 제6절

##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

## 1 법·제도 개선

## (1)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는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1990.8.1.시행)이 제정된 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변화된 환경과 제도 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부 개정안을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개정안은 2월 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 12월 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정부개정안 주요 내용

- ▶ 교역 및 협력사업 중단 결정 절차 및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
- ▶ 방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 ▶ 우수 교역사업자 인증 제도 도입
- ▶ 북한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기존 고시 규정) 등

## (2)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개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2020.12.8.)의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2021.3.9.) 하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1년 4월 30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민간 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고, 민간위원 등을 확대(정부·민간 위원 등 총 18명 → 25명)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과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2021.3.9.) 하였다.

그 밖에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의원 발의 개정안(12건)의 입법과정을 지원하였고, 유관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류협력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 노력을 지속하였다.

## 2] 민간·지자체 교류협력 사업 지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10일 「남북교류협력종합상담센터」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개소하였다. 개소 이후 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방북·접촉·대북제재 관련 상담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총 1,146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남북교류협력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기업, 지자체를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경협 및 인도지원 관련 컨설팅(10회)과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2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절차, 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지자체 대상 건설팅(3.30, 부산)



남북교류협력 추진 절차 설명회(4.20, 광주)

### 3 분권·협치 교류협력 기반 조성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포럼과 토론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였다.

특히, 2021년 3월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2020.12.8.)으로 지자체가 제도상 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여 공모를 통해 고양시 남북합동통일음악회, 파주시·김제시·청송군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업협력(파주 장단콩, 김제 씨감자, 청송 사과) 등 24개의 지자체 협력 사업을 사전 승인함으로써 지자체가 투명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도 별도로 마련하였다.

또한, 9월 14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규정」을 개정, 모든 지자체를 대북 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함으로써 지자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법정협의체로 격상하였으며, 4월 21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계기마다 정부와 지자체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각 사업 간 조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지자체의 교류협력 행사나 단체장 면담 등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맞춤형 사업 컨설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2021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5회 개최하여 남북교류협력 주요 사안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및 주요 의결 내용**

차수	일자	방식	주요 의결 내용
제318차	1.14.	대면	이산가족 실태조사 남북협력기금지원 등 8건
제319차	2.25.	서면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제320차	4. 8.	대면	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사업 기금 지원 등 3건
제321차	6. 3.	대면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3건
제322차	9.24.	대면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등 3건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6.3.)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9.24.)

#### 4 남북출입경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2019.10.1.) 및 코로나19 등으로 남북한 육로 통행이 잠정 중단(2020.1.30.) 된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등 남북 관계 경색 심화로 출입경 중단 상태가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출입 사무소는 출입경 재개에 대비하고 남북출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를 위해 관세청·법무부·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인원 및 차량심사, 문화재 밀반출 적발 심사 등 출입 관련 모의훈련(65회)을 실시하여 업무절차를 숙지하고 실전 감각을 상시 유지하였다.

또한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4회) 및 「실무협의회」(4회)를 개최, 모의 훈련 계획과 평가 등 전 과정을 국방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하였다.



인원 심사(10.29.)



차량 심사(11.30.)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남북 간 인원·화물의 출입·수송을 위한 비무장 지대 내 특수지역으로 폭은 동해지구 100m, 서해지구 250m이며, 길이는 군사 분계선에서 남방으로 각각 2km 지점이다.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철도·도로·전력·통신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통행 저조 등으로 행사 수요 발생 시 긴급관리 방식으로 임시 대처해 왔다.

이에 남북출입사무소는 2020년 통일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를 개최(11.11.) 하여 남북관리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결정하고, 코레일·국토관리사무소 등 해당 기관에 정비·점검을 요청(11.24.) 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기관별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비·점검이 실시되어 안전통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송전탑 정비(3.18.)



도로 정비(10.15.)





# 03

## 인도적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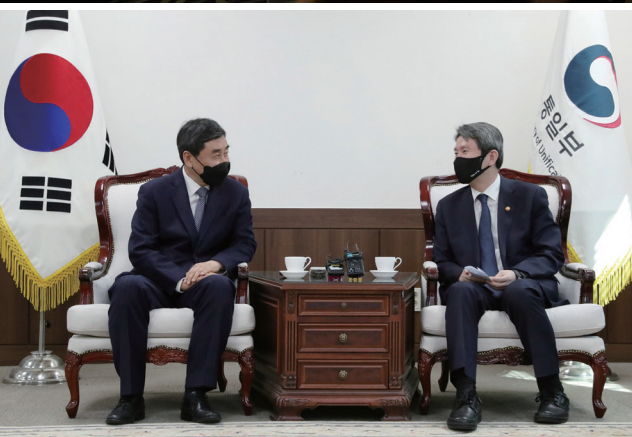


제1절 - 인도협력

제2절 - 이산가족

제3절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제4절 - 북한인권



## 제3장

## 인도적 협력

정부는 ‘인도적 분야의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어떤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남북이 공동 협력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보건의료·방역협력 추진을 통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2021년 11월 10일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출범, 정부·국제기구·국내외 민간단체·지자체·학계 및 전문가 등 남북 보건의료협력과 관련된 분야별 주체들이 관련 의제를 상시적으로 논의·조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2021년 세 차례의 한미 국장급 협의를 통해 보건방역과 식수위생 분야에서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발굴 및 준비하였으며, 세계식량 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장관급 면담 등을 통해 대북 인도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는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지속해 왔으며, 2021년 6월부터 새롭게 출범한 「인도협력분과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의 소통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2021년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243개 모든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 인도협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1년 9월 총 100억 원 규모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의결하여, 민간의 영양·보건 분야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로 인식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시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가 즉각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으로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2019년에는 2007년 이후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아 노후한 전국 13곳의 화상상봉장을 전면 개보수하였으며, 2021년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산가족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화상상봉장 7곳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한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16년 이후 5년 만에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산가족 개인별 신청 정보를 일제히 갱신하고 전면적 생사확인 및 상봉 등 교류 재개에 대비하였다. 매년 고령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상편지 제작(1천여 편)과 유전자 검사(1천여 명)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등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이산가족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북한 고향 사진전 개최, 「온라인 망향경모제」 체험영상 제작·배포, 이산가족 초청 화상 면담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오고 있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2017년 개관 이후 4년 만에 누적 관람객이 12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예술, 전쟁을 겪다」 특별전시회

개최, 유물 구입, 도록(圖錄) 발간,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 전시관' 운영,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등 전시 납북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후납북피해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관계 기관과의 체계적인 소통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기반을 강화하였으며, 피해 가족들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하였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립한 「제2차(2020~2022)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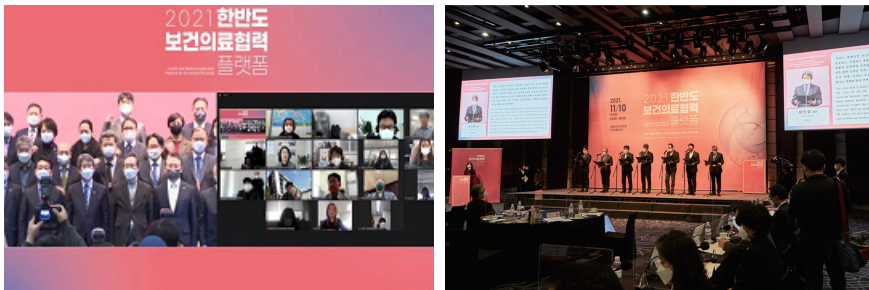
아울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이해를 제고 하고,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북한인권-인도지원-개발협력 단체 간 상호대화, 민간단체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민간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소통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1 인도협력 추진 노력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에도 계속되면서,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아 인도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당국 간 관계도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국제사회, 민간단체, 지자체 등 다변화된 경로를 통해 창의적이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 회의-공동선언문 채택(11.10.)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등 국경을 초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향후 남북이 공동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건의료협력을 통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힘을 기울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 11월 정부·국제기구·국내외 민간단체·지자체·학계 및 전문가 등 분야별 주체들이 모여 한반도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모든 의제를 상시적으로 논의·조율하는 열린 협의체로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첫 회의는 이틀(11.10.~11.)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참여자들은 플랫폼의 출범을 선포하고, 플랫폼 참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 방향을 담은 ‘한반도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하였다. 동 ‘공동선언문’은 한반도 주민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협력이 정치·안보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은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

우리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주민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이 정치·안보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이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우리는 오늘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의 출범을 계기로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상생의 관점에서 호혜적 협력을 통해 현존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보건 위기에 대응하면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2. 우리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한반도 보건의료협력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공동체이자, 집단지성의 장으로 함께 만들어 나간다.
3.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를 이행해 나가는 것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국제사회의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보건이슈에 대해 한반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내고,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통해, 남북 주민 모두가 건강한 한반도를 추구한다.
5. 우리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지향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도의 정신에 따라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하고 협력해 나간다.
6. 우리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매년 1회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상에서의 협력으로도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간의 남북 보건의료협력 관련 사업들은 일회적이며 사업·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참여자 간 연계에 있어서도 일부 한계가 있었다.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남북 보건의료협력과 관련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창설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참여 주체들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협력하여 국내외 국제사회, 당국과 민간, 실무와 학술이 연계되는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향후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미래에 중심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과 2018년 11월 7일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의 합의사항인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중장기적 보건의료협력 확대 등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단계별 협력계획을 준비하여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대북 감염성질환 협력 추진방안’ 용역을 통해 감염병 분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대북 비감염성 만성질환 협력 로드맵 구축’ 용역을 통해서도 최근 북한 주민들의 증가하는 만성질환 분야의 현황을 분석·예측하고 단계적 협력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국제 NGO를 중심으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민간단체들과 정부의 소통을 촉진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북 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용역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보건의료협력 분야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한반도 생명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향후 보건의료협력 재개에 대비한 여러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2021년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유아·여성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세 차례(8.4, 9.16, 11.1.)에 걸친

한미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공동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으로 보건·방역과 식수·위생 분야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10월 29일 세계식량계획(WFP), 11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장관급 면담을 통해 대북 인도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정부는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수유부에게 영양강화 식품을 지원하고, 취로사업 참가자 대상 옥수수 등 식량을 지원하는 1,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WHO를 통해서도 북한 내 의과대학 대상 의료 물자의 지원과 의료진 교류 훈련 등을 골자로 한 5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모자보건 분야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1년 3월 18일 이후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 내에서 전원 철수한 상황이나, 직원들의 재입북과 국경 통제 완화 등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즉시 사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1995년 국제기구 공여를 통한 첫 대북 인도협력 사업 이후, 2021년까지 국제기구를 통해 총 2억 6,67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 및 대북 지원 사업에 관하여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이 중단 없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별도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이 없었던 지자체와의 소통 또한 새롭게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지자체는 1999년 제주도의 감귤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대북 인도적 협력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북 인도주의 협력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장으로서 「인도협력분과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출범, 2021년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인도협력분과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서는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지자체 대북 인도협력사업 활성화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9월 13일에는 제2차 「인도협력분과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1차 회의 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와 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통일부 고시, 2021.9.14.) 하여, 243개 모든 지자체는 별도의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되어 대북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에 반영하고, 2022년도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통일부와 지자체 간 협조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민간단체 간 협력을 체계화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대북 인도협력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부는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계기에 민간의 의견을 수렴, 1월 4일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북 인도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횟수와 비율을 확대하였다. 해당 개정으로 인해 국내 민간단체 중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기존 연 1회였던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가 연 3회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단체가 인도·개발협력 분야 별개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도 동일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금 지원 결정 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하였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과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2021년 9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총 100억 원 규모의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사업’을 심의·의결하였다. 해당 사업은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심사·선정해 사업당 5억 원 한도의 남북협력기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인도주의 협력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하여,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북지원사업자 중 모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화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9일부터 개별 신청을 접수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중 국경 봉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대북 물자 반출 신청,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등 절차상 불편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2020년 9월 이후 중단되어 있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에 대하여, 2021년 7월 30일 영양 및 보건 의료 관련 물자 2건을 시작으로 반출 승인을 재개하여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인도협력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 취약계층 대상 영양·보건 물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 2] 인도협력 추진 역량 강화

### (1) 민간·지자체·국제사회 협업 체계 강화

2021년 정부는 민간·지자체·국제사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통일부차관과 (사)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회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유관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를 반기별로 정례화(6.30, 12.23.) 하였다. 또한 실무적 뒷받침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수시로 개최(1.21, 8.2, 10.12.) 하였다.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는 2004년 설립되어 2012년 3월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9년 복원되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3.31, 5.6, 8.2.) 등을 통해 인도협력 분야 민관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였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3월 2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의장, 3월 24일 북민협 회장 면담 등을 통해 대북 인도협력 민간단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화협 의장 면담(3.22.)



북민협 회장 면담(3.24.)

지자체와의 정책협의 채널 또한 제도화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법정기구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2021년 4월 21일 출범하면서, 인도협력 분야 지자체의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위한 「인도협력분과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가 출범하여, 두 차례(6.23, 9.13.) 회의가 개최되었다. 해당 협의회에서는 정부와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폭넓게 참여, 대북 인도협력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공조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이 개정되어, 지자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일괄 지정 및 2022년도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 예산 반영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하였다. 먼저 2021년 11월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출범을 계기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세계 백신면역연합(GAVI), 국제백신연구소(IVI) 등을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 NGO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미국·영국·EU 주한공관 등 주요국들의 참여도 확보하였다.

9월 30일, 11월 11일 개최된 「국제사회 보건의료협력 네트워크 포럼」에서는 대북 인도협력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다양한 국제비정부기구(INGO)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하여 대북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와 소통의 저변을 넓혔다. 또한 범정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TF 회의(3.11, 4.22, 6.21, 8.19, 10.12, 12.1.)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을 통한 인도적 협력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통일부장관 유럽 순방 계기 대북 인도협력 관련 주요 국제사회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10월 29일 교황청 인간발전부 추기경,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11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부총재,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사무총장과 연이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하고, 어린이·여성 등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2)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증진하고 향후 본격적인 보건의료협력 재개에 대비할 필요성을 절감, 민간 전문가들과 분야별 협의를 지속해 왔다. 감염병 분야 전문가 회의(4.22, 7.9, 8.4, 8.18.) 및 만성질환 분야 전문가 회의(5.28, 7.7.)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과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 속에서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모색하고자 2021년 2월 23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주관하는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대북 인도협력 분야 민간단체들의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대상 워크숍(6.9.~11.)을 진행하였고, 그 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주관하는 「대북제재 및 인도·개발협력 전문가 포럼」(4.8.)과 「북한 개발협력 아카데미」(5.11.~13.)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11.16.~17.)을 운영하여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제재 면제, 전략물자판정, 물자반출 등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서 필요한 실무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 (3)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정부는 인도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협력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①인도협력 사업 분석·평가 및 역량 강화 지원 ②관련 정보 수집·관리 및 협력사업 수행 ③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인도협력 동향, 국내외 인도협력단체 및 사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인도협력 현안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통합적인 인도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협력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북지원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을 구축하여 인도협력 관련 사업 절차, 국내외 동향 및 통계, 대북지원사업자 신청, 유엔 대북제재 면제 신청, 민간단체 남북협력기금 신청 등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 면제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재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원·주체·지역·분야·정부별로 세분화된 국내 대북지원 현황과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개발원조위원회(DAC) 자료를 기준으로 주체별, 분야별 통계자료로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기반한 북한 현황 지표 자료, 주간 인도협력 동향 자료,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대북 인도협력 관련 보고서, 월간 뉴스레터 등 대북 인도협력사업 및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북지원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 메인 화면

### 1 이산가족 현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3만 3,619명이다. 이 중 8만 7,404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4만 6,215명이다.



####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현황

##### ①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인원	12,323	17,825	9,196	4,038	2,833	46,215
비율	26.7	38.6	19.9	8.7	6.1	100

##### ② 출신지역별

(단위: 명, %)

구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계
인원	9,379	5,074	2,942	4,403	1,379	1,894	729	20,415	46,215
비율	20.3	11.0	6.3	9.5	3.0	4.1	1.6	44.2	100

### ③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계
인원	28,387	17,828	46,215
비율	61.4	38.6	100

### ④ 거주지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	11,971	2,047	1,066	3,758	440	1,015	364	14,018	2,766	1,528
비율	25.9	4.4	2.3	8.1	1.0	2.2	0.8	30.3	6.0	3.3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계	
인원	1,439	803	671	1,411	1,105	452	177	1,184	46,215	
비율	3.1	1.7	1.4	3.1	2.4	1.0	0.4	2.6	100	

## 2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 (1)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 재개 준비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라 금강산에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8.20.~26.)를 개최한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조속히 복구·개소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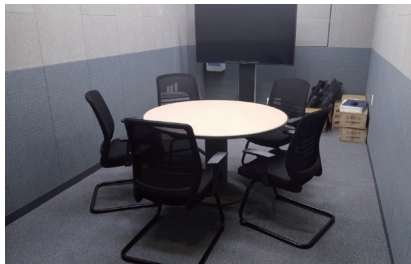
이후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 대비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 추세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2019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상봉장 13곳을 개보수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지역별 이산가족 밀집도와 인근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7개 지역에 화상상봉장을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향후

화상상봉 재개 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화상상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봉장 증설 직후에는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전체 화상상봉장 20곳에 대한 기술 점검과 시험 가동을 실시하여, 남북이 합의하면 언제라도 화상상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한편,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는 2008년 7월 완공된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발생으로 인해 개소가 보류되면서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릴 때마다 연회장 등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건립 이후 13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면회소 복구·개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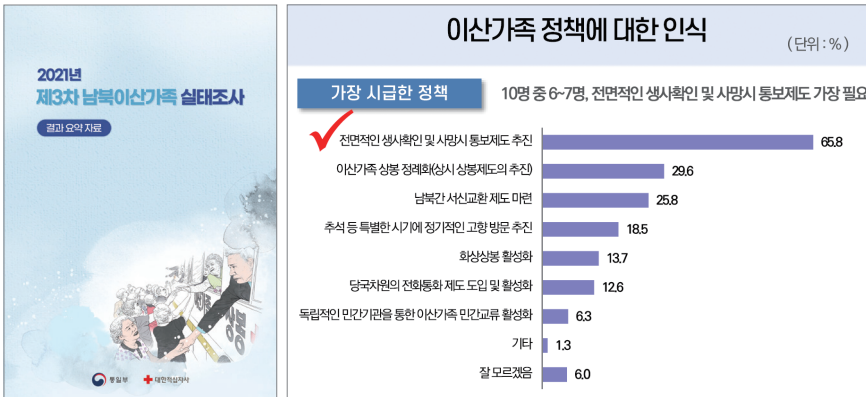


설치 현황(20개소)

한편,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전원 4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한 법정 조사로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전화, 우편 등)으로 추진하였다.

실태조사는 크게 전수조사와 심층 설문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주소와 연락처, 우리 측과 북한 측 가족사항 등 이산

가족이 신청 당시 기재한 필수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을 확인·갱신함으로써, 향후 전면적 생사확인 등 각종 교류 시 활용될 이산가족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내 전수조사 참여자 중 5천여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산가족 교류 실태와 정책 인식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산가족 사후에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2만 5,149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세 가지 검사(상염색체, Y염색체, 미토콘드리아)를 실시하였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는 2015년 구축한 이산가족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고 있다. 2017년에는 그동안 민간 검사 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유전자 검사 잔여 대상물(혈액, 타액, 모발 등)을 질병 관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유전자 검체 보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정부는 2005년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4,013편을 제작하였고, 2008년에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각각 2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여 시범 교환하였다. 그 후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서신 및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2만 44편을 추가로 제작하여 총 2만 4,077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였으며, 이산가족이 공개에 동의한 영상편지는 「남북이산가족찾기」 홈페이지(reunion.unikorea.go.kr)에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 이산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이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이산가족찾기」 홈페이지 메뉴와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후, 이산가족 사연을 담은 웹툰과 영상물을 추가로 제작하고, 「온라인 고향 사진관」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이산가족 웹툰 <우리는 하나>

## (2) 이산가족 위로사업 추진 및 국민 공감대 확산

정부는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초청행사를 실시해 왔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고령 이산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추석과 5월 가정의 달 등의 계기에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이산



가족 3천여 명에게 위로 서한과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온라인 망향경모제」 체험 영상을 제작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망배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추석에는 증설된 화상상봉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정부·홍성·전주 지역 이산가족(6가족) 초청 화상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북한 전역의 명승지와 풍광 등을 담은 사진 200여 점을 수집해 온·오프라인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실향민 이산가족 2만 1,838명에게 고향 사진을 동봉한 위로 서한을 전달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단체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홍보·문화·학술 분야 등 활동에 매년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망향경모제(2.10.)



위로 선물 전달(5.17.)



통일부장관-이산가족 화상면담(9.16.)



북한 고향 온라인 사진전(9.30.~)



### 3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정부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제정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2017년까지 총 4회 개정하여 민간 차원에서 생사확인 시 300만 원, 상봉 시 600만 원, 서신교환 등 교류 지속 시 80만 원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 기준을 상향하였다. 2019년에는 총 19건의 민간교류가 성사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중 접경 지역의 통제가 강화되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건수	96	231	314	279	287	466	303	289	201	151	103	54	23
지원금	67	163	279	349	440	692	364	252	235	172	114	76	22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누계
건수	12	16	28	12	10	10	14	12	7	0	0	2,918
지원금	12	16	51	23	16	18	34	21	15	0	0	3,431

## 제3절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 1 현황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쟁 포로를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4년 조창호 소위의 탈북·귀환 이후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하였다.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6·25전쟁 중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전후 납북자)로 구분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출범하여 2016년까지 활동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신고 접수된 납북 피해 사건 5,505건을 심사하여 4,777명을 전시 납북자로 결정하였다.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며, 그 중 3,319명이 귀환하였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하였으며, 9명은 장기간 억류 중 탈북해 귀환하였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전후 납북자 현황(추정)

(단위: 명)

구분	어선원	대한항공 (KAL)납치	군·경	기타		계	
				국내	해외		
피납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자	송환	3,263	39	-	-	8	3,310
	탈북·귀환	9	-	-	-	-	9
미귀환자	457	11	30	6	12	516	

북한은 2013년 김정욱 선교사에 이어 2014년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씨를 억류하여, 2021년 12월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3명을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 납북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시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6·25전쟁 납북자 명예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개관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사진, 문서, 서적 등 3천여 점의 유물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은 6·25전쟁 시기 납북의 아픔을 온 국민과 나누고 평화통일의 소중함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주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관 4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누적 관람객이 12만 7천 명을

넘어섰다. 2021년에는 ‘예술, 전쟁을 겪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전시 납북사건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고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시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하고자 기념관 설립 목적을 담은 상징물도 개발하였다.

또한, 2020년에 이어 기념관 소장 기증 유물을 소개하는 도록Ⅱ를 제작하였으며,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하여 별도 주차공간 마련,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주변 시설을 정비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념관 홈페이지(www.abductions625.go.kr)를 통해 ‘VR 전시관’을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하였다.

정부는 전시 납북자의 명예 회복과 권익신장을 위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매년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전시 ‘예술, 전쟁을 겪다’



전시납북자 관련 온라인 교육 동영상

한편,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2021년 12월 말 기준 피해위로금 등 약 152억 원을 납북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 결정 현황

(단위 : 건/백만 원)

구분	신청	지급 결정	지급액
피해위로금	438	426	13,211
정착금·주거지원금	9	9	1,773
보상금	14	3	261
계	461	438	15,245

2021년에는 제54~55차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3.9, 4.1.) 하여 납북 사건과 관련된 국가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받은 가족의 보상금 신청 건을 접수하고, 8천만 원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 차원에서 인우보증인의 구체적인 목격 진술을 토대로 납북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위원회 결정이었다.

정부는 전후 납북피해자의 권익 향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법정단체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매년 1억 8,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고령 납북피해자들의 의료비 및 생계지원 등에 도움을 주었다. 납북피해 가족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단체장 면담, 납북자 가족 위로 방문 및 간담회도 실시하였다. 무주택 납북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귀환납북자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사례관리와 생활안정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역류자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2021년 총 6회에 걸쳐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역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2021년 3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가 최초로 반영되었으며, 11월에는 통일부장관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 제4절

## 북한인권

## 1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추진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2차(2020~2022)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하여 비전·목표·기본방향·추진과제 등을 담은 계획으로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대 목표, 3대 기본방향, 8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제2차(2020~2022)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체계도

비전	<b>‘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b>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북한인권 증진의 선순환 구조 창출</li> <li>•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li> </ul>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권과 사회권의 포괄적·통합적 증진</li> <li>•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 추진</li> <li>• 북한인권 증진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이행 연계</li> </ul>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연구 확충</li> <li>②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li> <li>③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li> <li>④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를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li> <li>⑤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li> <li>⑥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li> <li>⑦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증진 협력</li> <li>⑧ 북한인권 정책 추진체계 강화</li> </ol>

아울러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도 지속하였다. 북한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4.9), 운영 예산 확보, 사업계획(안) 보완 등 사전 준비를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에 기여하는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수시로 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했다. 10월에는 「평화·협력적 북한인권증진」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북한인권 증진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을 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북한인권에 대한 균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2021 북한인권 알아보기』 책자를 발간·배포하였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외국 정부, 국제시민단체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 번역본을 제작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웨비나 형식의 토크 콘서트 개최, TV 영상 콘텐츠 송출, 북한인권포털 운영 등 비대면 방식의 홍보를 적극 확대하였다.

## 2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 및 민간 부문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 및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 북한인권 유사입장국과 정책 조율·협력,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 지원 등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와 제76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다. 제76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틀과 내용이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운송 관련 인도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접근성 보장 강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최초로 포함된 바 있는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단체는 총 34개로, 단체의 활동영역이 자유권 이외에도 사회권, 취약계층 인권,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찾아가는 북한인권단체와의 소통」(12회) 및 북한인권 전문가 의견수렴 등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북한인권-인도지원-개발협력 단체 간 상호대화(3.12.)를 통해 단체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북한인권단체 역량 강화 연수회도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북한인권단체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인권단체 역량 강화 연수(6.17.~18.)



북한인권단체 역량 강화 연수(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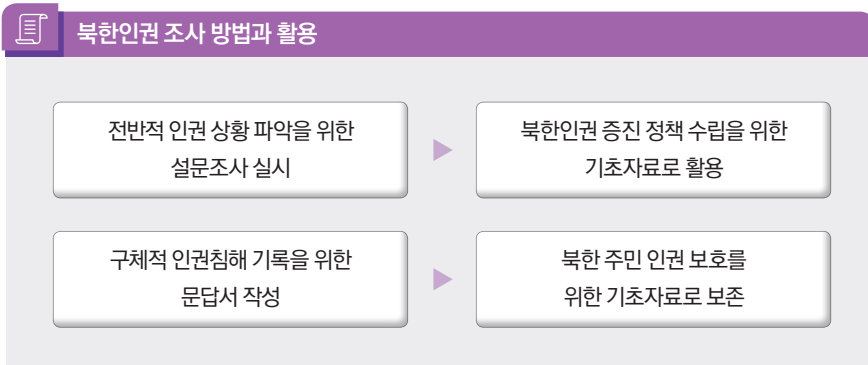
### 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 (1) 개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설립되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조사 원칙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면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문답서에는 구체적 개별 인권침해 내용을 기록하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된 기록 원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부로 분기별 이관하고 있다.



북한인권 조사항목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등 인권실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항목 중 ‘자유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사회권’은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북한 내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과 관련된 실태도 조사하였다. 북한인권 기록센터의 북한인권 실태 주요 조사 결과는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 보고서」에 포함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 (2) 북한인권 조사기록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21년 총 8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21년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67명(여성 39명, 남성 28명)과 2021년 이전에 우리 사회에 정착한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63.8%, 출신 지역은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약 56.3%를 차지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65건으로, 기록 원본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였다.



### 분기별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록 작성 현황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계
조사대상자(명)	28	31	18	3	80
조사기록(건)	26	24	12	3	65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매년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2020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 내 유관부처 및 유엔기구 등과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심층조사 연구’, ‘국제인권 규약에 비추어 본 북한인권 관련 법제연구’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 (3) 북한인권 조사기록 업무 체계화

2021년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 조사 방식과 진행 방법, 기록관리 등 북한인권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4년간 축적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권리별 조사절차와 설문조사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분류체계를 국제인권규약 권리별로 정비하였다. 수집된 북한인권 정보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효율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학계, 법조계 등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 조사자문단을 운영하고, 국내외 인권전문가들과도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북한인권 조사기록 업무의 보다 충실한 수행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도 지속 유지하였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유엔서울인권사무소 등과의 상시적 교류,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였다.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11.29.)



유엔서울인권사무소 대상 설명회(12.17.)



# 04

## 남북대화



제1절 - 남북대화 추진

제2절 - 남북회담 역량 강화





## 제4장

## 남북대화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지속, 2020년 6월 이후 계속된 남북통신연락선 단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

정부는 남북대화의 단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계기마다 북한에 남북대화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면서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남북대화 단절 상황에서도 정상 간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합의, 7월 27일 1년 1개월여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회담을 대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화가 가능하도록 남북영상회담실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북한과 연결하기 위한 남북 영상회의 체계 구축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또한, 회담 개최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 실시, 남북협상포럼 개최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전문성 강화 노력 등을 진행하였다. 남북대화 50년 기념식 및 학술포럼 개최 등 남북대화 50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2021년 상반기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정책 기조 하에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정부는 2020년 제시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을 의제로 북한에게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2021년 1월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우리의 제안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 협력이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행사」에서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면담 등 주요 해외 인사와의 접견 계기에 남북 대화 재개의 중요성과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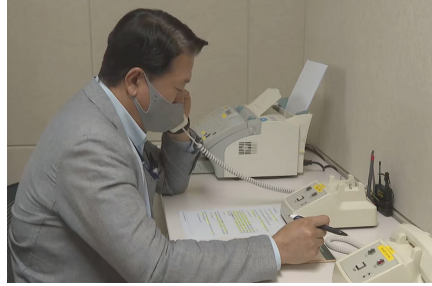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행사」(4.27.)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면담(6.22.)

이러한 여건 조성 노력은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이어졌다. 남북 정상은 4월 이후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1년 1개월여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선과 군통신선이 모두 복원되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 (7.27)

그러나 북한은 8월 초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하면서 복원된 지 14일 만에 통신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9월에는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적 기초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초연설에서 남북 및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였다. 북한도 9월 24일과 25일 연이어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면서 우리 측 제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9월 29일 제14기 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초부터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10월 4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 이후 남북통신연락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남북회담 개최 등 본격적인 대화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1 남북대화 체계 구축

정부는 대면접촉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남북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월 26일 남북 영상회의실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을 정비하였다.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자 정부는 29일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남북 영상회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남북 간 시스템이 연결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영상회의실 구축 및 기자단 대상 설명(4.26.)



통일부장관 영상회의의 시연(6.16.)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면 회담이 가능하도록 「안심 대면 회담」 운영방안도 마련하였다. 방역 및 접촉 수준, 회담 개최 장소 등을 고려하여 중립지역(완전 비접촉), 우리 측 지역(접촉 최소화), 북한 측 지역(방역 안심존) 회담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방역조치사항, 회담 진행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2] 남북회담 상시 대비 및 전문성 강화

정부는 언제나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회담 개최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을 통해 회담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그리고 회담대책·의제별 협의자료 등을 실제 작성해 봄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협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남북회담 분야 원로들로 구성된 비상임자문위원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수렴한 의견을 기반으로 회담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합의 이행 방안을 보완하였다.

또한 남북회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대북 협상 역량 개발과 창의적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협상연구포럼을 총 10회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남북협상 분야 전문가·회담 유경험자 특강 및 토론, 각 회담별 담당 실무자들의 연구과제 발표 등을 실시하였다.

## 3] 남북대화 50년 기념 및 대국민 소통 강화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회담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1971년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8.20.)

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된지 50년을 맞이하여 9월 1일 ‘남북대화 50년-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과 학술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남북대화 사료·사진 전시(8.9~9.8, 서울역·시청역·종각역·종로3가역), 대학생 모의남북회담 경연 대회(11.13.) 등의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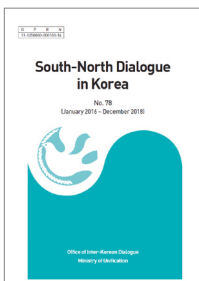


지하철 디지털 포스터 전시(8.9~9.8, 서울역)



남북대화 50년 기념식·학술포럼(9.1.)

이와 함께 남북대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남북대화』 78호 영문판(9월) 총서, 『남북대화 50년』 화보집(10월)을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국내외 전문가에게 배포하고, 국민들과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남북대화』 78호 영문판  
총서 발간



『남북대화 50년』 화보집  
발간



대학생 모의남북회담 경연 대회(11.13.)



# 05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제2절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제3절 -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제4절 -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제5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협력체계 구축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강화 업무협약식(MOU)

일시 | 2021. 6. 22. (화) 11:00 장소 | 본관 소회의실(2층)



## 제5장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부는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을 목표로, 2021년에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여 6대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2021년)을 수립·추진하여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국내 입국 후에는 조사,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서의 사회 적응 교육 및 초기 정착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정부와 지자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여 취업지원, 자산형성지원, 교육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3명으로 2020년 229명 대비 72.5% 감소하였다. 입국 인원 감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경유하는 국가 간 이동의 제한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나원 교육, 하나센터 교육, 남북 통합문화센터 사업, 남북하나재단 사업 등이 일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질환자,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에게 긴급생계비와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4.20, 8.17, 12.21.) 하였다.

우선 탈북한 후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시행령 상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 구매 노력 등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고령 가산금,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 취업장려금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여 집행하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2021년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긴급생계지원과 의료지원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탈북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을 확대하였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에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대표전화를 설치하여 정착지원 상담과 함께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상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정부는 기초직업교육부터 전문자격증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업 및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관련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자산형성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의 수혜자 확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2021년 하나원에서는 교육생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형·맞춤형·실용적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애프터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과정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취업, 교육, 건강, 돌봄, 주거, 생활정보 등 6개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였다. 하나원 직업교육관을

취업지원 종합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고 지자체·일자리재단·남북하나재단 등과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초직업훈련, 취업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21년 7월, 교육관에 있던 「마음건강센터」를 교육생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본관 1층과 지하 1층으로 확장·이전하였다.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들의 검진 자료를 중심으로 건강자료 DB를 구축하였으며, 대학·병원들과 협업을 통해 임신·출산 리플렛을 제작하고 소통 사례집인 『진료실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등을 발간·배포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비를 고려하여, 2021년 8월 기존 산부인과 진료실을 「여성건강센터」로 확장·개소하였다.

하나원 내 하나돌학교는 연령에 따라 유치·초등반과 청소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3국 출생 학생들의 우리말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특별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수료한 탈북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을 위하여 방학이나 학기 중 ‘학력보충 특별반’을 운영하였고, 「탈북무연고 청소년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연고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주민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하였다. 정부는 2020년 5월 13일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주민 간 문화적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행사 및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온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 일환으로, 2021년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5.13.)과 남북 출신 예술인의 축하 공연 등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10.25.~30.)’을 운영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정

### 보호요청 및 국내 이송

- 보호요청 시 외교부, 관계 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 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

### 국내 입국

### 조사 및 임시 보호 조치

-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 조치 실시
- 조사 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이송

###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및 보호 결정 세대단위 결정

### 하나원 정착 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심리안정, 우리 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 초기 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 거주지 전입

### 거주지 보호 (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 민간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 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86명(정원기준)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6장

제7장

부록



## 제1절

#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2021년 한 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63명으로 2020년(229명)에 비해 72.5% 감소했다. 2021년 12월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누적인원은 총 3만 3,815명이다. 이 중 여성 입국자는 2만 4,340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72% 수준이다. 연령별 현황은 입국 당시 30대가 28.7%(9,702명)로 가장 높으며 20~30대가 전체의 57.1%(19,292명)를 차지한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직·부양자가 44.9%(15,167명), 노동자가 39.6%(13,369명)로 2개의 직업군이 전체의 84.5%(28,536명)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중·고등학교 학력이 69.4%(23,447명)로 가장 높고, 전문대 10.4%(3,529명), 대학 이상 6.9%(2,332명)이다.

출신지역은 함경북도 58.7%(19,837명), 양강도 17.8%(6,005명), 함경남도 8.5%(2,880명) 순으로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 비율이 높다.



### 최근 10년간(2012~202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남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여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b>합계</b>	<b>1,502</b>	<b>1,514</b>	<b>1,397</b>	<b>1,275</b>	<b>1,418</b>	<b>1,127</b>	<b>1,137</b>	<b>1,047</b>	<b>229</b>	<b>63</b>
여성 비율	73%	76%	78%	80%	79%	83%	85%	81%	69%	37%

(부록 II-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참조)



###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1년에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한 해 동안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은 87명으로 지난해 538명에 비해 급감하였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 입소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초기 정착지원 안내 등 정규 프로그램과 언어, 운전 등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2021년도 수료 현황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수료	14	2	18	1	10	-	16	12	-	-	2	12	87
남	11	1	3	-	1	-	5	11	-	-	1	8	41
여	3	1	15	1	9	-	11	1	-	-	1	4	46

2021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및 수료한 북한이탈주민과 교육생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원 교육에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참여형·맞춤형·실용적 교육'과 수료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애프터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편된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은 5개 영역 12주 400시간의 정규 프로그램과 371시간의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었다. 아울러, 수료 교육생을 하나원으로 초청하여 과목별 심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		
<b>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28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나눔, 마음돌봄</li> <li>• 마약중독 예방, 결핵예방</li> <li>• 건강관리법, 체육활동</li> </ul>	<b>성평등 관점 통합교육 (17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인권과 양성평등</li> <li>•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li> </ul>	<b>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204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성검사, 진로지도</li> <li>• 기초직업적응훈련</li> <li>• 정보화 교육</li> </ul>
<div style="border: 2px solid teal;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b>12주 400시간</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경제 적응, 언어 적응교육</li> <li>• 소비생활, 사회보장제도</li> <li>• 현장체험, 인권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착지원 제도</li> <li>• 신변보호담당관 안내</li> <li>• 설문 및 교육평가</li> </ul>	
<b>우리 사회 이해 증진 (106시간)</b>	<b>초기 정착지원 (45시간)</b>	

※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371시간) : 언어, 운전, 컴퓨터, 공예교실, 부모교육 등

## 2] 우리 사회 이해 교육

하나원은 교육생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주시민, 시장경제 적응, 언어 적응, 사회 이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준법, 소비생활, 사회보장제도, 사기 피해 예방, 인권, 폭력 예방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수요가 많은 언어 적응 교육은 ‘언어 적응의 기본, 어휘 표현 학습’, ‘남한 사람과 호흡하기’, ‘표준화법 학습’, ‘사회진출의 장애 극복, 발음·역양 교정’으로 구분하고, 각 주제별로 기초·심화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북한식 말하기, 북한식 발음과 역양 다듬기를 희망하는 탈북 교육생을 위해 원내에 「우리말 상담실」과 「우리말 어학실」을 설치하여 1:1 언어 코칭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의 변화 모색을 위해 부교재 『언어생활, 고유어·한자어』를 발간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수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2021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을 기획하고 대학생반과 직장인반을 대상으로 ‘어문규정의 이해’, 영유아모반을 대상으로 ‘책 읽어 주는 엄마입니다’를 각각 운영하였다.

### 3] 직업교육관 운영 및 진로지도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능력을 신장하고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해 직업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6월 24일 개관한 직업교육관은 4층 규모로 국가기술자격시험장(CBT실), 직종별 강의실과 실습실, 교육생들의 자율학습과 취업 정보 검색을 위한 취업상담실(Job Caf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원 직업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직종 선호도 조사, 직업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22개 훈련 직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직종 설명, 진로상담, 기초직업훈련, 취업설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맞춤형 진로지도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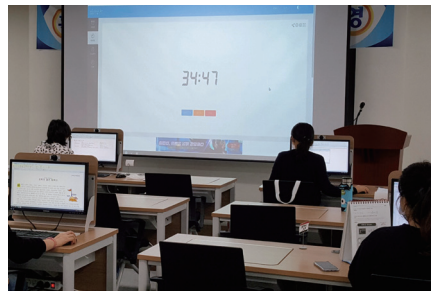
하나원 입소 초기에 개인별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 진로상담을 통해 교육생이 선택한 직종을 ‘자격 취득반’과 ‘직종 심화반’으로 분리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직업능력 함양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약하여 하나원 교육과정 중 10개 종목(한식, 양식, 중식, 일식,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제과, 제빵,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기초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식, 피부미용, 헤어, 정보기술(ITQ) 한글 과정을 운영하였다.

하나원 수료 교육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심화교육으로 한식조리, 제빵, 네일아트, ITQ(한글, 엑셀) 4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중 3개 과정(한식



제빵사 과정



정보화 과정

조리, 제빵, ITQ)의 수료생 29명 중 28명(97%)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직업에 대한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교재 『진로와 직업』, 부교재 『취업가이드』와 22개 직종에 대한 『기초 직업훈련 용어 해설집』을 제작하여 교육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관련 자문회의, 외부강사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하고 취업에 용이한 직업훈련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교육관의 효율적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하나원 요양보호사교육원」도 지정 절차가 완료되어 향후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업교육 외부강사 워크숍(11.2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11.26.)

한편, 하나원은 교육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강원도·강원도일자리재단·남북하나재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확대와 취업처 발굴 등을 지원하였다.

하나원-경기도일자리재단-하나재단  
업무협약 체결(4.9.)하나원-강원도·강원도일자리재단-하나재단  
업무협약 체결(6.22.)

#### 4 하나둘 학교 운영

하나원 내의 하나둘학교에서는 만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부 파견 교사가 학생의 연령 및 학력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유치·초등반과 청소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3국 출생 학생들의 우리말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특별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유치반 교육 내실화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 발달 특성과 언어 사용 능력을 고려한 기초교과 가정학습지 및 놀이 꾸러미 등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였다.

탈북 무연고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탈북 무연고 청소년 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2회) 하고, 남북하나재단의 「탈북 무연고 청소년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나원 수수료 후 지역사회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직원 등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하나둘학교 교육포럼」을 개최(3회) 하여 평화·통일교육 및 탈북학생의 진학·진로 방안을 모색하였다.

## 5] 하나의원 운영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 25명의 의료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안성(본원)은 가정의학과·치과·한방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을, 화천 분소는 내과·치과·한방과·정신과 등 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하나의원은 원내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사 1명을 채용하고 산부인과 진료실을 확장하여 탈의실과 대기실 공간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여성건강센터를 개소하는 등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는 원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육생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입소 교육생 대상 인바디 검사(InBody,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체중, 비만도, 골격근량 측정 및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등 기본검사를 바탕으로

개인별 식습관 관리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수료 이후에도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대상자들에게 수료생 대상 건강지원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건강관리 대상자는 수료 후 1년 동안 하나 의원 의료진이 매월 정기적으로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국 하나센터 및 협력병원과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정착 초기에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세 번째는 2021년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지원 및 이해 증진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을 총 3개 기관과 추진하였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과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을 위한 맞춤형 임신·출산 정보 제공 리플렛을 개발·제작 하여 전국 하나센터에 제공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과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하나의원 실습교육을 추진하였다. 국립암센터와는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 사례집인 『진료실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을 공동 발간(12.15.) 하여 협력병원에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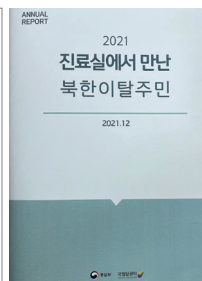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 건강 특성을 고려한 리플렛 5종(결핵, 병원 이용안내, 건강관리 10대 수칙, 구강보건, 여성 건강)을 개발하여 보건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여성건강센터 개소(8.24.)



임신 출산 리플렛 발간(10.13.)



소통 사례집 발간(12.15.)



## 6 마음건강센터 운영

하나원의 마음건강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신과 진료,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하나원 입소 후 모든 교육생에게 북한이탈주민용 간이 심리상태 검사(BPSI-NKR)와 개별상담을 통해 하나원 입소 초기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생들이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마음의 고충을 해결하고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생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스스로 마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마음 관리법'을 소개하고 익히도록 돕고 있다.

하나원 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음건강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또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25개 지역사회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와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하나재단과도 협력하고 있다.

2021년에 새롭게 시행한 사업은 총 3개 분야이다.

첫째, 환경 개선 분야에 있어서 마음건강센터 이전을 통해 각 방의 기능을 충분히 살린 개인 치료실 4곳(정신과 진료실 1, 심리상담실 3)과 집단활동실 3곳(집단상담실, 모래놀이치료실, 놀이치료실)을 마련(7.13.) 하였다.

둘째, 연구분야는 2020년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 4회에 걸쳐 내·외부 자살 예방강사 51명을 배출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과 심리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08년 개발 이후 사용해 온 「북한이탈주민용 간이 심리상태 검사(BPSI-NKR)」 도구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였다. 하나원은 환경 변화에 맞게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 위기도와 안정감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용 심리상태 검사(MHI-NKR)」 도구를 새로 개발하였다. 이는 2022년부터 실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셋째, 협업 분야로 「대한명상의학회」와 마음건강지원 협약을 체결(8.11.)한 후,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하여 ‘마음건강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명상 기법을 익혀 스스로 마음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협업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마음건강 수칙(12개)’을 마련하여 ‘2022년 탁상형 달력’으로 제작 후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유관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일상생활 중에 마음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자살예방 강사 양성 교육(11.17.)



마음건강 명상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센터 상담실



마음건강 수칙 달력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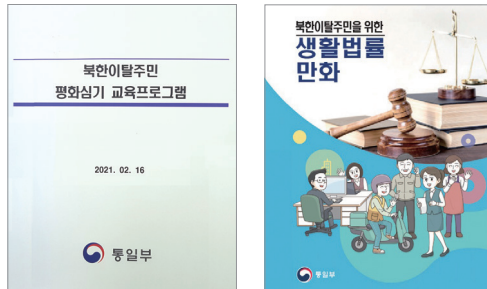
## 7 화천 분소 운영

### (1) 직무·심화교육

화천 분소는 성인 남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사회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시간 등 기본적인 틀은 안성 본원과 동일하게 하되 「평화심기 프로그램」과 「자동차 운전 및 중장비 원내 실습」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폭력예방 및 정서안정을 위해 신설한 「평화심기 프로그램」은 2021년 기본교재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강사 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화천 분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폭력예방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0년에 발간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북한 생활법률』 교재를 2021년에는 더 이해하기 쉽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로 다시 발간하였다.



교재 발간

자동차 운전면허 교육을 위해 2020년 원내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이후 1차 기능 시험 합격률이 도입 전 63.7%에서 '21년 97.1%까지 대폭 상승하였으며, 97% 이상의 교육생들이 수료 시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 합격하고 있다. 굴삭기·지게차 등 원내 중장비 실습 교육 역시 교육생들의 몰입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과정이다.

화천 분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과정」도 운영해오고 있다. 2021년 ‘지자체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협의회’ 과정 등 2개 과정을 신설하고, 기존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과정 운영 횟수를 늘려 운영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견학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 2021년 직무교육 운영 실적

과정명	기간		비고
	기	기간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1기	6.15.~6.18.	집합교육 온라인 2일, 현장견학 1일
	2기	10.12.~10.14.	
	3기	12. 7.~12. 9.	
탈북학생 지도교사	1기	8.10.~8.12.	온라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협의회(신설)	1기	10.28.	온라인
지자체 공무원 (신설)	1기	7.29.~7.30.	온라인
	2기	11. 9.~11.11.	온라인 2일, 현장견학 1일

화천 분소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모자가정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안정과 가족관계 회복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2021년 전문가 용역을 거쳐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동 프로그램 전용 공간인 「한마음평화센터」 등 화천 분소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하였다.



한마음평화센터 현판식(11.10.)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시범 운영

수료 교육생 지원 차원에서 탈북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나소리 기자단을 만들어 생활정보, 하나원 소식, 생활법률 등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나소리 기자단은 2021년 영상 기사 8건, 텍스트 기사 15건 등 총 30여 건의 기사를 하나원 소식지 『하나소리』에 게재하였다.

## (2)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체험 및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교육

2021년 화천 분소는 지리적 이점, 북한이탈주민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미래 통일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체험, 통일체험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11.3~9.)을 실시하였다. 당초 초청 행사로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하여, 화천군 소재 3개 학교(오음초, 유촌초, 화천정보산업고) 학생 12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평화체험을 위해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구간 코스(화천 평화의 댐, 양구 두타연 등)와 체험 시설(평화의 댐, 양구 통일관 등)을 방문하였다. 통일체험 프로그램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협업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은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강사로 초청하였다.



평화·통일체험(화천정보고등학교, 11.4.)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교육(오음초등학교, 11.8.)

## 8] 참·마·실 교육과 '애프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하나원은 교육생 감소 추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형·맞춤형·실용적 교육'과 '애프터서비스 프로그램'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참여형·맞춤형·실용적 교육'은 우리 사회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참여형 교육', 교육생 연령·적성·특기·입국 유형별 '맞춤형 교육', 초기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는 '실용적 교육'을 목표로 북한이탈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과정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애프터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통합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취업, 교육, 건강, 돌봄, 주거, 생활정보 등 6개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였다.

취업지원의 측면에서 안성 본원은 직업교육관의 본격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거주지 고용센터·하나센터·일자리재단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거점 지역별 일자리 관련 기관과 취업 업무협약을 확대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지원의 측면에서 안성 본원은 북한이탈주민 학부모와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나둘학교 졸업생의 지역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수료한 탈북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을 위하여 방학이나 학기 중 ‘학력보충 특별반’을 운영(4회, 30명) 하였다. 하나원 파견 근무 후 복귀한 교사를 하나둘학교 졸업생과 결연하여 상담과 진로 지도를 하는 ‘하나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탈북학생 지역 교육 지원협의회」를 개최(2회) 하여 탈북학생의 학교적응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돌봄지원의 측면에서 안성 본원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하나원 수료 북한 이탈주민 영아모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고충 및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양육·돌봄지원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1년 수료생 정착실태조사 추진 현황

구분	기간	대상	내용
수료생 실태조사	7.16.~9.30.	하나원 수료 후 1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193명	△거주지 정착 과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취업 △하나원 생활 및 교육 등
	9.8.-9.16.		
영아모	11.1.-11.30.	하나원 수료 영아모 42명	△기본 인적사항 △양육·돌봄지원 △사회·정서적 지지 등

하나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자체 방역 강화 및 교육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모든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였으며, 강의실·사무실 등에 손소독제 및 비접촉식 체온계를 비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또한 모든 방문객에 대해서는 사전 문진표를 작성토록하고, 전신소독기 통과 및 발열 체크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신속 검사 키트를 구입하고 교육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교육생 및 직원의 확산에 대비한 자체 조치사항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철저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교육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방문자를 대상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등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생활관에 위치한 인권상담실을 교육관으로 이전·확장(5.3.~8.11.) 하여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권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상담실 확장

## 제3절

##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 ① 가족관계등록 및 주거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세대 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 함으로써 형제, 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희망하는 거주지에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입주하게 되며, 교육생들이 「어울림 터」 내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거주지 선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주택을 배정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② 정착금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비롯한 각종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착

지원금은 기본금과 주거지원금 외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가산금, 안정적 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등으로 구분된다.

정착금 중 기본금은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하나원 수료 직후 초기 지급금을 지급하고 거주지 전입 3개월 후부터 잔여금을 3회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주택 임대애 필요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며 지방거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거주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다. 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자녀양육 등의 사유가 있는 북한이탈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착장려금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하며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장려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장려금은 2021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3년 근속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65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지방은 최대 1,95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제4절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 1 자립지원

## (1) 직업훈련

정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내일 배움 카드제」를 지급받은 직업훈련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직업훈련 기관에 등록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구직자 총 433명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전문자격증, 외국어·컴퓨터·공무원 시험 등 직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개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회계실무자 양성과정, 피부미용사 과정, 요양보호사 과정, 애견미용사 과정, 소형 건설기계 면허 과정 등 북한이탈주민이 선호하거나 유망한 직업 분야를 중심으로 총 8개 심화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취업 아카데미 등 청년 구직자 취업준비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연령별·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부미용사 과정



소형 건설기계 면허 과정

이 밖에 온라인 직업교육, 취업 바우처, 단기연수 등의 직업훈련도 실시하였다. 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탐색 및 직장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연수생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연수비를 지원하는 단기연수 사업을 운영하여 129개 기업에 총 155명이 연수를 수료하고 이 중 153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2) 취업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춘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배치된 취업상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 동행 면접, 취업역량 강화 지원, 일자리 매칭관리, 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였다.



### 2021년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의 취업지원 실적

(단위: 건)

구분	구직등록	구인등록	알선	동행면접	취업	전화상담	대면상담
건수	1,871	2,260	1,892	452	1,506	18,154	6,900

〈출처: 남북하나재단 취업관리시스템〉

### (3)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1:1 경영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옷 수선, 네일아트 등 생활밀착형 분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턴 실습과 재정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민간단체인 아산나눔재단과 협업하여 '아산상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성공 패키지'(영성패) 사업을 추진하였다. '영성패'는 3주의 이론교육과 1주의 기초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최대 9개월간 작목별 선도농가와 연계해 영농을 실습하는 사업이다.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영농에 진입한 경우 비료, 농약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 협조로 영농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이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및 농촌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작목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영농정착 성공 패키지(영성패) 교육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령 상의 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 규정(제16조)과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제17조의5)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확대 기반을 강화하였다.

#### (4) 미래행복통장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가 그 저축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저축할 경우 이와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매월 적립하여 만기 시 총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2015년 첫 가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래행복통장 만기해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정부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대상자를 기존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중도 해지를 최소화하여 만기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연장 사유에 기존의 출산, 병역에 더해 장애 및 학업을 추가하고 일시 중지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미래행복통장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가입 인원	10	182	380	458	510	559	406	2,505
만기지급 인원	-	-	-	17	49	169	398	633



## (5) 공직 채용

정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월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계획’ 지침을 마련하여 공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 주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인사혁신 수준 진단’,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평가지표로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191명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재직하고 있다.

## 2]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 (1) 통일전담 교육사 운영 및 학습 지원

정부는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2021년 기준 탈북청소년이 다수 재학 중인 전국 26개 학교에 22명의 통일전담 교육사를 배치하였다. 통일전담 교육사는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1 상담과 기초학습 등을 지원한다.

정규학교 내의 보살핌 외에 탈북아동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1:1 온라인 화상영어교육과 방문학습지·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통일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 (2) 교육 지원

정부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학교

(1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을 희망하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인가(학력 인정) 대안학교(3개교)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7개소)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출생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상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 2021년부터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규 수업 이후 학업 보충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14개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3) 대학 진로·진학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특례입학을 할 수 있으며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학비도 지원(국·공립대 전액 면제, 사립대 50% 지원) 받게 된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대학 정원 내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첫 학기 등록금을 민간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 및 학과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여 진로탐색 등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 남북하나재단에서는 탈북청소년 진로진학지도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교사 등 외부 전문가로 ‘진로진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온라인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였다.

2022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 및 핸드북을 발간하고, 각급 학교의 진로·진학 교사, 학부모 등에게 배포하였다.



2022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 및 핸드북

또한, 대학에서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탈북 대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대학을 디딤돌(예비) 대학으로 지정(2021년 6개 대학)해 어학,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과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였다. 탈북 대학생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 미국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학생 모집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대신 국내 외국어 교육기관을 통해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 (4) 무연고 청소년 지원

무연고 청소년은 국내 입국 후 하나원에서 보호결정을 받을 당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정부는 무연고 청소년들의 안정적 양육 환경 제공과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보호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무연고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룹홈 시설(13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업, 심리 상담, 교육지원, 임대주택 알선, 제도 수립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어, 보호자·후견인 지정 절차 규정 신설 등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이 보다 체계화되었다.

### 3 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 (1) 인권보호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강화와 보호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탈북한 후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책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다. 하나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등을 「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지원과 신변보호를 위한 주거 이전 지원 등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사항은 2021년 6월과 7월부터 각각 시행되었다.

정부는 탈북여성의 인권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과 치유·상담을 확대하였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대표전화(1577-6635)를 설치하여 정착지원상담과 함께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상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고령 가산금(720만 원→800만 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400만 원→450만 원),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360만 원→400만 원) 등 주요 가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 (2) 취약계층 조사 및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령자·독거노인, 한부모 자녀, 재·출소자 등 특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긴급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했다. 정부와 남북하나재단은 2019년 하반기부터 '북한 이탈주민 취약계층조사'를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 문제를 겪을 경우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집중적 사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지원을 통해 3,075명을 대상으로 4,641건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다. 우선 남북하나재단의 생계지원(긴급생계비, 의료비지원 등),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차상위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연계 등 시급한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센터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진로 및 취업지원, 심리지원, 법률 지원, 각종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3) 의료지원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기본 중위소득 120% 이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일반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기이식이나 중증질환 등의 경우는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청구의 편의성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지원 사업'을 통해 만성·중증·희귀성 질환, 법정 감염병, 심리질환자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받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등 전국 65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하여 전국 480여 개

병원에 배치된 의료사회복지사들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재단 지원을 포함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의료자원에 대한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진료 전에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와 기초상담을 통해 재단 의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된 병원비는 남북하나재단에서 해당 병원과 직접 정산한다.

#### (4) 생활안정 지원

정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 지원체계 및 경제적 기반의 약화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북한이탈주민(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절감과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한 긴급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중증질환, 가족해체(가족상실), 세대주 근로 능력 상실(한부모, 다자녀, 고령화 등 가정 상황 고려), 출소자 등 생계 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이다.

남북하나재단은 또한 하나원 수료 직후 지역적응교육 및 구직활동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필요한 초기 생필품과 가전제품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지원 공급 등에 대비하여 전국에 6개 센터를 앞선하는 등 생계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0년 초에는 고령자 및 독거노인을 위해 긴급생활물품을 1,056명에게 제공하였고, 2021년에도 9월부터 3개월간 고령자, 위기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1,000명에게 긴급생활물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취약계층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 의심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728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다.

##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소통 강화

### (1) 콘텐츠 제작·확산

정부는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각 매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지하철 공익광고, 라디오 음원 광고, SNS 기사단 운영, 언론매체 및 북한이탈주민 크리에이터 등과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고 제작하였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례 발표대회’(10.28, 유튜브 생중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북한이탈주민 취약 영농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 개최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성공적 정착 및 선행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례 발표대회(10.28.)



북한이탈주민 기부금 전달식(12.1.)

또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4개의 SNS를 운영하며 온라인 소통을 지속하였다. 정착지원 분야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격월간 소식지인 『동포사랑』 등 각종 홍보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한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통합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이해, 편견과 갈등의 이해 및 해결 방안 탐구를 위한 ‘남북 주민통합 기본과정’, 남북 분단이 가져온 상처를 치유하고 문화적 화합을 지향하는 공연예술인들의 퍼포먼스 ‘분단의 줄, 문화로 넘기’,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주민이 함께 전국 명소를 탐방하며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문화를 알아보는 ‘지역 알기 남사친 북사친’, 북한이탈주민 유튜버가 일반 주민과 함께하는 남북문화 관련 이야기쇼 ‘프리한 남북’ 등의 문화 콘텐츠를 일반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을 운영하였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심리변화를 그린 뮤지컬 ‘환영(幻影)의 선물’, 남북 출신 성악가가 함께하는 성악 공연 ‘우리가 하나되기까지’, 남북 주민들 간 이해와 공감의 과정을 그린 연극 ‘동행’ 등의 사전·사후 공연 행사를 비롯하여, 센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남북 주민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발표회 등 남북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센터 내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뮤지컬 ‘환영의 선물’(10.16.)



성악 공연(10.23.)

## (2)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착한(着韓) 봉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 9개 단체로 구성된 제5기 착한봉사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 탈북학생 가정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키트 나눔 봉사’를 진행하였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지역과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4개 나눔문화 자원봉사단을 지원하였다. 나눔문화 자원봉사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동화책 제작 전달 등 정성 나눔 봉사활동을 8회 진행하였고, 남북 독거 어르신에게 황해도 음식 도시락 배달 등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8회 진행하였다.



정성 나눔 봉사활동(10.16.)



음식 나눔 봉사활동(10.30.)

### (3)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2020년 5월 13일에 온라인으로 개관 하고 업무를 개시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주민이 직접 또는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통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남북 생애 나눔 대화’, 캘리그래피, 토탈공예 등 다양한 취미교실 과정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준수, 소규모로 개설·운영하였으며 요가·명상·뷰티 등 일부 대면방식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였다.

특히, 2021년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1주년 기념행사(5.13.)는 기념식과 남한과 북한 출신 예술인 축하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부대행사로 북한이탈주민 작품 전시회, 평화·통일 시화전, 음식 나눔 봉사활동 등이 진행되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축하 공연(5.13.)

또한 전시공간으로 ‘기획전시관’과 ‘통합문화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실을 보다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전시관은 ‘남북 분단의 아픔,’ ‘고통 치유의 노력,’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통합문화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VR)로 이산가족의 고향을 체험하고 북한식당의 요리사가 되어 북한 음식을 만들어보며, 평양인민대학습당 앞 광장에서 활쏘기, 독도에서 생태 탐험, 서울 경복궁 앞에서 투호놀이 등 남북의 다양한 문화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산가족 고향 체험 VR



활쏘기, 생태탐험, 투호놀이 VR

### 1] 지자체와 민간 역할 제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정착지원 제도를 수립·총괄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나센터를 지정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심리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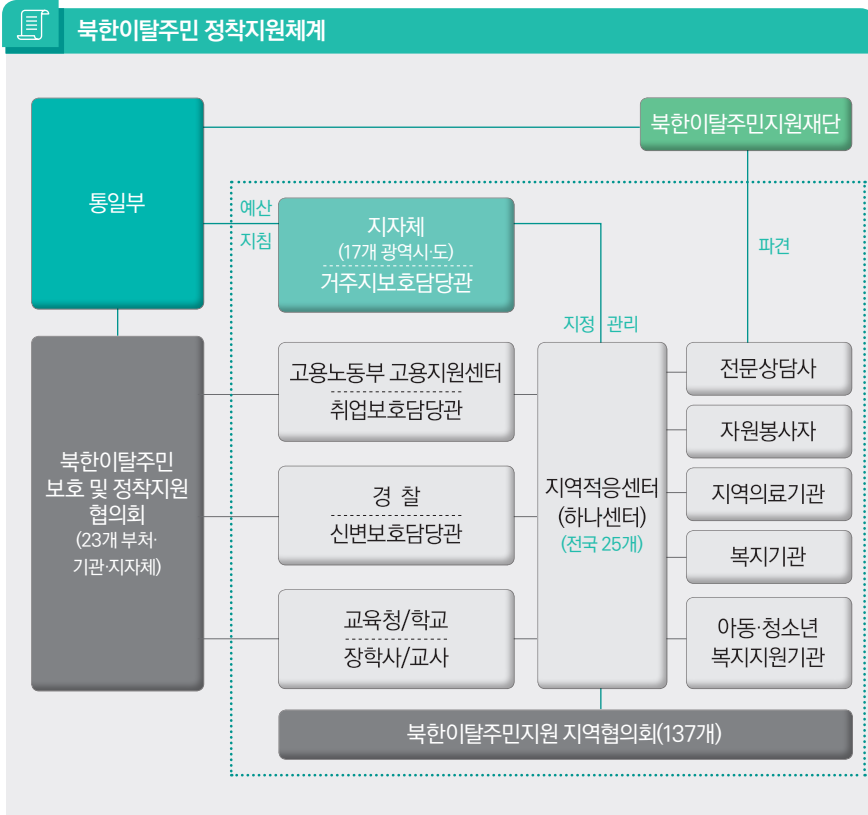
또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공무원, 보호담당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3개 부처 및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에는 통일부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서면) 하여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

2023)」 및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고 있다.



##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지역 적응센터 관계자, 종교 및 복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37개의 각급 지자체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성과’를 반영하여 지역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에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거주보호담당관(245명)은 전입과 생계 및 의료급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900여 명)은 각종 범죄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70명)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 (3) 민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역할 제고

정부는 민간의 정착지원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간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멘토링, 심리 상담 및 치유 캠프, 외국어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남북주민 소통 및 화합을 위한 남북주민 소모임 활동, 남북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 남북통합 토크 콘서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대표인 단체가 민간 공모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민간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규모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 운영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단체의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역량 강화 교육 참여 단체 중에서



희망자를 선별하여 온·오프라인 소통기회를 마련하는 등 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 2] 하나센터 기반 강화

### (1) 하나센터 확충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직후 초기 집중교육과 지역 적응 및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 집중교육은 8~9일간 50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진로 및 취업교육, 실생활 및 지역사회 이해,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센터의 초기 집중 교육은 현장체험 중심으로 진행하여 하나원에서의 교육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 적응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및 진학, 진로 및 취업, 생계, 의료, 심리·정서, 주민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취약 계층 조사 및 지원 등을 통해 위기 의심자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 하나센터 초기 집중 교육 내용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이다.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만큼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 25개 하나센터(서울 4개, 경기 6개, 강원 2개 외 광역시도별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제5기 하나센터 운영기관이 새롭게 지정되어 3년간 운영된다. 관할 지역 범위가 넓어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나센터에서는 지역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나센터 역량 강화 일환으로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하나센터에 근무한 경우에도 유사경력 80%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정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및 외부의 사이버 위협 등으로부터의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하나센터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과 단체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배포하여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하나센터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고, 개인 정보보호 관리 및 외부의 사이버 위협 등으로 부터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점검과 보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 (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및 정착도우미

하나센터에는 남북하나재단 소속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이 배치되어 하나센터 직원(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심리 또는 취업 분야의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정착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81명(심리 49명, 취업 32명)의 전문상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취업·건강·심리·법률 등 정착생활 전 분야에 걸쳐 상담 등 각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2021년 지역별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단위: 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	17	3	3	4	2	3	3	2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	3	3	3	2	4	2	2	81

정착도우미는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거리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로서, 각 하나센터와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정착도우미는 하나원을 수료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전입, 개인물품 인수, 임대주택 입주 등을 돕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지역에서의 생활을 안내하는 등 초기 정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 1천여 명의 정착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6장

제7장

부록

# 06

## 통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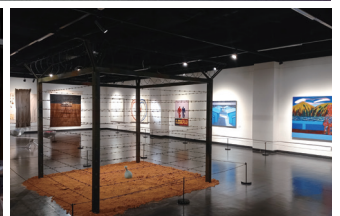


제1절 - 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운영

제2절 -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제3절 - 사회통일교육 지원

제4절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 제6장

## 통일교육

정부 유일의 통일교육 전문기관인 통일교육원은 2021년 3월 30일 자로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교육과정 및 평화·통일교육 관련 행사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평화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원내 교육과정은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체험 영상을 제작하는 등 온라인 수업을 개선하고 보완하였다. 또한 대내외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통합 교육을 위한 신규 강의를 개설·운영하였다.

그리고 접경 지역 직접 체험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확산과 평화·통일교육 및 대중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2021」 행사를 실시하였다.

사이버 교육과정은 2019년부터 6개 과정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이버교육 이수자는 2020년 44만 2천여 명, 2021년은 44만 7천여 명으로 최근 2년 연속 40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재도 개발하였다. 명사특강, 교과 학습용 참고 도서, 인문 시리즈 등 도서자료와 그림동화, 워크북, ‘평화·통일 커피차 세트’, ‘평화 다이어리’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또한 방송사·민간 유튜브 채널과 협력하여 다큐멘터리, 음악·여행 예능, 웹 예능, 웹토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방영하였다.



제9회 통일교육주간(5.24.~30.)도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여 폭넓은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막행사는 통일교육주간 최초로 현장 참석 - 온라인 청중단 참여 - 유튜브 중계시청의 3원 연결로 참여를 확대하였다. 각급 학교 및 지역사회,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다채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통일리더 캠프」, 「학교통일 체험교육」, 「어린이 기자단」, 「창작 통일 동요 공모전」 등 통일미래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 지정,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개최 및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등의 제도적 지원도 이루어졌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좌」, 「통일한국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 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행해졌다.

전국 7개 권역별로 지정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기본·특화·연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일교육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찬회, 명사특강,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관련 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2021년에 고양 통일관이 신규 지정되어 전국 13개 통일관이 운영 중이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획전시와 VR 체험, ‘찾아가는 이동 통일관’ 운영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2030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 소통,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제2기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 및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20년 12월 출범한 평화·통일교육 연구센터는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용역 진행,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신규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020년 12월 제6중앙생활치료센터로 지정·운영

됨에 따라 2021년 센터 내 연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쌍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단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를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비대면 연수’,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맞춤형 체험 키트를 제작·활용함으로써 체험연수의 질적 향상과 연수 효과성을 증진하였다. 아울러 입소형 연수 운영 정상화에 대비한 야외 체험장 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설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체험연수 운영기반도 확충하였다.

### 1 통일교육과정 운영

정부는 국민들의 평화통일 의지를 높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통일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원내 통일교육은 전문과정, 공직자 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글로벌 교육과정, 특별 교육과정, 기타 과정 등 7개 온·오프라인 과정에 걸쳐 총 135회 5,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공공과정, 교원과정, 시민과정, 2030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4만 6,577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도에 구축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여 대면·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하였다.



#### 2021년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과정 구분	전문 과정	공직자 교육과정	학교통일 교육과정	사회통일 교육과정	글로벌 교육과정	특별 교육과정	기타과정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	합계
인원	320	2,928	621	421	312	440	111	446,577	451,730

전문과정으로는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 통일미래 기획 과정,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 및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320명을 교육하였다.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은 사회 저변에 통일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제고하였다. 범국가적·범정부적 평화·통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정책지도자 과정과 4~5급 상당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미래 기획 과정을 운영하였다.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5.6.~11.25.)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2.1.~12.10.)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은 일선 공공기관, 학교,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현장에서 북한·통일문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통일교육 강의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기법 및 강의 자료 제작기법을 전달하는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2021년 과정에는 총 13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30세대 대학(원)생 및 졸업생,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직자 통일교육과정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통일정책을 보다 잘 이해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데 중점을 두고 2,928명을 교육하였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광역지자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을 통해 통일교육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4.6.~12.21.)



지방자치인재개발원반(10.21.~22.)

학교통일교육과정은 각급 학교 교사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으로 621명을 교육하였다. 동 과정은 한반도 통일 환경과 남북관계 현황, 북한 동향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유치원 원장(감), 초·중·고등학교 교장(감) 및 교사, 장학관(사) 및 교육연구관(사), 교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 교육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도 실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과정은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 및 종교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평화통일에 필요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2021』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동서횡단 행사 3회, 구간별 행사 5회)의 행사를 실시하여 총 386명(연인원 2,198명)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잠정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행사를 운영하였다.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2021」(6.15.~11.13.)

글로벌 교육과정은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통해 국내외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통일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개설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통일교육의 외연을 넓혀나갔다.

정부는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국, 영국, 스웨덴에서 4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29회의 특강과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연인원 580명이 참여하였다.



스웨덴 ISDP와의 업무협약식(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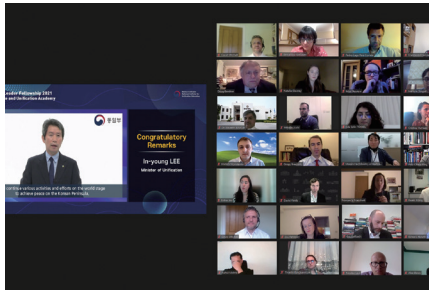


해외 초빙교수 특강(11.8, 한양대)

해외 신진학자 평화통일 아카데미(Emerging Leaders Fellowship)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차세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의 실상을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전달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28개국에서 학자, 언론인, 공무원, NGO 활동가 등 58명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주한 외국인, 해외 유학생,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총 4회의 글로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54명이 참석하였다.



해외 신진학자 평화통일 아카데미(6.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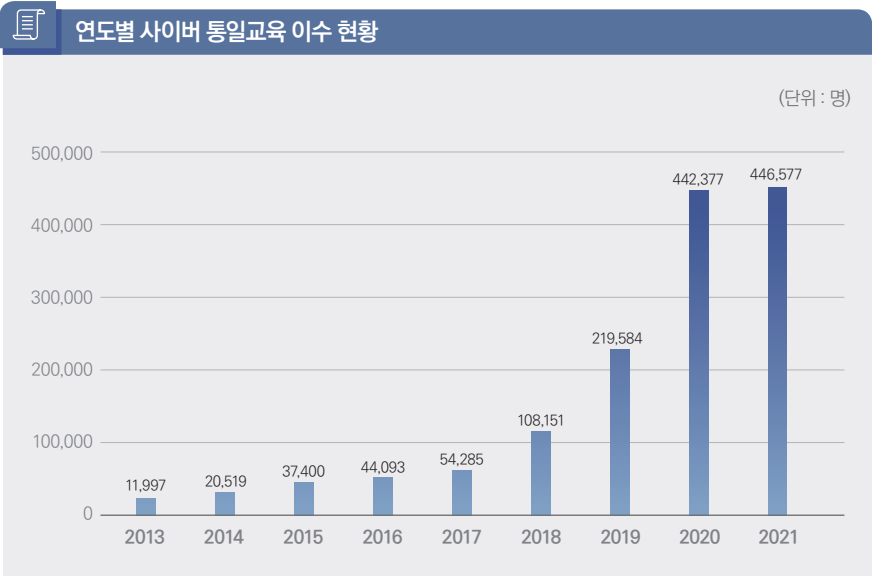


주한 외국인 통일 아카데미(7.6.~7.)

사이버 통일교육은 2020년 44만 2,377명이 이수하였고, 2021년에도 44만 6,577명이 이수하여 최근 2년간 40만 명 이상의 수강인원을 기록하였다. 공무원·공공기관 외에도 일반시민들의 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30 세대 과정과 시민과정 전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가 만드는 평화통일 콘텐츠 이벤트', '사이버 통일교육 학습후기 이벤트' 등 참여형 이벤트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사이버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러닝 서포터즈'를 신규로 운영하였다. 서포터즈는 7월부터 11월 까지 5개월간 기존 사이버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신규 콘텐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등 125개 기관에 사이버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2019년부터 일반 국민들의 통일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을 본격 추진 하였다. 2021년에는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카카오톡 등 5개의 뉴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기반의 「짤막 시리즈」, 인스타그램 기반의 「인스타툰」, 「시툰」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립통일교육원의 5개 뉴미디어 채널의 구독자 수는 총 3만 8,913명에 달한다.

##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도서·영상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통일교육 기본교재 2종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매년 발간해 왔으며 2021년에는 ‘평화’를 다루는 『한반도 평화 이해』를 추가하여 기본교재를 ‘통일·북한·평화’ 3종 체제로 정비하였다.

2021년에는 명사특강 시리즈 『MZ세대가 궁금해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이야기』, 청소년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사회통합형 평화·통일교육 도서 『Doing Hope : 공감과 연대의 사회를 위하여』, EU 사례를 통해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는 『EU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찾다』, 인기 사이버 강좌를 읽기 쉽게 핸드북으로 만든 『평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등 다양한 도서를 각 1,000~2,000부씩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특히, 시중 판매용 인문 대중 도서 시리즈로 기획된 『손 안의 통일』은 2019년 첫 발간 이후 매년 5종씩 총 15종이 발간되었다.

유아, 초등학생 대상 자료로는 통일 그림동화 네 번째 이야기 『그래! 달라도 괜찮아!』와 초등 저학년용 놀이북 『출발! 한반도 평화 탐험대』가 있다. 2020년에 발간한 통일 그림동화 『사라진 마법의 구슬』은 장애인을 위해 오디오북, 점자책으로 발간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이외에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 『북한 지식사전』 개정판과 사회적 대화 방식을 활용한 중등용 교재를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발간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에 평화 메시지를 담은 ‘평화 다이어리’와 ‘평화·통일 커피·차 세트’를 제작하여 통일교육 자료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TV 방송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고품질 영상을 제작·방영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JTBC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 : 하동균·김예림 편」(7.27.)과 MBC every1 「어서와 한국은 처음 이지 : 조나단·다니엘·알베르토의 철원 평화투어 편」(11.18.)을 제작·방영

하였다.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인 KBS1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에 한반도 평화  
염원 메시지를 담아 방영한 강원도 철원 편(6.5.)은 시청률 7.3%(107만 명 시청)를  
기록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협업하여 「브레드 이발소 시즌  
3 : 초콜릿 장벽 편」, 「반지의 비밀일기 특집편 : 고양이와 수상한 사촌」을 제작·  
방영하였다. 2020년 말에 방영된 「신비아파트 크리스마스 특별편 : 할머니의  
소원, 북에서 온 밀동귀 편」 영상은 유튜브 게시 이후 누적 조회 수 240만 회를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2019년부터 초·중·고 교과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클립 영상」  
(3~10분 분량)과 교사용 활용 가이드 자료를 개발해오고 있다. 동 자료를 국립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와 교사용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에 탑재하여 일선 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쉽게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민간 유튜브 채널과 협업을 대폭 확대하여, 각 채널별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상을 제작·송출하였다. 방송연예인 출연 등의 방식으로  
통일에 관심이 적은 젊은층들도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2021년 개발 주요 통일교육 자료



「브레드 이발소 시즌 3  
: 초콜릿 장벽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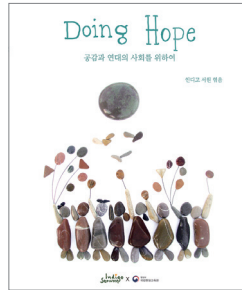
「반지의 비밀일기  
: 고양이와 수상한 사촌」



「교양만두」



영사특강



「Doing Hope : 공감과 연대의 사회를 위하여」



초등 저학년용 놀이북



통일 그림동화



인문학 시리즈 『손 안의 통일』



2021년 개발 도서자료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기본 교재	통일문제 이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 역사 속에서의 통일, 남북관계의 전개, 국제 질서와 한반도 통일, 통일방안, 한반도의 비전과 과제	대학생, 일반성인 등
	북한 이해	북한 이해의 관점,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대외정책 및 관계, 군사 전략과 군사력, 경제 현황과 변화, 교육과 문화, 사회와 주민생활	
	한반도 평화 이해	평화의 필요성, 평화의 의미, 평화의 형성과 전망, 한반도 평화의 현실과 지향, 한반도 평화 구축, 역대정부의 평화 정착 노력, 한반도 평화의 비전과 과제	
그림동화	그래! 달라도 괜찮아!	명절을 맞아 남북의 동갑 친척 아이들이 만나 익숙하고 낯선 음식·놀이문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내용을 따뜻한 그림체로 표현한 동화책	유아
오디오북 점자책	사라진 마법의 구슬	구슬기차여행·순천(남북 통일 지명)을 소재로, 남북한 어린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내용의 동화를 시청각 장애인용 교재로 제작	장애인
학교 교육	출발! 한반도 평화 탐험대 (통일 놀이북)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활동 놀이를 즐기며 북한 평화·통일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초등학생 (저학년)
	Doing Hope : 공감과 연대의 사회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차별과 혐오, 환경·불평등 문제 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 삶의 양식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청소년들의 솔직하고, 생생한 생각을 담아낸 사회통합형 평화·통일교육 도서	중고생, 교사, 일반성인
	사회적 대화 활용 중등용 평화·통일 교육 교재	숙의토론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화 및 통일, 북한 등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평화·통일 인식 변화를 유도	중학생
교사용 지도서	2021 통일교육 클립 영상 활용 가이드	학교 수업용 '교과 연계 클립 영상' 18편의 활용을 위한 교사용 안내서	교사
명사특강	MZ세대가 궁금해 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 이야기	학자, 외교관, 전·현직 관료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선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각을 다각화하고,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는 특강	
손 안의 통일 (5종)	생태의 시대와 DMZ	기후위기, 코로나 등 갈수록 중요해지는 생태학의 관점에서 남북 분단과 통일 후 미래상을 그려보고, 공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	대학생, 일반성인 등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	북한의 최근 관광산업 육성(인프라 설치, 여행상품 개발 등)에 대해 조명하고, 북한의 대표 명소를 소개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	1990년대 이후 북한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들을 6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주제별 영화에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묘사의 특징과 그 의미를 서술	
	DMZ를 보고합니다	DMZ의 생태적 가치, 보존 협력 방안, 민통선-접경지 남북생태 공동체 발전 방안 등을 고찰하고 남북협력 공간으로서의 DMZ의 의미 조명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참고 자료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	베를린의 분단과 통일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미완의 분단국 수도로 남아있는 서울과 평양의 미래를 조망	대학생, 일반성인 등
	EU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찾다	EU 경제통합 사례의 성과-한계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한반도 경제통합 모델 탐색	
	북한지식사전	북한의 정치, 군사, 대남 대외,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표제어를 선정, 감정은 체제의 정책·담론(표현)·기관(조직) 등 현황에 대해 집성한 사전(5년 주기 발간)	
	평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세 가지 키워드(평화, 경제, 도시발전)를 통해 북한 도시 평양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공존 번영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핸드북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정부·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여성·생태 분야로 나누어 분단 이후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표출되어 온 통일담론을 정리, 성찰의 결과를 담아낸 전문가용(유관 전공자용) 도서	



## 2021년 개발 영상자료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학교용 클립 영상	냉전, 탈냉전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와 탈냉전 흐름이 세계 각국과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분단이 종식되기를 기원	초·중·고생 및 교사
	남북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	1971년 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걸어온 길을 살펴보는 영상	
	북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	북한 친구들이 즐겨 읽는 전래동화를 알아보며 남북 간 공동체성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	
	남북 김치문화 : 역시 이 맛이지	분단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식생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한의 김치와 김장문화를 알아보고, 남북 간 공동체성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시즌3 : 초콜릿 장벽 편	베를린 장벽을 모티브로 우리의 분단 현실과 극복 노력, 남북 간 교류와 소통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전달	초등학교 ~ 성인
	월크의 디저트 이야기 : 냉면 편	남북이 즐겨 먹는 냉면의 유래와 역사적으로 흥미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남북 간 공동체성 확인	유아, 어린이
	반지의 비밀일기 : 고양이와 수상한 사촌 편	탈북청소년과 고양이를 소재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배제(상호 이해)와 존중, 포용의 가치 전달	
	사라진 마법의 구슬	구슬기차여행 순천(남북 동일 지명)을 소재로, 남북한 어린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내용의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공공 영상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코로나19,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한반도 이슈와 주변국 상황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성인 등
	생태한반도, 남북 공동의 미래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신안보 위협을 겪으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간과 자연,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 한반도의 중요성과 남북 환경·생태 협력 분야 소개	
유튜브 콜라보	평화를 지켜주세요	통일교육주관을 맞아 평화를 지키러 국립통일교육원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방문한 이달의 소녀 '츄'의 평화 브이로그	1020세대
	남북이 철도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꼭 가보고 싶은 북한 핫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유럽에 도착한 역사적 사례 (나혜석 화가, 손기정 선수), 철도 연결의 의미와 전망, 북한 명소 등 소개	1030세대
	연애 블랙리스트 (북한 청춘 남녀의 사랑과 연애)	북한 청춘남녀의 사랑, 연애, 결혼문화를 알아보고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메시지 전달	2030세대
	장성규 부자의 임진각 평화소풍	방송인 장성규가 가족과 함께 임진각을 방문하여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평화, 분단, 이산가족, 6·15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평화 염원의 메시지 전달	
	갈등 읽어드립니다 (역사편, 크로 스 강연편, 대담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갈등과 사회통합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의한 교양 예능형 지식 콘텐트(3편)	2040세대
	알베르토, 다니엘, 렉키 3인방의 갈등과 사회통합 이야기	갈등에 대한 354 멤버들의 생각과 각국의 갈등 사례(인도 카슈미르 분쟁, 이탈리아 남북갈등, 독일 통일)를 알아보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성 모색	
TV 방영	JTBC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 하동균·김예림 편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평화' 관련 노래(라구요, Imagine)를 부르며 분단의 아픔 해소,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 (TV, 유튜브 동시 편성)	2030세대
	KBS1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강원도 철원 편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아름다운 평화의 꽃을 피워가며 살아가는 철원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조명	전 국민
	MBC every1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한국살이 외국인 조나단·다니엘·알베르토의 철원 지역 평화 투어	



### 3 통일교육주간 운영

정부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미래세대의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진행(5.24.~30.)하였다. 「제9회 통일교육주간」은 정부, 각급 학교, 통일교육 관련 단체와 일반 국민 등이 참가하여 활발한 소통과 참여의 시간을 가졌다.

개막행사는 ‘통일, 우리의 미래에게’를 주제로 통일교육주간 최초의 현장 참석 - 온라인 청중단 참여 - 유튜브 중계·시청의 3원 연결 온라인 중계로 진행하였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이문수 신부와 함께하는 맛있는 토크 콘서트’는 청년의 꿈과 희망, 평화에 대해 뮤지컬 배우·대학생·온라인 청중단이 함께하고 유튜브로 중계하였다.



통일교육주간 소개



통일교육주간 '토크 콘서트'(5.24.)

통일교육주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28종 200여 편의 강의안, '통일 보드 게임', '출석 체크 이벤트', '내가 반한 선택'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통일부 UniTV와 협업하여 「통일교육주간 특집 '내가 반한 통일교육'」을 자체 제작하고 「이달의 소녀 '휴', 「사피엔스 스튜디오(3편)」 등 방송사 협력 콘텐츠를 유튜브로 송출하였다.



「이달의 소녀 '췌」



「내가 반한 통일교육」

통일교육주간에 진행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53개교를 방문하고, 전국 초·중·고 92개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통일교육주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9개교는 명사초청 좌담회, 북한토크문화콘서트, 통일 스타트업 경연 대회, UCC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지역 유관기관 연계 및 교과 연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주간을 전·후로 자체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각 지역의 통일교육센터 7곳과 통일관 9곳에서도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서울통일교육센터는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온라인 「제6회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를 개최하고, 통일관에서는 남북전래놀이, 통일 가상현실 체험 등을 진행하였다.



## 제9회 통일교육주간 편성표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내용
내가 반한 통일이야기	제9회 통일교육주간기념식	국민의례, 기념사·축사·환영사,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 (실황 중계)
	토크 콘서트	명사초청 토크 콘서트 (실황 중계)
	카드 뉴스	SNS로 전하는 통일교육주간 소식
내가 반한 통일챌린지	기념식 참석 이벤트	기념식 온라인 참석 이벤트
	출석체크	매일 통일교육주간 홈페이지 방문, 스탬프 받기 이벤트
	유니프렌즈와 숨바꼭질	통일교육주간 홈페이지에 숨어있는 유니프렌즈 캐릭터 찾기
	통일보드게임	통일교육 교구재 보드게임 나눔 이벤트
	오늘의 픽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통일, 평화, 사회통합적 가치 이미지 (사진) 공모
	내가 반한 선택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것 선택하기 이벤트
	만족도조사	통일교육주간 만족도 설문조사
이젠 통일못 탈출	응원메시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응원메시지
	현장이야기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역통일교육센터 등 다양한 통일교육 현장에서 보내온 영상
	명사특강	다양한 분야 전문가 5명의 온라인 특강
	학습강의안	통일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및 PPT 자료 등 11종
	클럽영상	애니메이션, 토크쇼, 다큐멘터리, 예능 등 통일교육 참고자료 46편
	통일교육교재	도서, 영상, 특집방송 등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 제공
	놀이퀴즈하니	놀이형 통일교육 교구재, 게임 등의 사용법 동영상 안내
	문화클라쓰	뮤지컬, 미술, 예능, 여행 등 다양한 형식의 문화예술 콘텐츠
	온라인포럼	통일미래세대의 생각을 들어보는 온라인 댓글 포럼
뉴미디어	유튜브	예능, 교양 등 다양한 유튜브 채널 협업 영상 「이달의 소녀 쉼」, 「사피엔스 스튜디오」, 「모비딕」 등
	뉴미디어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활용 뉴미디어 콘텐츠 제공
연계프로그램	제6회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	제9회 통일교육주간 계기, 통일교육협의회·서울통일교육센터 공동 주최 온라인 프로그램
	수유산책	국립통일교육원 견학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통일교육

제7장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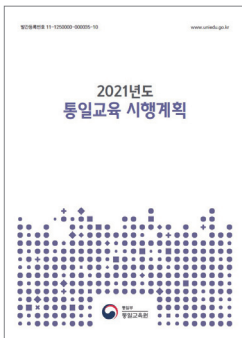
#### 4 통일교육 방향 정립 및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2021년 3월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통일교육의 추진방향을 담은 「통일교육 시행계획」은 2019년부터 1년 단위로 수립해 오고 있다.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은 통일부,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등 42개 기관의 계획을 종합·정리하여 범부처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과제별(7개 정책과제와 32개 세부 추진 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이 주관하는 사업 및 각 기관의 사업 내용, 2020년 평화·통일교육 추진 실적, 2021년 시행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에는 평화·통일교육 확산 및 사회통합형 통일교육으로의 외연 확대, 공공부문 통일교육 내실화,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추진 등 평화·통일 운동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기관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경영 기준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립통일교육원이 정부기관 최초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고자 민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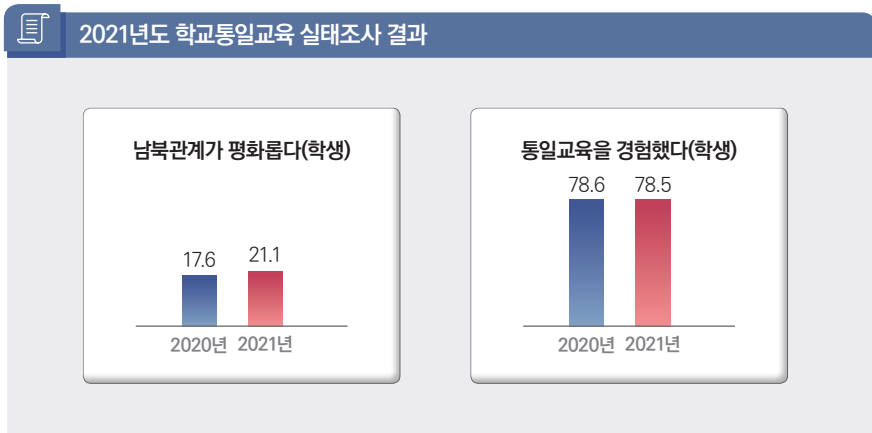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국립통일교육원 ESG 기획 회의(11.18.)

정부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협조를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학교통일교육을 위해 2014년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통일교육주간(5월)과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12월)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스웨덴 ISDP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일교육 기본방향과 주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5] 평화·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체계 연구·분석 및 장기적인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연구센터」를 2020년 12월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예규」를 제정하였고,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용역,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을 운영하였다.

2021년 센터는 통일정책 방향 수립 및 중장기 교육 내용체계 개발 관련 연구용역 2건을 추진하였다. 현 시점에서의 통일담론 관련 쟁점을 고찰, 향후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통일담론 쟁점 및 통일교육 발전방향」 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세계시민과 민주시민 교육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의의 평화통일교육을 점검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내용체계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통일교육 발전 방안」 용역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연구 성과 공유 및 대내외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해 연구 용역 보고회를 공동 심포지엄 형태로 개최하였다.

센터는 연구 기능 강화 및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브라운백 세미나」, 「글로벌 세미나」 등을 운영하였다. 세미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한반도 정세’, ‘한미정상회담과 북한’ 등 국내외 정세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편, 센터는 국립통일교육원 원내 신규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조기 안착을 위해 통일미래 대비 통일전문가 양성 과정인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의 세부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센터는 평화와 통일, 사회통합 등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2021년 저널 『평화와 통일』 창간준비호를 발간(12.31.) 하였다. 창간준비호에는 남북관계, 국제 정세, 통일교육 등 학계와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론과 연구들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센터 글로벌 세미나 개최 (10.27.)



'사회통합형 평화통일교육 방안을 탐색하다' 심포지엄 개최(11.4.)



##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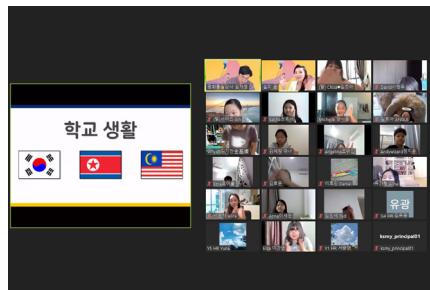
#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 1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2021년 전국 초·중·고교 학생 16만 9,793명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총 1,276회 실시하였다. 이는 교구와 교재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 ‘통일리더 캠프’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전국의 초·중·고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캠프 110회, 대면 캠프 15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2020년에 이어 재외 한국학교 대상 비대면 특별캠프를 확대 개최(3회→12회) 하였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4.7, 서울 은정초등학교)



초등학생 통일리더 캠프(11.18.)

정부는 학교별 수요와 실정에 맞는 체험형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통일체험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 총 160개 초·중·

고교에 학교통일체험교육 운영 컨설팅 및 체험 경비를 지원하였다.

통일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을 통일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10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20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어린이 기자단은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월별 기사 작성, 평화·통일장소 현장 견학, 여름캠프,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 합창단 및 방송반 운영 등 통일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을 매개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8회 청소년 평화·통일문화 경연 대회」도 개최하였다. 2021년에는 「창작 통일 동요 공모전」, 「창작 통일 노랫말 공모전」, 「평화 웹툰 공모전」등 3개 부문으로 운영하였다. ‘통일 동요’는 58곡이 응모하여 9곡이, ‘통일 노랫말’은 139편이 응모하여 10편이, ‘평화 웹툰’은 28편이 응모하여 8편이 수상하였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5.7.)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 수상작(대상)

## 2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학교통일교육의 모범사례 개발과 확산을 위해 2021년 전국 36개의 초·중·고교를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자료를 지원하는 한편, 운영에 대한 자문도

하였다.

또한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우수 지도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9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74편이 출품되어 14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대회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연계한 ‘블렌디드 러닝’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학교통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장학사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을 11월부터 대면 방식으로 총 5회 개최하였다.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10.25, 충남 북일고등학교)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발표심사(11.12.)

### 3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정부는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주요 권역별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육성하여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 6개 대학(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 3개 대학(강원대, 인제대, 한동대)을 추가 선정하였다. 2020년에는 사업이

종료된 2016년 지정 대학을 대체하여 5개 대학(경기대, 서울교대, 대진대, 충북대, 전북대)을 새롭게 선정하고 1개 대학(승실대)을 재지정하여 2021년 현재 9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선도대학들은 그동안 개발한 모델을 주변 대학으로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왔으며, 2020년 선정된 6개 대학은 2년차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선도대학에 대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대학별 추진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선도대학 사업이 종료된 대학을 포함한 7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일교육 협력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9개 선도대학과 7개 협력대학은 현장체험, 학생 세미나 등 공동 개최, 연합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각 대학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사업은 대학생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대학에 통일·북한 관련 특강 및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40개 대학에 22개의 통일 특강과 33개의 통일 강좌를 개설하여 총 1만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간 연합학술회의 등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정보의 공유·확산에 노력하였다.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 제고와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공모」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2021년 「제40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영상 공모」에 논문 28편, 홍보영상 10편이 응모되었다. 논문 입상작은 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홍보영상 입상작은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연합 학술회의(11.19.)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술회의(12.21.)

### 1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회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3에 따라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역 통일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업 운영체계를 7개 권역(서울·경인·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 단위로 개편하였다.



#### 2021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권역	센터명	지정 기관
서울	서울통일교육센터	국민대학교
경인(경기, 인천)	경인통일교육센터	아주대학교
영남(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영남통일교육센터	경남대학교
호남(광주, 전북, 전남)	호남통일교육센터	(사)우리민족
충청(세종, 대전, 충북, 충남)	충청통일교육센터	서원대학교
강원	강원통일교육센터	한라대학교
제주	제주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전국 7개 권역별로 지정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기본·특화·연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사업’으로 통일강좌, 통일 체험학습,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일 순회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교육 전문강사 활용도 제고 및 수요자 맞춤형 통일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화사업’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연합사업’으로 권역 단위 경연·행사·축제 등 권역 내 지역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회 평화 화폐 디자인 공모전」  
(서울 통일교육센터)



평화 통일 체험학습  
(강원 통일교육센터)

한편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대면·비대면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대면 교육 방식 외에도 지역·수요자·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모색하였다. 2021년 한 해 동안 약 21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메타버스 콘텐츠('DMZ 너머 백두산까지') 제작  
(경인통일교육센터)



마술로 배우보는 통일 이야기  
(호남통일교육센터)

아울러 정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교육청·학교·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또한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통일강좌 등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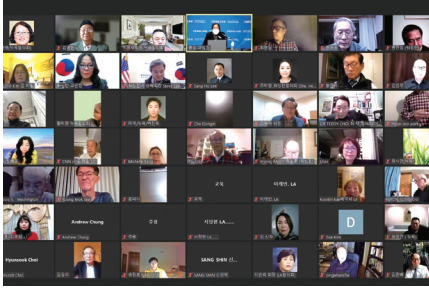
## 2 통일교육위원 교육 활동 및 통일교육 민간단체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1987년부터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020년에는 제22기 통일교육위원 710명을 위촉하였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통일교육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내 통일교육위원 연찬회(4회), 해외 위원 온라인 연찬회(2회), 명사특강(5회) 등을 실시하였고,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관련 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위원 초청 연찬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해외에서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해외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자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해외 통일교육위원 온라인 연찬회(11.24.)



워싱턴협의회 통일공감 토크 콘서트(12.6.)

한편, 정부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2000년에 설립된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의 협의체로, 76개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정부는 30개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사업에 2억 7,440만 원을 지원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제3회 대학생 기자단 통일기사 경진대회, 회원단체 실무자 통일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청소년·시민 분과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제6회 통일공감 평화통일 축제」(5.24.~30.)를 개최하는 등 회원단체 간 연대사업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교육 저변확대를 위해 종교계·사회단체·평생 교육기관 등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평화·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평화·통일교육이 평생학습에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평생학습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평화통일 국제 웨비나’를 공동 개최하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평생학습박람회에서는 평화·통일 부스를 운영한 바 있으며, 자유시민대학에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 ③ 통일관 운영

통일관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교육·전시 공간이다. 2021년에 고양 통일관이 신규 지정되어 현재 전국에 13개 통일관이 운영 중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통일부에서 설치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 통일관은 민간·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 통일관 현황

통일관명	위치	운영 주체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서울 통일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부산 통일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인천 통일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광주 통일관	광주광역시 서구	(사)우리민족
대전 통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 마케팅 공사
고성 통일관	강원도 고성군	(주)고성 통일전망대
양구 통일관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
청주 통일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청주랜드 관리사업소)
충남 통일관	충청남도 공주시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경남 통일관	경상남도 창원시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제주 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고양 통일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2021년에는 상·하반기(5~6월, 11~12월)에 지역 통일관에서 ‘VR 체험’, ‘온라인 남북 전래놀이 체험’, ‘찾아가는 이동 통일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대면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학생·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통일 전시·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연중 기획전시(4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행사·방송 지원 등 수도권외의 대표적인 통일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지속적인 전시환경 개선·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초청하여 위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기획 전시 「전방, 한반도 평화 이야기」(7.6.~9.30.)



파주 탄현면 어르신 초청 위로 행사(12.8.)

정부는 전국 13개 통일관에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다양한 통일교육 전시 자료와 체험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광주 통일관의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을 체험해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였다. 2021년 통일관 관람객은 2020년 38만여 명에 비해 약 15만 명이 증가하여 약 53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통일관을 방문하였다.

#### 4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일교육 실시를 의무화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었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실시되었다. 법률에 따라 교육 대상 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매년 1회(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육대상 기관들이 통일교육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 제공, 추천 강사 풀 제공, 교육용 도서·영상 자료 등 콘텐츠 제공, 공공 부문 통일교육 홈페이지 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의 경우 2,057개 기관에서 교육실적을 제출하였고, 약 67만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2,350여 기관이 교육실적을 제출하였고, 약 88만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한편, 2021년 교육은 2022년 2월 28일에 실적 제출이 마감되며, 3월에 최종 실적이 집계된다.

더불어, 지자체 합동평가에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지표를 반영하여 2022년부터 17개 광역 지자체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통일교육주간 행사 개최, 통일공감대 확산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5]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정부는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대화를 증시하는 2030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 소통,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제2기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토크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2기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는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었다. 피우지

(P-UZY)는 평화(Peace)와 통일(Unification)을 Z세대와 Y세대가 피어낸다는 의미로 2030세대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끌어 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4개 권역별(서울·영남·호남·중부권)로 운영되었으며, 평화·통일 이슈에 대한 사회 저명인사 강연, 참가자 질의·응답, 토론·합의 과정을 통해 2030 참가자들이 평화·통일 이슈에 대한 입장문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반기에는 평화·통일 관련 2030세대와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공간 마련 차원에서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수요가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행'이라는 소재와 '북한'이라는 지역을 연계하여 '랜선으로 떠나는 북한 여행'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토크 패널로는 최영준 통일부차관, 작곡가, 방송인, 가수 등이 참여하여 '북한 여행'을 소재로 서로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2030세대 참가자와 패널 간의 실시간 질의·답변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2기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아카데미」(5.27.-7.10.)



「2030 평화·통일 피우지(P-UZY) 토크 콘서트」(10.30.)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통일교육

제7장

부록



## 제4절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 1] 개황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통일 프로그램 운영,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 및 남북행사 지원 등을 위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센터)를 경기도 연천에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후 2021년 말까지 851개 단체, 연인원 19만 522명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2021년의 경우, 센터가 제6중앙생활치료센터로 지정·운영(2020.12.18.) 되면서 센터 입소 방식의 체험연수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찾아가는 체험연수'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형태의 체험연수를 적극 운영하였다.

### 2]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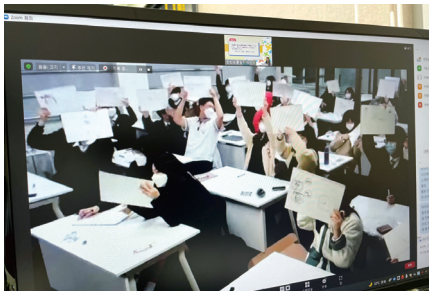
#### (1)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센터는 국내 유일의 정부 직영 통일체험기관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당일형과 1박 2일형, 2박 3일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입소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다만, 진행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전문 체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체험연수 프로그램 중 '통일로 가는 길', '톡톡톡 통일세대', '도전! 통일 골든벨', '나는 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ON', '통일 탐정 사무소', '통일 달력 만들기' 등 7개 주요 프로그램은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였다.

재설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전예약 학교와 지역 유관기관 10곳 약 7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체험연수를 운영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서도 연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비대면 체험연수(10.25, 안성가온고등학교)



비대면 체험연수(11.19, 음성생극중학교)

또한 충청·영남·호남·강원권의 초·중·고 및 청소년수련시설 38곳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평소 지리적 여건으로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의 의미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체험연수(9.7, 대구광역시 문화의집)



체험연수(11.3.~5, 화천정보산업고)

센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체험연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 체험활동 키트를 제작하였다. 또한 정부의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맞게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연수 콘텐츠도 확충하였다.



체험 키트(통일 ON)



체험 키트 활용 모습

## (2) 체험연수 운영기반 확충 및 환경 개선

센터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중계와 송출을 위한 스튜디오를 4월에 조성하였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통일체험연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의 실시간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비대면 체험연수 운영 스튜디오



편집·송출 장비 활용

또한 입소형 체험연수 운영 정상화에 대비하여 연수 시설 및 환경 정비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 스크린 일부를 LED 디스플레이로 교체·설치하였으며, 야외 체험장(한반도투어링장) 공간에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도로표지판 트릭아트(Trick Art)를 설치하였다.



연수시설 스크린 개선



아시안하이웨이 트릭아트

이와 함께 연수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관에서 체육관(어울림관)까지 이동로에 비막이 구조물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야외 공연장 무대와 야영장을 개선하여 쾌적한 통일체험연수 환경을 조성하였다.

센터 내 안전 확보와 보안 강화를 위해 CCTV를 교체하였으며, 침하된 구내 도로를 보수하고 경관 조명을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센터의 시설을 개선하여 연수생들의 시설 만족도를 높이는 개선 조치를 지속하였다.



이동로 비막이 설치



야외공연장 무대 개선

### (3) 코로나19 국가방역 정책 기여

센터가 제6중앙생활치료센터로 지정·운영(2020.12.18.) 됨에 따라 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가방역 정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관(112실), 가족 빌리지(6채), 미래체험관 시설 및 침구류 등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시설의 냉·난방 및 시설 유지보수, 운영사무실 청소, 소방 및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입소자 치료와 지원인력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도록 필요한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07

##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제1절 - 북한 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제2절 - 법·제도적 기반 구축

제3절 -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 제7장

##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ea.go.kr)과 북한자료센터(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5층 위치) 등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2021년에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주간의 북한 주요동향을 종합·분석하여 북한정보포털에 게시되는 「주간 북한동향」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였다. 개편된 「주간 북한동향」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한 주의 북한동향을 종합·분석한 핵심적 내용을 다루는 ‘주요동향’과 ‘일반동향’으로 구성하였고, 국민들이 「주간 북한동향」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보는 방식을 개선하여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신문 기사 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신문 열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고 북한자료 공개 범위 확대, 특수자료 취급기관 간 온라인 송수신 허용 등으로 북한자료의 이용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등을 토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도별로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한 남북관계발전의 기본방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중점 추진과제별로 2020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2021년도 계획을 제시하였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 대비한 다양한 법·제도 연구 및 정비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인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통일법제 현안 및 정책 연구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법제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학술회의 등도 개최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건)의 입법 목적이 적절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1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으로 총 1조 6,756억 원(사업비 1조 2,431억 원)의 지출계획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 이산가족교류 지원 사업, 인도적 지원 및 민생협력 지원 사업,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 제1절

## 북한 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 1 북한정보포털 운영

정부는 2011년부터 북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구축해 왔다. 2013년에는 북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포털시스템(nkinfo.unikorea.go.kr)을 구축하여 2014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이후 자료와 DB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일일·주간·월간 단위의 동향,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분야별 현황, 그리고 인물, 사전, 통계, 간행물, 영상 등 참고 자료가 있다. 부가 서비스로 북한 TV프로그램 편성표, 권력기구도, 북한 주요행사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약 30만 건의 지명과 시설명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북한지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북한 관련 정보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간 북한동향」을 개편하여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분석을 담아 더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자료센터와 연계된 ‘북한신문 기사 목록’과 미국, 중국 등 주변국 주요인사들의 북한 관련 공식적인 언급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의 ‘자발적국가보고서(VNR)’를 활용하여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의 지표별 통계 자료와 함께 시각화된 그래프를 제공하였다.





도서관 본관 5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국민의 북한 이해 제고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 정보 공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노동신문 등 북한 신문 4종의 기사목록 100만 여 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북한정보 검색률을 제고하였으며, 홈페이지 접속 건수도 전년대비 50% 이상(85만여 건)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자료 공개 범위 확대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 간 온라인 송수신 허용 등 북한자료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북한신문 기사목록 홈페이지 게재 전·후 검색결과 화면

북한자료센터는 2010년부터 북한자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이용 증가에 따라 열람용 PC를 확충하였으며, 「조선중앙TV」 전용 PC를 설치하고 북한영상 디지털 콘텐츠를 아카이브시스템에 업로드함으로써 「조선중앙TV」 내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북한자료센터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전 예약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열람 인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한 북한자료 중 사료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1940~1950년대 북한 원본을 발굴하여 별도 전시공간도 마련하였다.



「조선중앙TV」 전용 PC 설치



1940~1950년대 북한 원본 자료 전시

센터는 통일·북한 관련 단행본 8만 1,000여 권, 정기간행물 1만 3,900여 권, 비도서자료 1만 100여 건, 통일부 발간 도서 6,800여 권 등 총 11만 2,569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는 단행본 2만 3,773건 등 총 3만 5,837건을 소장하고 있다.

 **북한 발행 자료 보유 현황**

(단위 : 건, 2021.12월 말 기준)

구분	단행본	정기간행물	비도서 자료	계
보유 건수	23,773	4,712	7,352	35,837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소장 자료 및 기사 목록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 영화 소개와 북한 교과서 및 북한 만화 소장 목록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부 발간 자료 4천여 건과 통일연구원 발간 자료 3천여 건의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는 통일·북한 관련 학술DB 9천여 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원문DB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4,700여 편의 북한 영화를 소장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기관 또는 단체가 북한 영화 상영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북한 예술 영화 200편을 대상으로 '북한 영상자료 분석 및 활용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더 많은 북한 영화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영화 상영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2절

## 법·제도적 기반 구축

## 1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1) 수립 경과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4차년도 계획인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월부터 3월까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총 41개의 중앙 행정기관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였다.

3월 4일부터 17일까지 통일부차관(위원장) 및 각 부처 고위공무원(위원)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검토(서면 회의)를 거친 후,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일부장관(위원장) 및 14개 부처 차관과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동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이후 정부는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4월 26일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4월 27일 국회에 보고한 후 5월 3일 관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였다.

## (2) 주요 내용

미국 신정부 출범,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 정세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마련된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의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관계의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주로 담았다.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계획들도 포함하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협력을 시작으로 남북 간 포괄적 보건·방역·환경·산림협력 및 민생협력 패키지 구상을 이행하려는 노력과 함께, 민간·지자체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대북정책에 있어 분권·협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통일국민협약안」공론화, 주요국과의 정책협력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내·외 지지기반 강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자 하였다.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 정한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1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7대 중점 추진과제 및 16개 세부과제

7대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1.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
	1-2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
2. 남북대화	2-1 남북대화 재개
	2-2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3. 남북교류협력	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3-2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4-2 남북경협 준비
5. 인도적 협력	5-1 이산가족 등 문제 해결
	5-2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5-3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제고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 기반 구축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정부는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 따른 과제들을 관계 부처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 2 통일법제 구축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업과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비한 다양한 법·제도 분야 연구 및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인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4회(3.12, 6.16, 10.7, 12.6.) 개최하여 통일법제 현안 및 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12월 16일에는 법무부·법제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유관부처 간 통일법제 관련 연구 결과와 향후 연구 사안들을 공유함으로써 통일법제 업무의 부처 간 중복을 피하고, 각 부처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더욱 심도 있는 통일법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2월 2일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와 함께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북한의 국토·환경·교통 관련 법제 중심)’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내 통일법제 연구 활성화와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남북연합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 분야 법제 개선방안, 남북연합 시대에 대비한 문화교류 분야 법제 개선방안 등 중장기 통일법제 기반 정책연구용역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통일부·법무부·법제처 공동학술대회(12.16.)

아울러 2021년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개정법률의 입법 목적이 적절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12.29. 일부개정)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3월 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 지침」(통일부 예규)을 제정하여 동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개정 법률의 원만한 시행을 통해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신체와 주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였다.

### 1 남북협력기금 수입

2021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4,929억 원이다.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수금의 이자 상환 및 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00억 원을 출연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공 자금관리기금에서 2,370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에서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05억 원과 증권사 등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214억 원 등 총 1,419억 원을 회수하였고, 자체수입은 사업비 정산 환입 등 140억 원이다.



#### 2016~2021년 남북협력기금 수입

(단위 :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0,607	11,967	6,411	4,008	7,941	4,929
정부출연금	925	1,830	637	1,000	1,500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여유자금 회수	7,242	2,304	2,789	846	624	1,419
자체수입	370	183	201	132	331	140

## ② 남북협력기금 지출

정부는 2021년 총 1조 6,756억 원(사업비 1조 2,431억 원 포함)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제318차~제322차, 총 5회) 및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제174차~제182차, 총 9회)를 개최하여 총 468억 원 지원을 의결하였고, 312억 원을 집행(2020년 이월 예산 5억 2,643만 원 집행액 포함,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2.5%) 하였다.

사업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남북 사회문화교류」 항목에서는 총 3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왔던 교육학술 협력사업인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에 25억 700만 원, 문화유산 협력사업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관련 디지털 복원 및 디지털 기록관 운영 지원에 4억 2,600만 원,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사업 지원에 4억 9,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이산가족교류지원」 항목에서는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영상 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비용,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으로 14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교류 주선 단체 지원 및 민간교류 경비지원 등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화상상봉장 증설에 6억 8,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대북인도적지원」 항목에서는 향후 대북 보건·의료협력을 대비한 연구용역 등으로 1억 9,900만 원,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민간단체 지원 등에 8억 400만 원, 대북지원 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지원에 7억 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 항목에서는 남북 간 협의 재개에 대비한 내부 준비



사업과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을 위하여 추진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였다.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민간 위탁 사업(「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34억 1,600만 원, 'DMZ 평화의 길' 조성에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외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운영 지원에 13억 9,600만 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43억 1,300만 원, DMZ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포럼 개최에 8억 8,400만 원 등 총 122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다.

「개성공단지원」 항목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개성 공업지구지원재단에 84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재개 준비를 지속하였다.

아울러,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항목에서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3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 밖에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황에 2,370억 원, 예수이자 상황에 461억 원 등 총 2,83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는 2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다.



### 2016~2021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41	42	42	70	32	31
	남북 사회문화교류	23	37	100	37	42	34
	인도적 문제 해결	23	20	78	358	151	40
	남북경제협력	3,848	405	1,760	197	128	122
	개성공단지원	1,359	181	138	88	88	84
	소 계	<b>5,295</b>	<b>684</b>	<b>2,117</b>	<b>750</b>	<b>442</b>	<b>311</b>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2,982	8,470	3,420	2,610	6,056	2,831
여유자금 운용		2,304	2,789	846	624	1,419	1,763
기금 운영비		26	25	28	23	23	23
<b>합계</b>		<b>10,607</b>	<b>11,967</b>	<b>6,411</b>	<b>4,008</b>	<b>7,941</b>	<b>4,929</b>

### 3 2021년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업 내용	금액	사업 구분	
2021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	3,12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75건, 3,121)	
2021년 거례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 지원 등	2,507	남북 사회문화교류 (15건, 3,424)	
2021년 개성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디지털기록관 운영 지원 등	70		
2021년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사업 지원 등	356		
2021년 개성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지원 등	493		
2021년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20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00	인도적 문제 해결 (39건, 3,988)	
2021년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85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684		
2021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92		
남북 농업협력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74		
북한 영유아 등 지원	730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 지원	705		
대북 비감염성 만성질환 협력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 지원	50		
국제사회 대북 보건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	50		
남북 감염학 용어집 발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0		
대북 감염성 질환 협력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 지원	50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0		
2021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지원	3,416		남북경제협력 (178건, 12,240)
2021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148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4,214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 지원	4,313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45	개성공단지원 (8건, 8,406)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기반조성)	6,10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운영대출)	2,302		
<b>총 집행액</b>	<b>31,179</b>	<b>총 315건</b>	



# 부록

## APPENDIX



- I - 남북관계 주요 일지
- II - 남북관계 주요 통계
- III -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 IV -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 1월

- 1.1. 北 김정은 위원장, 신년 계기 북한 주민 대상 친필 서한 송부
- 1.5.~12. 北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개최(노동·중통)
  -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거래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임.”
- 1.7. 대통령, 2021 신년인사회 인사말
  -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임.”
- 1.11. 대통령, 2021년 신년사
  -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음.”
- 1.12. 北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중통)
  - “해괴한 것은 남조선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뿜은 것임.”
- 1.14. 北,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 진행(노동·중통)
- 1.17. 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개최(노동·중통)
- 1.18.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
- 1.21.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

## 2월

## • 2.4. 한미 정상 통화

- 문 대통령,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
- 바이든 美 대통령,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 • 2.8.~11. 北,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개최(노동·중통)

## 3월

## • 3.1. 대통령, 제102주년 3·1절 기념사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임.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함.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임.”

## • 3.3.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 개최(노동·중통)

## • 3.8.~18.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

## • 3.15. 北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3.16, 노동·중통)

-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음.”
-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임.”

## • 3.17. 北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3.18, 중통)

-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임.”

## • 3.17. 한미 외교장관회담(서울)

## • 3.17. 한미 국방장관회담(서울)

## • 3.18.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서울)

## • 3.18.~19. 미중 고위급 회담(알래스카 앵커리지, 현지 시간)



- 3.22. 북중 정상, 구두 친서 교환
- 3.25.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3.26. 北 국방과학원, 3.25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함남 함주) 진행 보도(노동·중통)
  - “제8차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 정책을 관철하는데 중요한 공적”
- 3.26. 대통령,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 3.26. 北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3.27, 중통)
  -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떴었다고 생각함.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 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음.”
- 3.28. 北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3.29, 중통)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 산물인 유엔 《결의》 등에 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임.”
- 3.30.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해석지침」 시행
- 3.30. 北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중통)
  -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 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음.”

4월

- 4.2.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미국 아나폴리스, 현지 시간)
  -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3자간 조율된 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4.3. 한중 외교장관회담(중국 사먼, 현지 시간)
- 4.5. 北 올림픽위원회 총회(3.25.)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4.6, 체육성 홈페이지 「조선체육」)
- 4.6.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착수

- 4.8.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등 2건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 지원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심의·의결
- 4.12. 中 한반도특별대표에 류샤오밍 前 주북 대사 임명
- 4.27. 대통령, 「판문점 선언」 3주년 계기 국무회의 모두발언
  -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
- 4.30. 美 백악관 대변인, 대북정책 검토 완료 공표(현지 시간)
  -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요구하며, 이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 주둔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임.”
  - “우리는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일본, 다른 동맹들과 계속해서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임.”

## 5월

- 5.2. 北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노동·중통)
  -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임.”,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음.”
- 5.2. 北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중통)
  -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 5.3. 한미 외교장관회담(런던, 현지 시간)
- 5.5.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런던, 현지 시간)
- 5.10.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음.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음.”
  - “북한의 호응을 기대함.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램.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음.”
- 5.16.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 北 불참 최종 확인 (아시아축구연맹(AFC) 홈페이지)

• 5.21. 한미정상회담(워싱턴 D.C., 현지 시간)

-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음.”
-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대화과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음.”
-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음.”
-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음.”
-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하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5.31. 北, 「무엇을 노린 《미싸일지침》 종료인가」 보도(중통)

6월

• 6.4.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금리 조정(안)」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 6.4. 北, 김정은 위원장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 개최(노동·중통)

• 6.6. 대통령, 제66회 현충일 추념사

-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음.”

• 6.9. 한중 외교장관 통화

• 6.11. 北, 김정은 위원장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 개최(노동·중통)

• 6.12. 한미 외교장관 회담(영국 콘월, 현지 시간)

• 6.13.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영국 콘월, 현지 시간)

• 6.15.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 6.15.~18. 北, 김정은 위원장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진행(노동·중통)

• 6.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년

• 6.19.~23. 한미·한미일·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서울)

- 6.22. 北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중통)
  -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음.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음.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임.”
- 6.22. 통일부장관, 美 성 김 대북특별대표 접견(서울)
- 6.23. 北 리선권 외무상 담화(중통)
  - “우리 외무성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의 선부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하여 환영함.”
  - “우리는 가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음.”
- 6.24.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 유해발굴('19.4.1.~'21.6.24.) 종료, 424구 발굴
- 6.29. 北, 김정은 위원장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정치국 확대회의의 진행 (노동·중통)

## 7월

- 7.1. 北 김정은 위원장, 中 시진핑 주석에 ‘당 창건 100주년’ 축전(노동·중통)
  - “중국공산당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비방중상과 전면적인 압박은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며 그 무엇으로써도 총서기 동지의 두리에 뭉쳐 새로운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중국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음.”
- 7.5. 통일비전시민사회·시민참여단, 「통일국민협약안」 및 「권고문」 통일부장관에 전달
  - 통일부장관, “국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한 여야의 지지와 뒷받침을 이끌어 내도록 정성을 다하겠음.”
- 7.11.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 계기 북중 정상 친서 교환(노동·중통)
- 7.13. 北,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VNR)’ 발표(현지 시간)
- 7.21. 2032 올림픽 개최지 호주 브리즈번 확정(IOC 총회)
- 7.22. 통일부장관, 美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접견(서울)
- 7.24. 北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 중국 홍수피해 관련 위문 구두 친서 전달 보도(노동·중통)
- 7.27.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청와대 국민소통수석브리핑)

-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음.”
-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음.”

• 7.27. 北, 통신연락선 복원 보도(중통)

- “지금 온 거리는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남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하여 단절되어 있는 북남통신연락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하여 합의하시었음.”

• 7.29. 우리 측,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대북 제안

• 7.30. 통일부차관, 中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서울)

• 7.30. 통일부,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2건 승인

8월

• 8.1. 北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중통)

-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 볼 것임. 희망이나 절망이나?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음.”

• 8.6.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화상, 현지 시간)

- 北 안광일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

• 8.10. 北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노동·중통)

-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
-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함.”

• 8.10. 北, 남북통신연락선(남북공동연락사무소·군통신선) 미응답

- 09시 개시 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 군통신선 16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7시 마감통화에 미응답

• 8.11. 北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중통)

-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함.”

- 8.15. 대통령,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8.16.~26.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 8.23.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서울)
- 8.24.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서울)
- 8.25. 통일부장관, 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 접견(서울)

## 9월

- 9.8. IOC 집행위원회, 북한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22년말까지 정지(현지 시간)
- 9.13. 北 국방과학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9.11.~12.) 진행 보도(노동·중통)  
-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인 장거리순항미사일개발사업”
- 9.13.~14.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회의(도쿄)
- 9.14.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령  
-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민간 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 9.14.~15.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 한중 외교장관회담 및 대통령 예방
- 9.15.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9.15. 대통령, 우리 군, 첫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참관  
- “여러 종류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음.”
- 9.15. 北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회(중통)  
-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방을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파괴로 치닫게 될 것임.”

- 9.16. 北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훈련(9.15.) 보도(노동·중통)
- 9.17.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 9.20. 北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 명의, 우리 군, SLBM 시험 발사 관련 보도(중통)
  - “이번에 남조선이 공개하고 크게 광고한 미사일이 수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때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함.”
- 9.21. 대통령,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중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
  - “나는 오늘 한반도 ‘중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함”
- 9.24. 北 리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중통)
  - “눈앞의 현실은 중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중전선언은 허상에 불과”
- 9.24.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총 100억 원 이내 지원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에 11억 7,093만 원 이내에서 지원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7억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 9.24. 北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중통)
  - “중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함.”
- 9.25. 北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중통)
  -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 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함.”
- 9.27. 北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현지 시간)
  -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음.”
  -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음.”
- 9.28.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 9.29. 北 국방과학원,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9.28.) 보도(노동·중통)
- 9.29. 北 김정은 위원장,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함.”
- “10월 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
- 9.29.~10.4. 통일부장관,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 행사 참석 및 유럽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벨기에, 스웨덴, 독일 방문

## 10월

- 10.1. 北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진행(9.30) 보도(노동·중통)
- 10.4. 北, 09시부터 모든 북남통신연락선 복원 발표(노동·중통)
  - “남조선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
- 10.6.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3건 승인
- 10.11. 北 김정은 위원장,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10.11.~22.) 개막기념연설(노동·중통)
  -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임.”
  -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님.”
  -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음.”
- 10.12. 한미 국가안보실장 양자협약(워싱턴 D.C., 현지 시간)
- 10.16.~19.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워싱턴 D.C., 현지 시간)
- 10.19.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동(서울)
- 10.19. 北,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LBM 1발 발사
- 10.20. 北 국방과학원,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10.19.) 보도(중통·노동)
- 10.23.~24.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서울)
- 10.25. 대통령, 2022 예산안 시정연설
  - “대화외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음.”

- 10.28.~11.5.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10.29. 로마, 현지 시간)
  - 문 대통령,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임.”
  -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음.”
- 10.28.~11.2. 통일부장관, G20 정상회의 수행 계기 로마, 제네바 방문(현지 시간)

## 11월

- 11.1. 한중 북핵수석대표 화상협의
- 11.1. 대통령,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영국 글래스고, 현지 시간)
  -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임.”
- 11.11.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서울)
- 11.10.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 공동선언문 채택
- 11.11.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회의(APEC CEO Summit) 행사 기조연설
  -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람.”
- 11.14.~20. 한미·한미일 외교차관회담(워싱턴 D.C., 현지 시간)
  - 셔먼 美 국무부 장관, “미국은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파트너와 갖고 있는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 계속된 협의를 고대함.”
- 11.15. 미중 화상 정상회담(현지 시간)
- 11.17.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현지 시간)
- 11.20. ‘DMZ 평화의 길’ 7개 테마 노선 우선 개방
- 11.21. 北 외무성 대변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비난 담화(중통)
  - “우리는 우리의 국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 세력들의 가중되는 적대시 책동에 끝까지 강경 대처해 나갈 것임.”
- 11.30. 판문점 견학 재개

- 12.1. 北 김정은 위원장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 회의 개최(노동·중통)
- 12.1.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서울)
- 12.2.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서울)
- 12.6. 美,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현지 시간)
- 12.6. 유엔총회, 북한 핵·미사일 관련 결의안 3건 채택(현지 시간)
  -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 채택
- 12.10.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인권 관련 대북제재 추가(현지 시간)
  -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 △중앙검찰소 △리영길 전 사회안전상
- 12.1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기타의제(AOB) 下 북한인권 관련 비공개 회의(현지 시간)
- 12.16.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현지 시간)
- 12.24. 통일부, 10개 지자체 24개 협력사업 대상 사전 승인
- 12.27.~31. 北,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노동·중통)
  -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음.”

#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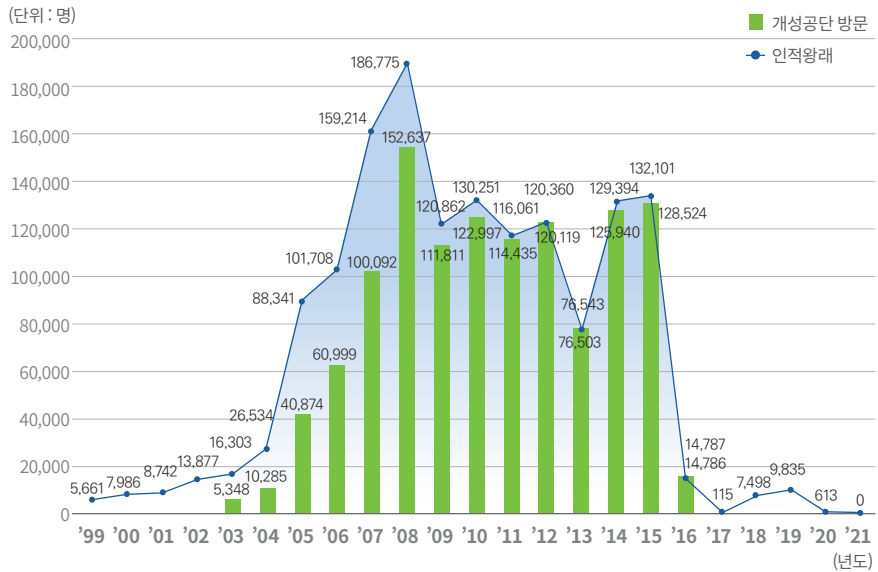
### ① 남북 왕래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89~'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북 (방북)	27,152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130,119	116,047
북→남 (방남)	1,534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132	14
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130,251	116,061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남→북 (방북)	120,360	76,503	129,028	132,097	14,787	52	6,689	9,835	613	-	1,470,695
북→남 (방남)	-	40	366	4	-	63	809	-	-	-	9,163
계	120,360	76,543	129,394	132,101	14,787	115	7,498	9,835	613	-	1,479,858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②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98	'99	'00	'01	'02	'03	'04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육로	-	-	-	-	-	36,028	267,971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개성 관광		-	-	-	-	-	-	-
평양 관광		-	-	-	-	-	1,019	-

구분	연도	'05	'06	'07	'08	'09~'21	계
금강산 관광	해로	-	-	-	-	-	552,998
	육로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1,381,664
	합계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1,934,662
개성 관광		1,484	-	7,427	103,122	-	112,033
평양 관광		1,280	-	-	-	-	2,299

③ 남북 차량 왕래 현황

(단위 : 회)

구분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차량 (운행횟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3,085	145,802	166,181	162,848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2,534	2,140	397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8,162	148,336	168,321	163,245

구분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차량 (운행횟수)	경의선	177,211	110,000	190,144	198,999	23,020	-	5,179	4,214	312	-	1,715,285
	동해선	16	294	524	548	-	-	820	30	-	-	178,762
	합계	177,227	110,294	190,668	199,547	23,020	-	5,999	4,244	312	-	1,894,047

제1장

제2장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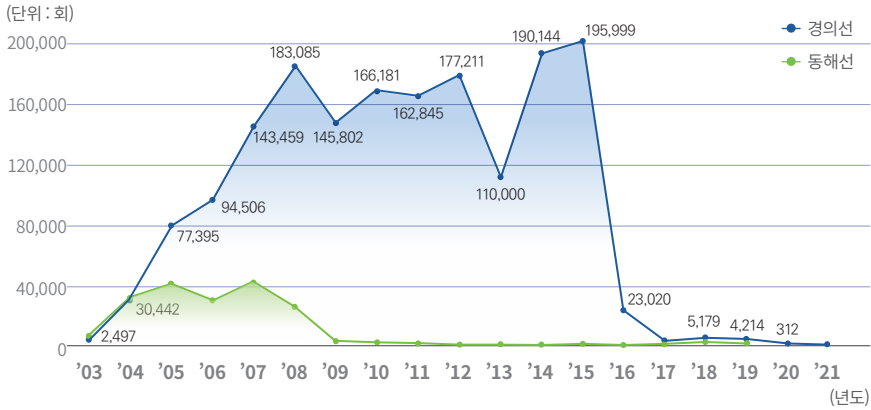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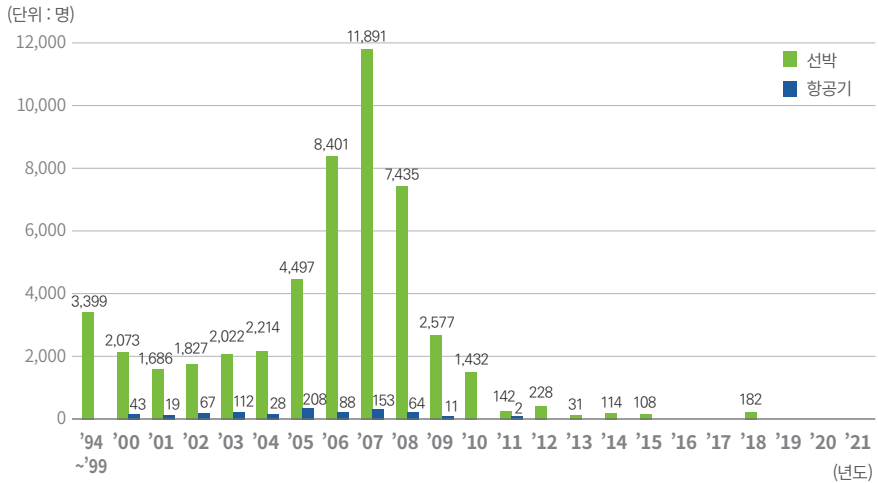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단위: 회(편도))

구분	연도	'94~'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선박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항공기		-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구분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선박		1,432	142	228	31	1	10	-	-	1	-	-	-	49,777
항공기		-	2	-	-	14	8	-	-	82	-	-	-	899



⑤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 출경 인원·차량 현황

(단위: 명/대)

구분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의선 육로	인원		3,643	24,164	66,772	84,100	144,971	263,258
	차량		1,249	15,314	38,868	47,352	71,857	91,309
동해선 육로	인원		39,395	296,924	335,713	266,541	384,911	223,972
	차량		3,143	15,585	19,852	14,724	20,035	12,456
출경인원 합계			<b>43,038</b>	<b>321,088</b>	<b>402,485</b>	<b>350,641</b>	<b>529,882</b>	<b>487,230</b>
출경차량 합계			<b>4,392</b>	<b>30,899</b>	<b>58,720</b>	<b>62,076</b>	<b>91,892</b>	<b>103,765</b>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의선 육로	인원		115,026	126,107	115,249	121,038	76,826	126,745	129,804
	차량		72,929	83,308	81,414	88,586	55,007	95,079	99,518
동해선 육로	인원		3,682	3,051	436	53	451	1,387	1,791
	차량		1,323	1,027	198	8	147	262	274
출경인원 합계			<b>118,708</b>	<b>129,158</b>	<b>115,685</b>	<b>121,091</b>	<b>77,277</b>	<b>128,132</b>	<b>131,595</b>
출경차량 합계			<b>74,252</b>	<b>84,335</b>	<b>81,612</b>	<b>88,594</b>	<b>55,154</b>	<b>95,341</b>	<b>99,792</b>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경의선 육로	인원		14,786	-	6,966	4,581	297	-	1,424,333
	차량		11,437	-	2,591	2,107	148	-	858,073
동해선 육로	인원		-	-	2,184	281	-	-	1,560,772
	차량		-	-	410	15	-	-	89,459
출경인원 합계			<b>14,786</b>	<b>-</b>	<b>9,150</b>	<b>4,862</b>	<b>297</b>	<b>-</b>	<b>2,985,105</b>
출경차량 합계			<b>11,437</b>	<b>-</b>	<b>3,001</b>	<b>2,122</b>	<b>148</b>	<b>-</b>	<b>947,532</b>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 2 남북교류협력 현황

### ① 남북교역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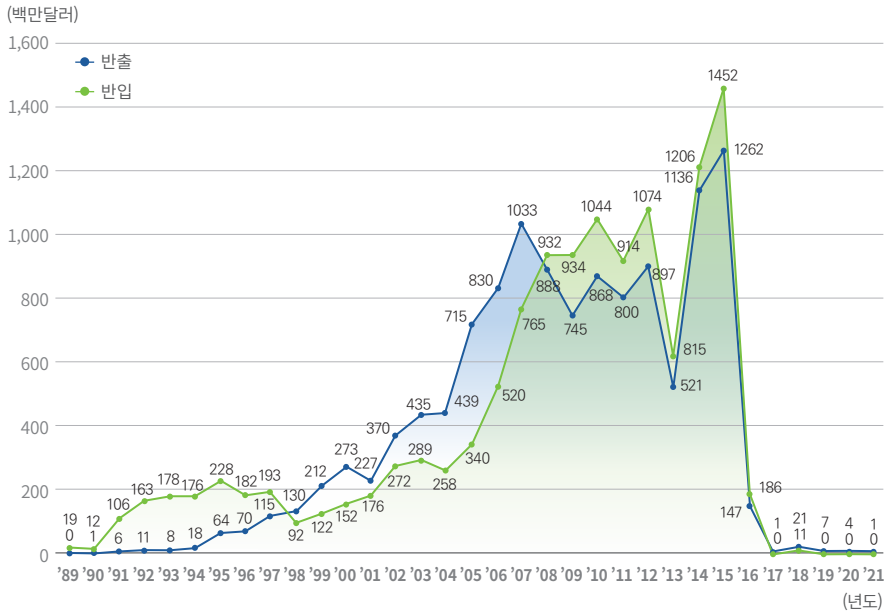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반출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합계	19	13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구분 \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반입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반출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합계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8	1,820	1,679	1,912

구분 \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반입	914	1,074	615	1,206	1,452	186	0	11	0	0	-	12,607
반출	800	897	521	1,136	1,262	147	1	21	7	4	1	12,255
합계	1,714	1,971	1,136	2,342	2,714	333	1	32	7	4	1	24,862

※ 반올림으로 인해 각 년도의 반입/반출 '소계'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1백만 달러 이하는 '0'으로 표시



## ② 남북교역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반입	66	79	300	510	601	708	976	1,475	1,806	1,963	3,089
반출	1	4	23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합계	67	83	323	572	698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구분 \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반입	3,952	4,720	5,023	6,356	5,940	9,337	16,412	25,027	31,243	37,307	39,800
반출	3,442	3,034	3,773	4,853	6,953	11,828	17,039	26,731	36,202	41,293	44,402
합계	7,394	7,754	8,796	11,209	12,893	21,165	33,451	51,758	67,445	78,600	84,202

구분 \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반입	33,762	36,504	20,566	38,460	45,640	5,352	1	212	49	2	-	377,238
반출	40,156	45,311	25,562	47,698	55,267	6,072	3	487	385	43	4	433,021
합계	73,918	81,815	46,128	86,158	100,907	11,424	4	699	434	45	4	810,259

## ③ 남북교역 품목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반입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반출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합계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구분 \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반입	201	204	186	202	381	421	450	482	486	448	363	377
반출	492	493	530	575	712	697	803	813	771	740	676	705
합계	549	570	588	634	775	757	853	859	822	795	702	731

구분 \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반입	359	349	362	226	1	238	82	2	-	910
반출	644	697	718	447	60	410	292	137	4	1,192
합계	674	718	742	489	61	412	294	137	4	1,207

※ 품목은 반입과 반출에서 중복되는 관계로, '계'는 항목 간 합과 일치하지 않음.

④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건)

구분	반입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경제협력(개성공단·금강산 관광·경공업 협력·기타)	비상업적 거래(정부·민간 지원/사회문화협력/경수로 사업)	총액	일반교역·위탁가공	경제협력(개성공단·금강산 관광·경공업 협력·기타)	비상업적 거래(정부·민간지원/사회문화협력/경수로 사업)	총액
2006	441	77	1	519	116	294	421	831
2007	646	120	0	766	146	520	367	1,033
2008	624	308	0	932	184	596	108	888
2009	499	435	0	934	167	541	37	745
2010	334	710	0	1,044	101	744	23	868
2011	4	909	1	914	-	789	11	800
2012	1	1,073	-	1,074	-	888	9	897
2013	1	615	-	615	-	518	3	521
2014	-	1,206	0	1,206	-	1,132	4	1,136
2015	-	1,452	0	1,452	-	1,252	10	1,262
2016	-	185	0	185	-	145	2	147
2017	-	-	0	0	-	-	1	1
2018	-	-	11	11	-	-	21	21
2019	-	-	0	0	-	-	7	7
2020	-	-	0	0	-	-	4	4
2021	-	-	-	-	-	-	1	1
<b>총액</b>	<b>2,550</b>	<b>7,090</b>	<b>13</b>	<b>9,653</b>	<b>713</b>	<b>7,420</b>	<b>1,028</b>	<b>9,161</b>

※ 반올림으로 연도별 반입/반출 유형별 '소계'와 반입/반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교역액 1백만 달러 미만은 '0'으로, 없을 경우 '-'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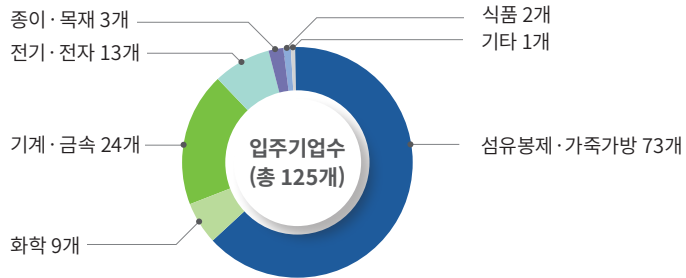
### 3] 개성공단사업 현황

※ 개성공단 통계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2016.2.10.)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작성

#### ① 개성공단 입주 기업수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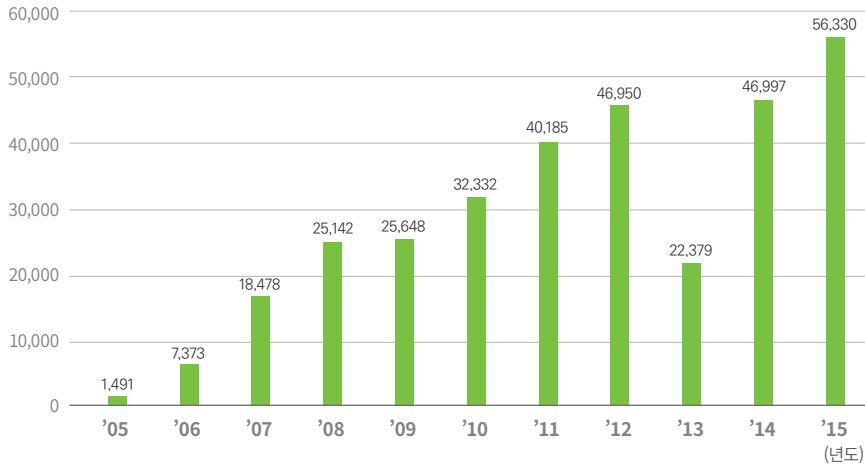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입주 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125	125



#### ②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단위: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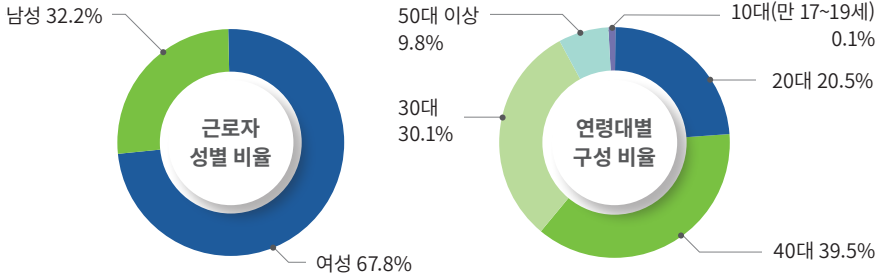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9	46,997	56,330	323,305



### ③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북한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54,988



학력분포(%)			평균연령(세)		
대졸	전문학교	중졸	전체	남	여
8.1	7.1	84.8	39.0	42.3	36.4

연령대별(%)					성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0.1	20.5	30.1	39.5	9.8	32.2	67.8

####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 ①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정부차원						민간차원 (무상)C	총 지원액 (A+B+C)
	무상지원				식량차관B	지원액 A+B		
	당국차원 (a)	민간단체 기금지원 (b)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c)	지원액 A(a+b+c)				
1995	1,854	-	-	1,854	-	1,854	2	1,856
1996	-	-	24	24	-	24	12	37
1997	-	-	240	240	-	240	182	422
1998	-	-	154	154	-	154	275	429
1999	339	-	-	339	-	339	223	562
2000	944	34	-	978	1,057	2,035	386	2,421
2001	684	63	229	976	-	976	782	1,757
2002	832	65	243	1,140	1,510	2,650	578	3,228
2003	811	81	205	1,097	1,510	2,607	766	3,373
2004	949	102	262	1,313	1,359	2,672	1,558	4,231
2005	1,221	120	19	1,360	1,787	3,147	780	3,926
2006	2,000	133	139	2,272	-	2,272	709	2,982
2007	1,428	220	335	1,983	1,505	3,488	909	4,397
2008	-	241	197	438	-	438	726	1,164
2009	-	77	217	294	-	294	377	671
2010	183	21	-	204	-	204	201	405
2011	-	-	65	65	-	65	131	196
2012	-	-	23	23	-	23	118	141
2013	-	-	133	133	-	133	51	183
2014	-	-	141	141	-	141	54	195
2015	-	23	117	140	-	140	114	254
2016	-	1	1	2	-	2	28	30
2017	-	-	-	-	-	-	11	11
2018	12	-	-	12	-	12	65	77
2019	-	-	106	106	-	106	170	277
2020	-	7	118	125	-	125	23	149
2021	-	5	-	5	-	5	26	31
<b>총액</b>	<b>11,258</b>	<b>1,192</b>	<b>2,969</b>	<b>15,419</b>	<b>8,728</b>	<b>24,147</b>	<b>9,258</b>	<b>33,404</b>

※ 세부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합계에서 차이 발생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건/명)

구분 연도	민간 차원				당국 차원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1985	-	-	-	-	65 (157)	-	30 (81)	35 (76)	-
1990	35	44	-	6	-	-	-	-	-
1991	127	193	-	11	-	-	-	-	-
1992	132	462	-	19	-	-	-	-	-
1993	221	948	-	12	-	-	-	-	-
1994	135	584	-	11	-	-	-	-	-
1995	104	571	-	17	-	-	-	-	-
1996	96	473	-	18	-	-	-	-	-
1997	164	772	-	61	-	-	-	-	-
1998	377	469	-	109 (2)	-	-	-	-	-
1999	481	637	-	200 (18)	-	-	-	-	-
2000	447	984	-	152 (392)	792 (5,276)	39 (39)	201 (1,720)	202 (674)	-
2001	208	579	-	170 (493)	744 (4,937)	623 (623)	100 (899)	100 (343)	-
2002	198	935	-	208 (616)	261 (1,635)	9 (9)	-	398 (1,724)	-
2003	388	961	-	283 (677)	963 (7,091)	8 (8)	-	598 (2,691)	-
2004	209	776	-	188 (470)	681 (5,007)	-	-	400 (1,926)	-
2005	276	843	-	95 (261)	962 (6,957)	-	-	397 (1,811)	199 (1,323)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민간 차원				당국 차원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2006	69	449	-	54 (105)	1,069 (8,314)	-	-	594 (2,683)	80 (553)
2007	74	413	-	55 (167)	1,196 (9,121)	-	-	388 (1,741)	278 (1,872)
2008	50	228	-	36 (97)	-	-	-	-	-
2009	35	61	-	23 (51)	302 (2,399)	-	-	195 (888)	-
2010	16	15	-	7 (18)	302 (2,176)	-	-	191 (886)	-
2011	3	21	-	4 (14)	-	-	-	-	-
2012	6	16	-	3 (6)	-	-	-	-	-
2013	9	22	-	3 (5)	316 (2,342)	-	-	-	-
2014	6	11	-	5 (10)	-	-	-	170 (813)	-
2015	4	26	-	1 (4)	317 (2,155)	-	-	186 (972)	-
2016	6	43	-	3 (8)	-	-	-	-	-
2017	10	46	1	1 (2)	-	-	-	-	-
2018	7	36	1	1 (1)	292 (1,996)	-	-	170 (833)	-
2019	2	16	-	1 (1)	-	-	-	-	-
2020	-	4	-	-	-	-	-	-	-
2021	-	-	-	-	-	-	-	-	-
<b>계</b>	<b>3,895</b>	<b>11,638</b>	<b>2</b>	<b>1,757 (3,418)</b>	<b>8,262 (59,563)</b>	<b>679 (679)</b>	<b>331 (2,700)</b>	<b>4,024 (18,061)</b>	<b>557 (3,748)</b>

※ 기타: 성묘 방북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 5 남북회담 추진 현황

###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회)

구분 \ 연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정치	156	4	10	-	-	-	2	5	18	2	4	5	2	10
군사	-	-	-	-	-	-	-	-	4	2	9	6	5	3
경제	5	-	-	-	-	-	-	-	3	3	14	17	13	11
인도	111	-	-	3	-	4	1	-	2	1	3	7	2	4
사회·문화	34	-	-	-	-	-	-	-	-	-	2	1	1	6
<b>합계</b>	<b>306</b>	<b>4</b>	<b>10</b>	<b>3</b>	<b>-</b>	<b>4</b>	<b>3</b>	<b>5</b>	<b>27</b>	<b>8</b>	<b>32</b>	<b>36</b>	<b>23</b>	<b>34</b>

구분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합계
정치	5	13	-	-	-	-	-	1	2	3	-	19	-	261
군사	4	11	2		1	1	-	-	1	-	-	4	-	53
경제	8	22	3	4	3	-	-	22	3	1	-	4	-	136
인도	3	3	-	2	4	-	-	1	1	1	-	2	-	155
사회·문화	3	6	1	-	-	-	-	-	1	-	-	7	-	62
<b>합계</b>	<b>23</b>	<b>55</b>	<b>6</b>	<b>6</b>	<b>8</b>	<b>1</b>	<b>-</b>	<b>24</b>	<b>8</b>	<b>5</b>	<b>-</b>	<b>36</b>	<b>-</b>	<b>667</b>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 4차 회담 12회('97년 7회, '98년 2회, '99년 3회)를 별도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년도 통계에서 제외

###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현황

(단위: 건)

구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합의서 건수	40	-	2	1	-	2	1	1	18	4	23	31	20	23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합계
합의서 건수	10	39	5	1	1	-	8	2	3	-	23	-	258

※ 2019년 합의서 재분류에 따라 연도별 합의서 건수 조정

##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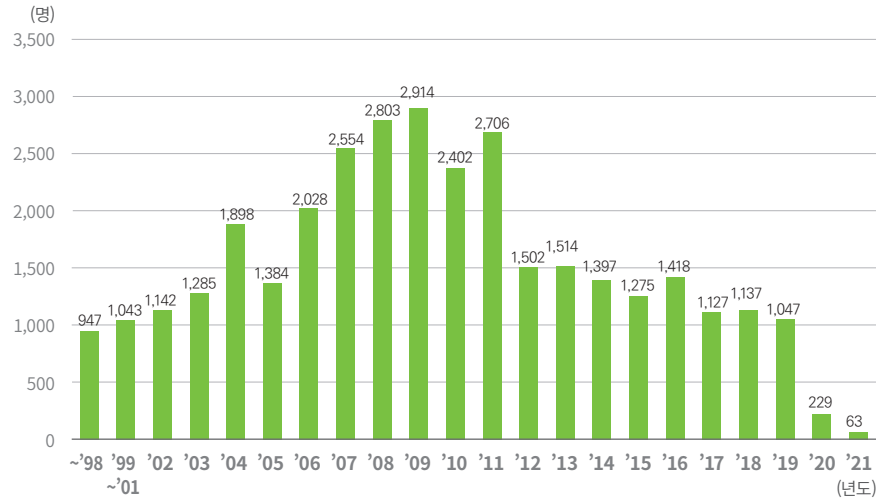
### ① 북한이탈주민 입국 세부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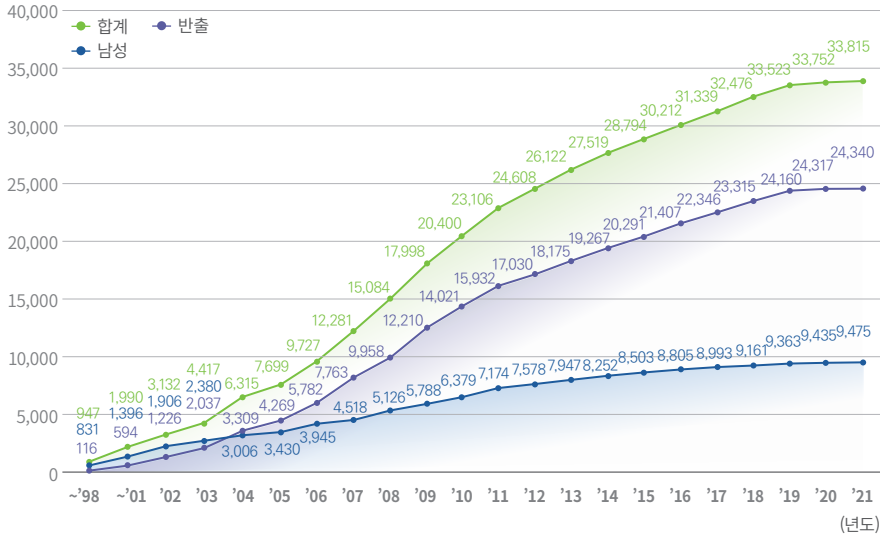
구분 \ 연도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남성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여성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b>합계</b>	<b>947</b>	<b>1,043</b>	<b>1,142</b>	<b>1,285</b>	<b>1,898</b>	<b>1,384</b>	<b>2,028</b>	<b>2,554</b>	<b>2,803</b>	<b>2,914</b>	<b>2,402</b>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남성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b>9,475</b>
여성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b>24,340</b>
<b>합계</b>	<b>2,706</b>	<b>1,502</b>	<b>1,514</b>	<b>1,397</b>	<b>1,275</b>	<b>1,418</b>	<b>1,127</b>	<b>1,137</b>	<b>1,047</b>	<b>229</b>	<b>63</b>	<b>33,815</b>
여성 비율	71%	73%	76%	78%	80%	79%	83%	85%	81%	69%	37%	<b>72%</b>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센터 입소 기준으로 집계



### 입국인원 누계



(2021.12월 말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51	1,703	2,623	2,154	1,390	583	352	9,456
여	646	2,105	6,967	7,548	4,603	1,457	995	24,321
<b>합계</b>	<b>1,297</b>	<b>3,808</b>	<b>9,590</b>	<b>9,702</b>	<b>5,993</b>	<b>2,040</b>	<b>1,347</b>	<b>33,777</b>
비율	3.8%	11.3%	28.4%	28.7%	17.7%	6.0%	4.0%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2021.12월 말 기준)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아동·학생 등	계
남	411	719	4,161	3,215	92	84	232	542	9,456
여	140	161	9,208	11,952	1,451	221	526	662	24,321
<b>합계</b>	<b>551</b>	<b>880</b>	<b>13,369</b>	<b>15,167</b>	<b>1,543</b>	<b>305</b>	<b>758</b>	<b>1,204</b>	<b>33,777</b>
비율	1.6%	2.6%	39.6%	44.9%	4.6%	0.9%	2.2%	3.6%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 학력별 입국자 현황

(2021.12월 말 기준)

구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소학교 (인민 학교)	중학교 (초급, 고급)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복)	기타 (불상 등)	계
남	418	136	804	5,732	854	1,117	361	34	9,456
여	404	215	1,497	17,715	2,675	1,215	515	85	24,321
<b>합계</b>	<b>822</b>	<b>351</b>	<b>2,301</b>	<b>23,447</b>	<b>3,529</b>	<b>2,332</b>	<b>876</b>	<b>119</b>	<b>33,777</b>
비율	2.4%	1.0%	6.8%	69.4%	10.4%	6.9%	2.6%	0.4%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해당 학력별 재학·중퇴자는 포함

## 출신 지역별 입국자 현황

(2021.12월 말 기준)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남	223	75	1,555	76	458	377	468
여	375	89	4,450	163	655	507	338
<b>합계</b>	<b>598</b>	<b>164</b>	<b>6,005</b>	<b>239</b>	<b>1,113</b>	<b>884</b>	<b>806</b>
비율	1.8%	0.5%	17.8%	0.7%	3.3%	2.6%	2.4%

구분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불상등)	계
남	776	4,849	270	185	46	98	9,456
여	2,104	14,988	203	284	33	132	24,321
<b>합계</b>	<b>2,880</b>	<b>19,837</b>	<b>473</b>	<b>469</b>	<b>79</b>	<b>230</b>	<b>33,777</b>
비율	8.5%	58.7%	1.4%	1.4%	0.2%	0.7%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②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직업교육 실적									
	수료 인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1,002	843	1,018	785	904	807	726	788	260	38
남성	361	254	262	168	198	150	116	165	97	31
계	1,363	1,097	1,280	953	1,102	957	842	953	357	69

(단위: 명)

탈북아동·청소년 교육생 수료 현황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유치반	19	53	54	63	70	69	42	38	28	28	25	36	20	23	7	-	575
초등반	97	104	107	142	118	179	124	97	87	49	46	43	49	57	19	1	1,319
청소년반	169	232	276	220	192	198	114	106	90	68	86	116	108	105	52	3	2,135

(단위: 명)

구분	심화교육			직무교육	
	과정수	수료	자격증 취득	과정수	수료
2014년	5	103	85	11	440
2015년	6	117	72	10	521
2016년	8	247	206	8	315
2017년	7	291	251	7	290
2018년	7	335	292	8	305
2019년	7	385	314	8	247
2020년	3	18	18	4	28
2021년	6	37	36	4	128

※ 화천 분소 심화교육 운영 종료('20.5.8. 남북하나재단으로 업무 이관)

③ 주택 알선 현황

(단위: 세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세대수	1,815	1,320	1,027	1,232	969	1,096	1,044	868	1,062	438	97	10,968

④ 정착금 지급 현황

정착금 지급 세부 기준			(단위 : 만 원)	
구분	기준		금액	
기본금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 분할지급금은 분기별로 3회 지급	1인(초기 500, 분할 300)	800	
		2인(초기 700, 분할 700)	1,400	
		3인(초기 900, 분할 1,000)	1,900	
		4인(초기 1,100, 분할 1,300)	2,400	
		5인(초기 1,300, 분할 1,600)	2,900	
		6인(초기 1,500, 분할 1,900)	3,400	
		7인 이상(초기 1,700, 분할 2,200)	3,900	
주거 지원금	1인		1,600	
	2~4인		2,000	
	5인 이상		2,300	
지방거주 장려금	1인	㉠ 지역	160	
		㉡ 지역	320	
	2~4인	㉠ 지역	200	
		㉡ 지역	400	
	5인 이상	㉠ 지역	230	
		㉡ 지역	460	
정착장려금 (2013.4.30. 이후 사회 진출자)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미만	미지급
			500시간	120
			500시간~740시간	120시간당 20 (최대 160)
	추가 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자격취득 장려금	1회에 한정		200
	취업장려금	6개월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차	(수도권) 500	(지방) 600
2년차		(수도권) 600	(지방) 700	
3년차		(수도권) 700	(지방) 800	
총액(최고액)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가산금	고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800
	장애 가산금	장애정도	중증	1,540
			경증	360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입원 시 최대 9개월 지급		1개월에 80 지급 (최대 9개월)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400(세대당)	



구분		기준	금액
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	만 16세 미만 제3국 출생 자녀 (2명 이내)	450(1인당)
고용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지급	임금의 1/2, 월 50만 원 한도,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연 600 (최고 2,400)

\* 2014.11.29. 이후 입국자부터 미래행복통장 제도 적용으로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 지원제도 폐지

\*\*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 분할 지급

**기본금 지급 현황** (단위: 명/백만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원	2,417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1,015	1,125	446	74
기본금	13,815	12,167	9,173	9,429	7,609	8,277	8,612	6,574	8,267	4,723	921

**주거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명/백만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원	2,417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1,015	1,125	446	74
주거 지원금	26,997	25,516	21,454	23,288	19,530	19,983	18,201	16,880	18,824	9,934	4,809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명/백만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원	369	744	752	555	420	443	353	414	352	201	212
지급액	805	2,323	1,806	1,172	857	952	721	828	678	511	541

##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 원)

구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		총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1	726	1,181	819	1,638	352	704	2,406	11,813	<b>4,303</b>	<b>15,336</b>
2012	1,118	1,916	1,472	2,944	496	992	3,455	17,204	<b>6,541</b>	<b>23,056</b>
2013	774	1,221	952	1,904	266	532	3,304	16,608	<b>5,296</b>	<b>20,265</b>
2014	706	1,082	879	1,757	181	362	3,631	18,238	<b>5,397</b>	<b>21,439</b>
2015	516	753	733	1,466	135	270	2,844	14,272	<b>4,228</b>	<b>16,761</b>
2016	252	360	455	910	64	128	2,483	12,078	<b>3,254</b>	<b>13,477</b>
2017	98	137	202	404	12	24	2,092	10,024	<b>2,404</b>	<b>10,589</b>
2018	61	82	131	262	14	28	1,720	8,021	<b>1,926</b>	<b>8,393</b>
2019	33	46	46	92	11	22	1,620	7,542	<b>1,710</b>	<b>7,702</b>
2020	3	4	5	10	-	-	1,482	7,048	<b>1,490</b>	<b>7,062</b>
2021	2	3	2	4	1	2	1,424	7,497	<b>1,429</b>	<b>7,506</b>

## 가산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산금	장애	315	243	212	140	110	80	46	135	130
	고령	671	795	658	602	457	327	279	205	206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568	717	631	570	475	385	318	218	147
	장기치료	57	40	43	29	10	10	5	19	10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	-	-	-	-	79	223	394
<b>계</b>	<b>1,611</b>	<b>1,795</b>	<b>1,544</b>	<b>1,341</b>	<b>1,052</b>	<b>802</b>	<b>727</b>	<b>800</b>	<b>887</b>	

##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개/명/백만 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체수	2,915	2,824	2,659	2,670	2,084	1,552	964	552	245	77
인원	3,976	4,206	3,966	3,501	2,679	1,872	1,089	612	269	81
지급액	15,335	15,742	14,615	13,304	10,268	7,393	4,299	2,346	978	277

(단위 : 개/명/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학수	183	200	253	218	239	232	231	235	227	230
인원	1,570	1,704	1,894	2,006	1,934	1,844	1,885	1,889	1,938	1,944
지급액	3,294	3,747	4,212	4,555	4,216	4,120	4,154	4,329	4,410	4,855

## 7 국립통일교육원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년 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518,831	32,039	71,944	68,946	119,736	133,284	185,194	97,83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인원	145,363	161,677	169,096	557,096	718,233	838,778	1,009,203	4,827,250

\* 2018년부터 원외 교육에 사회통일교육 실시 현황 포함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으로 시행(2018.9.14.) 된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2019년부터 본격 실시, 상기 교육 현황과는 별도 집계(2019년 665,483명, 2020년 887,608명 교육 참여)

## 8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수인원	3,401	38,226	39,565	38,242	39,999	23,289	5,814	1,986	190,522



#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 1 기금 조성 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 조성액
1991	25,000	-	-	237	<b>25,237</b>
1992	40,000	-	-	5,118	<b>45,118</b>
1993	40,000	3	-	4,778	<b>44,781</b>
1994	40,000	1	-	9,387	<b>49,388</b>
1995	240,000	119	-	14,589	<b>254,708</b>
1996	100,000	132	-	18,409	<b>118,541</b>
1997	50,000	288	-	27,874	<b>78,162</b>
1998	-	-	-	40,280	<b>40,280</b>
1999	-	3	149,831	23,013	<b>172,847</b>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b>385,787</b>
2001	500,000	1,079	310,000	29,406	<b>840,485</b>
2002	490,000	77	505,000	42,036	<b>1,037,113</b>
2003	300,000	1	823,000	46,515	<b>1,169,516</b>
2004	171,400	1	310,000	38,371	<b>519,772</b>
2005	500,000	33	460,000	31,178	<b>991,211</b>
2006	650,000	15	940,000	36,619	<b>1,626,634</b>

연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 조성액
2007	500,000	75	584,591	38,859	<b>1,123,525</b>
2008	650,000	52	147,500	49,274	<b>846,826</b>
2009	-	56	81,000	74,354	<b>155,410</b>
2010	-	-	875,000	51,238	<b>926,238</b>
2011	-	2	104,400	38,276	<b>142,678</b>
2012	112,800	2	400,000	51,236	<b>564,038</b>
2013	105,500	3	530,000	162,300	<b>797,803</b>
2014	93,400	-	228,600	47,304	<b>369,304</b>
2015	93,203	238	90,500	19,863	<b>203,804</b>
2016	92,500	1	207,000	27,399	<b>326,900</b>
2017	183,000	1	765,000	9,631	<b>957,632</b>
2018	63,711	11	278,400	12,153	<b>354,275</b>
2019	100,000	-	203,000	6,574	<b>309,574</b>
2020	150,000	11	548,600	22,524	<b>721,135</b>
2021	100,000	100	237,000	4,711	<b>341,811</b>
<b>합계</b>	<b>5,490,513</b>	<b>2,844</b>	<b>9,033,274</b>	<b>1,013,900</b>	<b>15,540,532</b>

## 2 기금 사용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주민왕래지원	-	-	-	-	-	-	-	-	-	3
문화·학술·체육협력	9	-	-	-	-	-	-	0.3	-	21
이산가족	-	6	-	-	-	-	-	0.1	4	28
인도적 지원(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977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867
남북경제협력(무상)	13	-	-	-	-	49	-	-	-	146
남북경제협력(유상)	-	-	-	-	-	-	-	675	-	5
경수로 대출	-	-	-	-	-	-	-	-	-	3,259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	-	-	-	-	-	-	-	-	190
원금상환	-	-	-	-	-	-	-	-	-	-
이자상환	-	-	-	-	-	-	-	-	-	190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3
<b>합계</b>	<b>25</b>	<b>9</b>	<b>3</b>	<b>3</b>	<b>1,826</b>	<b>106</b>	<b>193</b>	<b>876</b>	<b>345</b>	<b>5,499</b>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주민왕래지원	3	237	11	11	38	53	17	27	-	-
문화·학술·체육협력	1	-	7	32	75	74	69	38	30	21
이산가족	13	20	30	32	133	99	269	182	22	20
인도적 지원(무상)	976	1,226	1,501	1,225	1,866	2,125	2,272	597	294	192
인도적 지원(유상)	190	967	1,561	1,020	1,793	39	1,405	-	-	-
남북경제협력(무상)	898	368	763	760	2,045	1,521	1,725	1,101	415	177
남북경제협력(유상)	461	667	547	814	568	710	1,400	366	240	453
경수로 대출	3,003	3,009	3,287	870	227	89	-	-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391	2,124	3,250	3,895	3,658	8,713	6,337	1,512	1,159	9,306
원금상환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100	8,200
이자상환	391	626	701	795	838	983	1,007	1,012	1,059	1,106
기금관리비	5	6	8	12	16	18	19	21	39	29
<b>합계</b>	<b>5,941</b>	<b>8,624</b>	<b>10,965</b>	<b>8,671</b>	<b>10,419</b>	<b>13,441</b>	<b>13,513</b>	<b>3,844</b>	<b>2,199</b>	<b>10,198</b>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주민양래지원	-	-	-	5	-	-	1	25	-	-	-	431
문화·학술·체육협력	26	23	21	28	61	23	36	75	37	42	34	768
이산가족	1	4	21	31	52	16	7	51	44	12	23	1,121
인도적 지원(무상)	102	24	132	148	122	7	13	27	314	139	17	16,903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	-	7,842
남북경제협력(무상)	167	421	2,037	441	283	4,489	600	1,914	329	223	215	21,102
남북경제협력(유상)	130	221	746	223	36	760	27	26	26	26	23	9,148
경수로 대출	-	-	-	-	-	-	-	-	-	-	-	13,744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1,086	5,161	6,388	3,882	1,836	2,982	8,470	3,420	2,610	6,056	2,831	85,258
원금상환	-	4,000	5,300	2,91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67,338
이자상환	1,086	1,161	1,088	966	931	912	820	636	580	570	461	17,920
기금관리비	27	28	30	30	30	26	25	28	23	23	23	492
<b>합계</b>	<b>1,539</b>	<b>5,882</b>	<b>9,375</b>	<b>4,788</b>	<b>2,420</b>	<b>8,303</b>	<b>9,179</b>	<b>5,565</b>	<b>3,384</b>	<b>6,522</b>	<b>3,166</b>	<b>156,823</b>

※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 개별 합계액은 반올림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I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대과제	실천과제	주요내용
국정과제 90번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1.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①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체계 구축 운영 ② 국제사회 지지 확보(계속) 및 현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통해 협력의 환경 조성
	2.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①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계적 실행 ②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3. 남북경협 재개	①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 ② 민간경협 재개 ③ 개성공단 재가동 ④ 금강산 관광 등 관광협력 재개 여건 조성 및 재개 ⑤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⑥ 남북 ICT 교류·협력 ⑦ 국제금융기구 및 주변국 협력 강화
	4. 남북접경지역 발전	① 「DMZ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및 이행 ②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③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5. 남북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 구현	① 보건의료협력 추진 ② 가속전염병 공동 대응 등 방역협력 추진 ③ 공유하천 공동관리 ④ 남북 산림협력 추진 ⑤ 남북 농어업 협력 추진
국정과제 91번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1.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① 남북대화 재개 ② 분야별 실무회담 등 남북대화 본격 추진 ③ 남북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2. 남북기본협정 체결	① 남북기본협정 추진체계 운영 및 남북관계 비전 천명 ② 남북기본협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③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

대과제	실천과제	주요내용
국정과제 92번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1.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및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②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③ 북한인권 관련 사례 축적 및 법적 쟁점 연구 ④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및 국민들의 북한인권 인식 향상 노력 ⑤ 북한인권재단 출범
	2.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추진	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 ②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 공여 및 국제협력 추진 ③ 당국 차원의 지원 추진
	3.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①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및 상봉방식 다각화 ②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교류 기반 구축 ③ 국군포로·납북자·역류자 문제 해결 추진
	4.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지원	① 탈북민 지원체계 효율화 ②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③ 탈북민-지역주민간 소통강화
국정과제 93번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1. 교류협력 재개	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재개 추진 ②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체육교류 활성화 추진 ③ 민간단체 교류협력 역량 강화 지원
	2.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① 다면적이고 융합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 ②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적극 지원
	3.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①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②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 기반
	4. 교류협력 제도 개선	①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② 교역·경협보험 제도 개선
	5.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추진	① 남북 간 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② 범정부 협의체 구성 ③ 남북 공동유치위 구성·운영 ④ 국내외 지지·협력 기반 조성
국정과제 94번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 협약 추진	1.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대북정책 지속성 확보 ②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방안 연구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대과제	실천과제	주요내용
<b>국정과제 94번</b>  <b>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 협약 추진</b>	2. 광역지자체별 통일 센터 설치 추진	① 통일센터를 통한 통일 관련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② 시범통일센터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추가 설치 추진
	3. 평화통일 관련 차세대 전문가 양성	①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으로 통일미래대비 역량 강화 ② 주변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 양성으로 네트워크 구축 ③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확대
	4.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① 통일교육 방향 및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② 청소년들의 긍정적 통일인식 형성을 위한 학교통일교육 확대 ③ 대학사회 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대학생 통일 무관심 해소 ④ 범국민 통일공감 확산 추진 ⑤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통일교육 자료 개발·배포

## V

## 찾아보기(INDEX)

\*영어와 숫자는 한글 발음으로 정리

## ㄱ

개발원조위원회(DAC)	124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60, 75
개성공단기업협회	9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96, 100
개성공단	95
겨레말큰사전	7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4
9·19 군사합의	20, 6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62
국립6·25전쟁남북자기념관	11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61
국제원자력기구(IAEA)	23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48, 122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48, 122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65
금강산 관광	68

## 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5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54
남북교류협력	6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6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7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106

남북기본합의서	50
남북통합문화센터	156
남북철도·도로	65
남북하나재단	184
남북회담	150
남북협력기금	255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256

## ㄷ

대한적십자사	123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121
동아시아정상회의(EAS)	23
DMZ 평화의 길	86

## ㄹ

미래행복통장	179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21
민주평통자문위원	205

ㅂ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5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15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9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192
북한인권재단	137
북한인권정책협의회	136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13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136
북한인권법	136
북한자료센터	247
북한정보포털시스템	246

ㅅ

사이버 통일교육	207
사회적 대화	27
사회통일교육	227
생명·안전공동체	61
세계식량계획(WFP)	118
세계보건기구(WHO)	118

ㅇ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2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61
5·24 조치	71
유엔인권이사회(UNHRC)	138
6·15 남북공동선언	78
6·25전쟁납북자기념관	113
이산가족	128

이산가족 영상편지	129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128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127
이산가족 화상상봉	127
인도협력 민간정책협의회	121
인천통일*센터	35

ㅈ

자발적 국가 검토보고서(VNR)	82
종전선언	2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103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124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154
지역통일교육센터	227
G20 정상회의	55
G7 정상회의	23

ㅊ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14
-------------------------	----

ㅋ

통일관	231
통일교육 선도대학	224
통일교육센터	227
통일교육 협력대학	225

통일교육 시행계획	218
통일교육위원	229
통일교육주간	215
통일교육지원법	227
통일교육위원협의회	230
통일교육협의회	230
통일국민협약	27
통일경제특별구역	71
통일방송(UniTV)	43
통일법제추진위원회	245
통일비전시민회의	26
통일*센터	35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116
한반도 정책	17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4
한반도 평화 법안	25
한반도통일미래센터	236

## II

판문점견학지원센터	89
판문점선언	64, 126
평양공동선언	126
평화공공외교협력단	55
평화공공외교협의회	56
평화통일경제특구	71
평화·통일교육 연구센터	219
포괄적핵심협금지조약(CTBT)	273

## III

하나센터	194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7
한국통일외교협회	57
학교통일교육	201
한독통일자문위원회	49
한미연합훈련	20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	50





# 2022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인쇄일** 2022년 3월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처** 통일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42  
**팩스** 02-2100-5679

